

정책연구 2020-16

전북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방안

연구진 조경옥 · 전아람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0-16

전북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 조경옥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전아람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김홍주 · 원광대학교 교수
이혜숙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심인선 ·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20JU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개요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재정 자립도,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제반 시설, 단체장의 인구정책 의지 등 지역의 역량과 한계에는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각 지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연구에서 전북은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인구 구성 등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출산과 양육의 핵심계층인 2040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염두에 두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북의 출산환경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환경 특성에 근거한 차별화 된 출산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일·가정양립, 일과 주거, 가치관 등 각 영역에서 전북의 2040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정책요구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전북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관련 핵심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결과는 2040세대의 정책욕구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로 출산을 제고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과 더불어 향후 제4차 전북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라북도의 출산정책수립 여건과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임

나.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연구추진체계 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본계획의 재구조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방향 등에 관해 살펴봄. 또한 저출산과 관련하여 2040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등 주요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함
- 제3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출산환경 및 여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통계와 문헌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인구 및 인구이동, 결혼과 출산 현황, 양육 및 일·가정 양립 등의 현황을 살펴 봄. 또한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저출산 추진시책을 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하여 정책 추진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 2040세대의 결혼 및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분석함. 또한 통계자료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2040세대의 인식과 태도, 정책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2장의 저출산과 관련된 2040세대의 일반적인 특성, 3장의 전북의 출산환경 및 정책여건의 특성, 제4장의 전북 2040세대의 저출산에 관한 인식과 태도 및 정책욕구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북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이에 부합하는 세부시책 등을 발굴·제언함

다. 연구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결혼·출산 동향 및 영향요인, 출산친화 환경조성 관련 논문, 자료집, 단행본, 정책 보고서 검토
- 국내 타 지자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 수집·분석
- 2020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유형별 현황 및 특성 분석

○ 각종 통계자료 및 원자료 분석

- 영역별 출산친화환경에 대한 통계청 및 부처별 자료 분석 :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통계, 주거실태조사, 사회조사 등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전북의 현황 및 특징 파악
-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2040세대(미혼남녀/기혼여성)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의식과 태도, 양육 및 일·가정양립 실태 파악

○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결혼 전(미혼), 결혼 후~첫째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현재 임신 중인 부부 포함), 자녀출산 후 양육기의 3그룹으로 구분하여 총 24명
- 조사방법 :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서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함. 사전 이메일 조사 후 응답이 미흡한 부분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조사로 보완함
- 조사내용 : 결혼·출산·자녀 및 가족형성 등에 관한 인식과 태도, 전망, 지역사회 출산·양육 환경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정책육구, 신규사업 제안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방향, 심층면접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착수 및 최종연구심의회 등을 통해 전공분야 교수, 연구자의 자문을 받아 연구에 반영함
- 정책방향 및 세부시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책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현장가, 시군 담당공무원과 간담회 등을 4회 추진함

II.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과제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북의 저출산 심화 가속화
 - 전북의 초혼인율은 2018년 기준 남편은 8.9%, 아내는 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2019년 전북의 출생아 수는 8,971명으로 2000년(출생아 수 25,173명) 대비 약 64.4% 감소하여 전국 감소율(52.7%)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전북 인구구조의 특성과 출산 관련 인구수의 빠른 변화로 '출산감소 고위험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 구성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인구정책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2040세대 등 젊은 인구유입과 유출 억제에 위해 일자리 및 주택지원 정책 추진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고연령산모 증가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 2019년 기준 전북의 출산연령은 32.37세로 2000년 출산연령인 28.48세보다 3.89세 증가함(동 기간 전국은 3.98세 증가). 30~34세와 35세~39세의 출산율은 초혼연령 증가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타 지역보다 초혼연령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고연령 산모도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북 현실을 반영하여 고위험 임신부의 모성보호와 임신·출산 부담경감을 위한 시책추진이 필요함
- 모자보건인프라 축소 및 붕괴로 지역간·계층간 서비스 격차 발생
 - 전라북도도는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산부인과 전문의 비중이 낮고 7번째로 소아과 전문의 비중이 낮음. 산후조리원은 현재 15개소로 전국의 2.9%에 해당하고 있어 시설부족과 지역편중으로 인해 군 단위 산모들의 이용은 매우 제한적임
 - 지역의 저출산 현상은 모자보건 인프라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시설과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도농간의 지역격차발생과 소득격차에 따른 서비스도 위계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인프라·서비스의 분배와 확충,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정책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 2040세대의 생애이행단계별 특성과 정책욕구

- 전북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의 비율이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전북 남녀의 긍정적 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 당시 주택마련 유형과 관련해서 전북은 전세비율이 낮은 가운데(전북 37.3%, 전국 48.9%) 자가 비율은 낮고(전북 22.4%, 전국 23.4%) 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전북 20.8%, 전국 13.6%)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이 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함
- 취학 전(만 0세~6세) 자녀의 돌봄을 희망하는 시설로는 국공립(44.2%)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돌봄 유형은 민간시설(64.8%)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희망 돌봄 시설 대비 실제 돌봄 시설 일치도에 있어 국공립시설은 28.6%에 불과하여 국공립시설 등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심층면접조사 결과, 보육시설 인프라와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크지만,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부족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이나 야간근무, 부모의 질병, 어린이집 휴원, 초등 저학년 돌봄공백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틈새수요가 발생하지만 대응 서비스가 없어 결국은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 광역과 기초지자체 사업 통합으로 정책체감도와 효과 제고 필요

- 전라북도 저출산 지원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이 지자체별로 사업명을 달리하여 수행되고 있고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지자체별로 정책수혜 조건이나 지원내용에 있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편임(예로서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 출산축하용품지원 등)
- 임신·출산지원 사업은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책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임신 전→임신→출산 전→출산 후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정책체감도도 높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각 시군에서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광역화(통합관리)하여 예산과 지원 대상의 규모를 체계화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른 서비스를 표준화함으로써 정책인지도와 만족도,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있음

○ 2040세대의 성 평등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제고: 인구교육 내실화

- 심층면접에 참여한 20대들은 30대들이 느끼는 직장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상황을 목도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희망보다는 학생과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유보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음
- 이러한 인식에서도 남녀 간, 계층 간의 인식차이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직장, 가족, 지역사회의 인식격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성별·계층별·지역별 인식의 격차를 완화하고 성 평등한 결혼과 돌봄 문화를 조성을 위해서는 성인 대상의 사회인구교육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 성인 대상의 사회인구교육은 기존의 출산의무를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구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인구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조화롭고 건강한 부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이해와 형성을 목표(양정선, 2011)로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아울러 사회인구교육 전문가 양성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됨

○ 생애과업 이행 관점 결여와 청년 생애주기의 정책통합 필요

- 인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정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청년 및 신혼부부 정책은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도 저출산 정책의 분절로 인한 정책 체감도와 효과가 미진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음
- 미혼 청년이 결혼이행으로 유배우 청년이 되고, 육아기의 부모가 되지만 현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생애과업 이행과 저출산 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과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 관점을 도입하고 각 생애에 따른 과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2.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 과제

- 주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①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넋지적 정책추진 ②임산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③저출산 사업 통합관리로 정책체감도 향상 ④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⑤인식개선 등 5개 방향으로 구분함
- 전라북도 2040세대의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정책방향	세부사업	기존 확대	신규 사업
① 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넋지적 정책추진	전북형 청년친화강소 기업 운영 및 지원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청춘남녀 자원봉사단 운영		✓
② 임산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사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도개선(중앙)	✓	
	고위험 임신부의 가사돌봄 지원		✓
③ 저출산사업 통합관리로 정책체감도 향상	임신축하 패키지 사업		✓
	신생아환영꾸러미[출산패키지]사업		✓
④ 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긴급 육아돌봄 지원 : 육아지원 119		✓
	육아대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⑤ 인식개선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의 개정	✓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절차	7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9
1.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1
2. 저출산과 2040세대의 특징	19
제3장 전라북도 출산환경 및 정책분석	25
1. 인구 및 인구이동	27
2. 결혼 및 출산	34
3. 양육 및 일·가정양립	53
4.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정책분석	69
5. 요약 및 시사점	83
제4장 전라북도 출산환경 인식과 요구 분석	89
1. 2040세대의 저출산 인식 및 정책욕구	91
2. 요약 및 시사점	119
제5장 전라북도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27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129
2. 세부 추진과제	140
참고문헌	163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1
〈표 2-2〉 저출산 대책 핵심과제 추진방안 주요 내용	15
〈표 3-1〉 17개 시도 인구 현황(2019)	27
〈표 3-2〉 전국 및 전북 성별 인구 증감 추이	28
〈표 3-3〉 전라북도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연령 여성	30
〈표 3-4〉 전라북도 2040세대 인구 이동 추이	31
〈표 3-5〉 전라북도 2040세대 순이동 추이	33
〈표 3-6〉 전국 및 전북 조혼인율	35
〈표 3-7〉 연령별 혼인	37
〈표 3-8〉 전국 및 전라북도 신혼부부 총괄	38
〈표 3-9〉 전라북도 가구별 주택 점유형태 추이	39
〈표 3-10〉 전국 및 전라북도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40
〈표 3-11〉 시도별 전세가격지수	41
〈표 3-12〉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44
〈표 3-13〉 모의 연령별 출산율	45
〈표 3-14〉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47
〈표 3-15〉 전라북도 신혼부부(초혼) 특성별 출산자녀(2018)	48
〈표 3-16〉 전국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원 현황	49
〈표 3-17〉 전국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2018)	50
〈표 3-18〉 전국 산부인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현황(2019)	51
〈표 3-19〉 분만 취약지 현황(2019)	52
〈표 3-20〉 전국 영유아 현황	53
〈표 3-21〉 전라북도 영유아 현황	54
〈표 3-22〉 전국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55
〈표 3-23〉 전라북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56
〈표 3-24〉 전국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57

〈표 3-25〉 전라북도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58
〈표 3-26〉 전라북도 특수 어린이집 현황	59
〈표 3-27〉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60
〈표 3-28〉 전라북도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60
〈표 3-29〉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61
〈표 3-30〉 학교급별 사교육비	62
〈표 3-31〉 교육비에 대한 인식	63
〈표 3-32〉 맞벌이 가구	64
〈표 3-33〉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9)	65
〈표 3-34〉 경력단절여성 규모(2019)	65
〈표 3-35〉 성별 육아휴직자	66
〈표 3-3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66
〈표 3-37〉 가족친화 인증기업(관) 현황(2019)	67
〈표 3-38〉 가사분담 실태	67
〈표 3-39〉 성별 가사노동 시간	68
〈표 3-40〉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68
〈표 3-41〉 전국 출산지원정책 사업개요 : 2018년~2019년	69
〈표 3-42〉 생애단계별 전국 출산지원정책 사업비율: 2018~2019년	70
〈표 3-43〉 2020년 전라북도 및 시군별 저출산 추진사업 현황	71
〈표 3-44〉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현황	72
〈표 3-45〉 결혼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73
〈표 3-46〉 임신출산지원 시책 유형화	74
〈표 3-47〉 육아지원 시책 유형화	76
〈표 3-48〉 가족(일·가정양립지원)시책 유형화 결과	77
〈표 3-49〉 2040세대 삶의 기반 시책 유형화 결과	78
〈표 3-50〉 정책대상 기준 유형별 현황	79
〈표 3-51〉 정책수단 기준 유형별 현황	80
〈표 3-52〉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_전체사업대상	81
 〈표 4-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92

〈표 4-2〉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특성 요약	125
〈표 5-1〉 전라북도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	140
〈표 5-2〉 타 자치단체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144
〈표 5-3〉 도내 시군별 출산패키지 사업	154
〈표 5-4〉 타 자치단체 긴급 육아돌봄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158
〈표 5-5〉 타 자치단체와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비교	162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저출산 대책분야 확장 방향	12
〈그림 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14
〈그림 2-3〉 성 평등한 저출산정책을 위한 기본프레임의 전환	17
〈그림 3-1〉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인구	29
〈그림 3-2〉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구성비 증감 추이	29
〈그림 3-3〉 전라북도 성별 인구이동률	32
〈그림 3-4〉 시도별 조혼인율(2019년)	34
〈그림 3-5〉 성별 초혼연령	36
〈그림 3-6〉 시도별 합계출산율(2019)	42
〈그림 3-7〉 전국 및 전북 합계출산율	42
〈그림 3-8〉 전라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43
〈그림 3-9〉 전국 및 전북 출산연령	46
〈그림 3-10〉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 - 공통사업	82
〈그림 3-11〉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 - 자체사업	82
〈그림 5-1〉 타 자치단체 청춘남녀 자원봉사단 운영 관련 유사사업 현황	147
〈그림 5-2〉 타 자치단체 임산부 가사돌봄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151
〈그림 5-3〉 타 자치단체 임산부 우대금리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153
〈그림 5-4〉 타 자치단체 출산패키지 관련 유사사업 현황	155
〈그림 5-5〉 코로나 19로 인한 육아공백	157
〈그림 5-6〉 타 자치단체 남성의 육아참여프로그램 관련 유사사업 현황	160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지난 2019년 11월 3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 속도는 인구추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2019.11.27.)한 3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73,7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87명이 감소하여 8.3%의 감소율을 보임.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나타냄
 -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통계청 중위추계 전망보다 18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가장 비관적인 저위추계의 예상보다 3년이나 빠른 것으로 보고됨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 하는 작업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인구절벽의 위기감 속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중앙 부처 중심의 전국적·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인구통계와 저출산 시책 연계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재정 자립도,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제반 시설, 단체장의 인구정책 의지 등 지역의 역량과 한계에는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가임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소멸 지수를 산출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는 다수의 연구에서는 지역인구 구조를 전망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유형별 특징에 따른 저출산 정책 방향이 지역에 따라 차별화 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고령화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세수부족으로 자체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며 지자체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임신·출산·양육 등의 인프라 민간부문의 공급은 전반적으로 수요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저출산의 심화는 관련 인프라 규모의 축소, 부재, 통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인구유출, 지역이탈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각 지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연구에서 전북은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20~24세의 여성 비율, 20~44세의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이 모두 낮은 지역에 해당함
- 실제로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2000년(25,173건) 대비 2019년(8,971건)의 출생건 수는 약 64.4% 감소하여 감소 정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인구는 2000년 대비 2019년 약 2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평균 증감률은 -1.5%로 전국 평균 -0.6%보다 2배 이상 높음
- 2019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전북 여성 30.34세, 남성 33.67세(전국 여 30.59세, 남 33.37세)로 전북의 여성초혼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남성은 높음. 전북의 조혼인율은 2019년 기준 남성 8.9%, 여성 8.2%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전국 평균 남성 10.8%, 여성 10.6%)으로 나타나 출산을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이와 같은 인구구성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북은 2040세대 등 젊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들 세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관련 정책추진이 시급함

○ 인구 구성 등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출산과 양육의 핵심계층인 2040세대¹⁾의 삶의 질 제고를 염두에 두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국가별, 지역별로 출산율에 차이²⁾가 나타나는 것은 지역의 환경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³⁾ 이러한 지역 환경의 차이는 인구유입과 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량적인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의 저출산정책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 및 정책로드맵을 발표함(2018.12.7.). 특히 2040세대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 일·생활 균형의 '워라벨'을 돕고 청년·여성의 일자리, 주거, 노동·양육 환경, 의료, 교육 등의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추구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북의 출산환경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환경 특성에 근거한 차별화 된 출산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일·가정양립, 일과 주거, 가치관 등 각 영역에서 전북의 2040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정책요구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전북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관련 핵심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1) 저출산 정책에서 2040세대가 강조되는 배경으로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만혼화의 심각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기혼부부의 양육부담경감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나 2040세대 등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2018.7관계부처합동정책발표)

2) 전국 시도간 합계출산율 격차는 2019년 기준 최대 0.755명으로 세종(1.472명)이 가장 높고 서울(0.717명)과 부산(0.827명)이 낮음

3) 예를 들어 지역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중 취업자가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보육 및 교육의 물리적 환경은 출산결정을 향상 시키거나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는 2040세대의 정책욕구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로 출산을 제고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과 더불어 향후 제4차 전북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라북도의 출산정책수립 여건과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임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연구추진체계 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본계획의 재구조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방향 등에 관해 살펴봄. 또한 저출산과 관련하여 2040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등 주요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함
- 제3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출산환경 및 여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통계와 문헌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인구 및 인구이동, 결혼과 출산 현황, 양육 및 일·가정 양립 등의 현황을 살펴 봄. 또한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저출산 추진시책을 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하여 정책 추진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 2040세대의 결혼 및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분석함. 또한 통계자료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2040세대의 인식과 태도, 정책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2장의 저출산과 관련된 2040세대의 일반적인 특성, 3장의 전북의 출산환경 및 정책여건의 특성, 제4장의 전북 2040세대의 저출산에 관한 인식과 태도 및 정책욕구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북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이에 부합하는 세부시책 등을 발굴·제안함

2.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결혼·출산 동향 및 영향요인, 출산친화 환경조성 관련 논문, 단행본, 정책보고서 검토
- 국내 타 지자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수집·분석
- 2020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유형별 현황 및 특성 분석

○ 각종 통계자료의 분석

- 영역별 출산친화환경에 대한 통계청 및 부처별 자료 분석 :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통계, 주거실태조사, 사회조사 등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전북의 현황 및 특징 파악
-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⁴⁾을 통해 전라북도 2040세대(미혼남녀/기혼여성)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의식과 태도, 양육 및 일·가정양립 실태 파악

2) 심층면접조사

- 조사목적 : 통계자료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2040세대의 결혼·출산 및 가족에 대한 의식과 태도, 정책욕구 등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을 분석 하여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생애이행주기별로 당면과제나 정책욕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사대상을 결혼 전(미혼), 결혼 후~첫째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현재 임신 중인 부부 포함), 자녀출산 후 양육기의 3그룹으로 구분하여 총 2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

4) 해당 원자료는 표본의 지역 대표성 확보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 미공개 요청에 의해 분석결과를 보고서에서 제외 함. 단,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나 특성 등은 제5장의 주요연구결과에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발굴이나 정책제언 등을 일부 추진하였음

○ 조사방법 :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1:1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서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함. 사전 이메일 조사 후 응답이 미흡한 부분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조사로 보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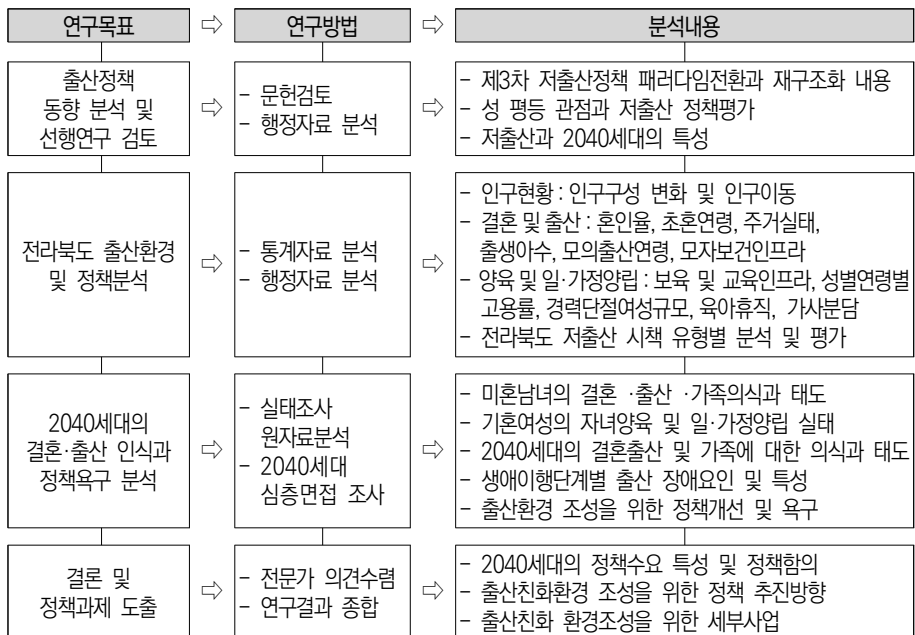
○ 조사내용 : 결혼·출산·자녀 및 가족형성 등에 관한 의식과 전망, 지역사회 출산·양육 환경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정책욕구, 신규사업 제안 등

3)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방향, 심층면접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착수 및 최종연구심의회 등을 통해 전공분야 교수, 연구자의 자문을 받아 연구에 반영함

○ 정책방향 및 세부시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책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현장가, 시군 담당공무원과 간담회 등을 4회 추진함

나. 추진 체계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Jeonbuk Institute

-
1.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저출산과 2040세대의 특징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1.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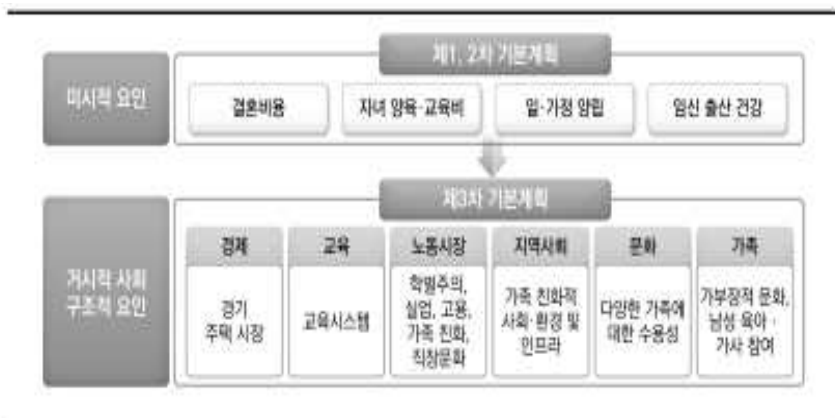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한 2005년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매 5년 단위로 법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년~2010년)은 4대 분야에 걸쳐 237개 과제가 추진됨. 그러나 정책대상이 저소득층에 편중되고 실행정책과 국민 욕구 간의 괴리 문제, 기업의 참여유도가 부진했다는 한계점이 비판적으로 제기됨(김민지·박영주, 2019)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년~2015년)은 3대 분야 231개 과제가 추진됨. 2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 및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부각되었으며 정책대상도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반영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년~2020년)에서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과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자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함

〈표 2-1〉 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제2차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제3차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기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20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구현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
추진목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점진적 출산율 회복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고용·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일·가정양립 실천문화중심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양립 제도 비용지원 중심	
추진방식	정부 주도	범 사회적 정책 공조	
재원규모	19.7조원	60.5조원	108.4조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9, 2011, 2016)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거시적인 사회구조를 변화하려는 접근과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도 매우 다양화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함
 -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면 제3차에서는 종합적이고 사회구조적인 근원을 해결하는 대응책을 마련함.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봄으로써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는 정책분야로까지 내용을 확장함(그림 2-1)
 - 패러다임 변화를 선언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수립 당시 합계출산율 1.21명(2014년)을 1.5명(2020년)으로 상향조정함.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주거 대책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실현’,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전략과제로 수립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

〈그림 2-1〉 저출산 대책분야 확장 방향

- 합계출산율과 연간 출생아 수가 매년 역대 최저수준을 경신하면서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이 더욱 심화되자 그간의 인구정책 대응을 원점으로 돌아가 방향과 기초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김종훈 외, 2018)
 - 2017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1.05명을 기록하고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출생아 수 30만 명 진입 시점이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지자 국민과 언론은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함

-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자성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존의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함(이윤경, 2019)
 - 그동안 합계출산율의 정량적 목표치를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율 1.5명'의 목표가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반성과 아울러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목표치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를 통해 추구하는 저출산 정책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그림 2-2 참고)
- 출산정책의 목표를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
 -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독박육아, 여성 경력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과 양육여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평가하고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
 - 제3차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향은 과제 수는 줄이고, 효과성은 높이는(Slim & Smart) 방향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그간의 정책들이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간의 정합성이 낮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와 비판을 개선하기 위함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시행시기를 넘어 제4차 기본계획(2021~2025)과 연계가 필요. 이에 따라 중장기 핵심과제의 효과적 대응방안 제시하고 이에 대한 4차 계획을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결과, 저출산 분야는 총 89개의 과제 중 18개 과제를 역량집중과제로 분류함(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2018)
- 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는 분류기준에 따라 역량집중과제/계획관리과제/부처자율과제로 구분함. 역량집중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집중관리, 부처자율과제는 부처 자체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재구조화 결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총 194개 과제 중 35개 과제에 역량집중과제로 분류됨. 저출산 분야는 총 89개 과제 가운데 18개 과제가 역량집중과제로 분류됨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①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②아
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 ③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확실히 돌
보는 기반 확충, ④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사회구현 ⑤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등을 저출산 분야의 역량집중과
제로 구체화 함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합계출산율: ('14) 1.21 → ('20) 1.5명		노인빈곤율: ('14) 49.6 → ('20) 39%
추진 전략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노후 소득보장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		- 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 강화 -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 조성
추진 전략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 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추진 전략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 분야별 인구 다문화사정 대비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살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 변화 적극 대비		
추진 영역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 돌봄: 총출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영역	인구 변화 적극 대비		
	- 사회시스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 - 지역: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추진 체계		거버넌스: 인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서비스/재정: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로드맵, 보도자료(2018. 12.7)

〈그림 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과 성 평등

-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제3차 기본계획이 제1,2차 계획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김명희(2017)는 적어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했다면, 정책목표와 수단, 기본정책
방향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정책추진의 동력도 변경되어야 하나 제1,2차 계획의 정
책목표와 수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평가함
- 송유미(2017)는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거나 ‘보
완’하는 것일 뿐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어서 굳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기 어렵
다고 비판함. 즉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확대, 직장어린이집 설
치율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모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자녀대상 아동수당 월 10
만원 지급 대책은 기존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 등임
-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뒤 2018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기본계
획재구조화 작업에서도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은 다음의 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정성호(2018)는 이러한 새 정부
의 저출산 대책을 무늬만 패러다임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2-2〉 저출산 대책 핵심과제 추진방안 주요 내용

내 용	기 존	개 선
특고직, 자영업자 출산급여	미지원	90일 동안 월 50만원지급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본인 부담액 16.5만원	본인부담액 5.6만원 - 국민 행복카드10만원
아이돌보미지원대상확대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포함 최대1년	육아휴직포함최대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200만원	상한액 250만원
배우자유급출산휴가	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한부모양육비 지원액 확대	지원액 13만원	지원액 17만원

자료: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의 효과성이나 방향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출산·양육과 관련한 여건을 구축하여 출산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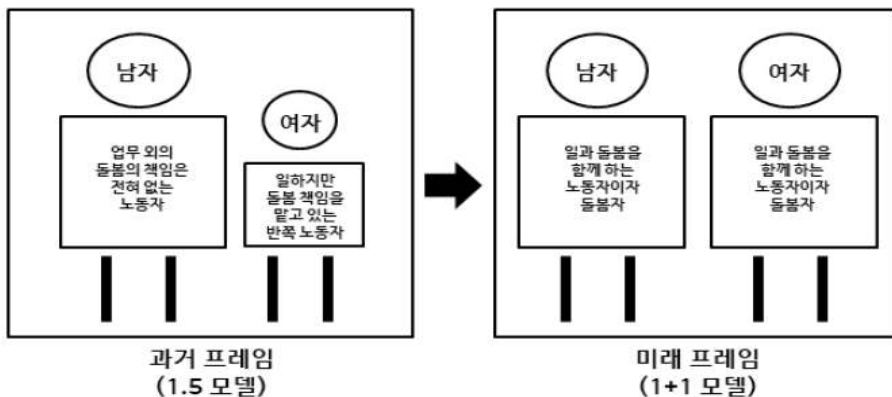
- 우해봉은(2020) 출산에 관한 개인들의 내밀한 사적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 오류'이며 출산에 관한 개인들의 선호는 선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음
- Hakim(2013)의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에 의하면 출산을 희망하거나(가족 지향적) 혹은 출산을 기피하는(경력 지향적) 선호를 지닌 개인들에 비해 일·가족 균형을 지향하는 적응적(adaptive) 선호를 가진 여성이 다수를 점하기도 함
- 따라서 우해봉(2020)은 출산에 관한 선호는 개인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출산·양육 환경을 포함하여 관련 여건을 충실히 구축할 경우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다고 봄
- 만혼과 비혼의 증가로 가임기 여성 및 유배우 여성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특단의 대책이나 단일한 효과적인 수단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이철희, 2018; 우해봉 2020). 다만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구변화 속도를 늦출 필요는 있음. 따라서 저출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는 삶의 질 개선과 양성평등의 실현,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의 장애물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봄(이철희,2018)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핵심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제3차 기본계획이 하나의 기본계획 안에 너무 많은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지향하는 핵심가치가 부재하며, 당사자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봄
- 김은지 외(2018)는 제3차 기본계획이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당사자, 특히 여성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돌봄'이고 돌봄을 중심으로 한 성 평등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 성 평등한 관점의 저출산 대책이 수립하려면 근본적으로 노동과 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서는 그러한 관점이 결여됨

- 성 평등한 저출산 정책은 생산-재생산, 노동-돌봄이 새의 양날개처럼 전제되어야 하며 노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봄(송다영, 2019)
- 제1차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돌봄에 대한 시각은 성별분리적이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수렴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 없이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의 주체로 노동시장 내 지위를 설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임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출산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써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을 함께 돌보는 당사자로 보지 않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 수행의 주체자로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이원화하고 있는 프레임임을 깨지 못할 경우 한국은 저출산 뒤편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
- 이러한 시각에서 제3차 기본계획의 구조화를 반영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연계성을 갖으려면 모든 성인노동자는 남녀 구분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돌봄을 수행하는 성인’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음(송다영, 2019; 김은지 외:2019); 이순미,2014)



자료 : 송다영(2019),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저출산기본계획 비전, 방향 및 정책 분석틀

〈그림 2-3〉 성 평등한 저출산정책을 위한 기본프레임의 전환

- 즉 성 평등한 저출산 정책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인생계부양자 - 이인돌봄자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성 평등 돌봄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송다영, 2019)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에도 남성의 성 역할 변화 없이 여성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는 5개 영역 15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 틀⁵⁾을 적용하여 본 결과, 남성은 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가 별로 없는 반면 여성은 생산역할 지원보다는 재생산 역할로 전제된 정책이 훨씬 많아 기존의 재생산 역할 통념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송다영, 2019)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을 재생산자로 또는 생산/재생산 이중역할 담당자로 규정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생산역할에서 중요한 노동시장 성차별 요소나 여성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등에 관한 정책제안은 미흡하고 남성의 재생산 역할을 지원해서 젠더질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방안은 없음

○ 삶의 질과 성 평등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성 평등 헌법 개정에서부터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관점의 변화와 저출산에 대한 담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봄

- 정재훈(2018)은 성 평등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과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를 망라하는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 부모수당을 확대 반영한 남성 돌봄노동 참여 등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김영미(2018)는 출산율 제고와 같은 목표설정을 폐기해야하며 저출산 대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생산권 보장으로 설정될 필요성을 제기함. 이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권(임신, 출산, 낙태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재생산 건강권을 적극 보장할 것과 정상가족 규범에 대한 해체, 결혼지위와 무관하게 남녀가 동등하게 재생산권 보장받아야 하며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권리 공유와 책임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5) 성인지적 평가 틀의 구성은 성 평등 달성을 최종 성과로 보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개의 하위지표로 역할지원 평등성(남녀의 생산과 재생산), 사회적 평등성(노동시장 지위, 가족지위)등을 평가함. 정책요구에서는 역할지원 평등성과 사회적 평등성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근거로 해당 정책이 실질적 젠더요구를 통해 성 평등 효과가 나타나는지 전략적 젠더요구를 통해 성 평등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평가함(송다영, 2019)

2. 저출산과 2040세대의 특징

가. 경제적 자원의 취약과 결혼 유보

- 취업여부나 고용형태, 임금수준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수준은 2040세대를 포함한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 취업여부,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은 남녀의 결혼이나 가족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성별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봄
 - 남성에게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이고, 임금이 높을수록, 직업 위세가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도 높았지만, 여성은 각 변수 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경제적 자원이 클수록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유흥준 외, 2010; 윤자영, 2012; 최필선·민인식, 2015; 우해봉·장인수, 2017; 홍승아 외, 2018)
 - 고용이나 직업적 지위 등은 결혼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용직이나 정규직일 경우 임시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1.1~4.4%p 높았으며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 확률이 높았음(국회예산정책처, 2018)
- 고용의 안정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이 결혼이행이나 가족구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주택마련 비용, 결혼 이후 자녀양육 등 생활전반에 걸친 비용부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 미혼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꼽고 있는 '경제적 부담'은 결혼단계에서 부담해야 할 주택마련이나 결혼준비 비용부담 뿐만이 아니라 결혼 이후의 생활과 자녀양육 등 생활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의미함(이삼식, 2017)
 - 2040세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로도 '고용불안과 높은 주거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결혼 여건'을 가장 많이 거론(31.5%)하였으며 이 외에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24.5%)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7)
 - 유배우여성(15~39세)을 대상으로 출산 미이행에 관한 실태 및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무자녀인 유배우 여성을 포함하여 1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들이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 비율이 50%를 차지하였으며 2자

녀 유배우 여성은 60%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이 고비용을 유발하여 가정생활에 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어 첫 자녀 출산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봄(이삼식, 2017)

○ 결혼과 출산을 유보하거나 미이행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결혼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마련’임. 최근 주거마련에 대한 청년층의 의식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진 주거부담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

- 2018년 전국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혼부부가구가 가족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30.8%)를 꼽고 있고, 실제 주택 소유여부별 자녀출산 수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에게서 자녀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전국주거실태조사, 2018)

- 이와 같이 주거마련은 결혼과 출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남성 70.2%, 미혼여성 72.3%가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이소영 외, 2018)

- 이러한 결과는 주택 마련을 남성의 책임으로만 보는 시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진 주거부담을 어느 한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임(이소영 외, 2018)

- 하정화(2019)는 신혼부부의 절반 정도는 일자리와 주거문제 때문에 지역 간 인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자리와 주거는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봄. 따라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막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주거정책과 환경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장함

○ 작금의 청년층의 만혼화, 비혼, 출산 기피 등의 현상은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로 보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나 노동시장의 불안정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청년층의 경제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음

- 홍승아(홍승아 외, 2018)는 경제적 자원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경우 더욱 강해졌으나 최근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결혼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봄. 이러한 경향은 결혼

가능성이나 가족형성과 관련한 선택에서도 청년들 사이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청년의 빈곤과 결혼의 상관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가족과 일, 삶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변화

- 최근 한국가족의 구성과 유지는 제도적 가족규범이 약화되고 개인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집단 중의 하나로 2040세대를 주목하고 있음
 - 혼인과 출산의 감소, 비혼 증가 현상은 가족형성이 기존의 사회규범에서 탈피해 개인의 능동적 선택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가족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는 개인의 삶의 가치와 주관적 만족, 관계의 질 등이 우선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김소영,2015)
 - 이처럼 가족에 대한 규범과 가치체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관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가족관과 정형적인 가족모델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비판함(김영미, 2016; 김영미, 2018; 최인희·홍승아에서 재인용, 2018)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작금의 저출산은 남녀의 '파트너십을 둘러싼 가족구조, 노동시장 등 젠더관계와 사회체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재경 외, 2005; 최인희·홍승아에서 재인용, 2018)이며 2,30대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병행하기 위해 '강요된 합리적 선택'(배은경, 2010)'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김소영(김소영·선보영, 2017)은 가족구성과 유지에서 '개인'의 선택성이 증가하고 그 기준도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가족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 즉 가족을 대상화 해 집합단위로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을 구성·유지하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 될 것을 주장함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생각,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 등 가족가치에 대한 2040세대의 특성은 규범화 된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홍승아(홍승아 외, 2018)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문화·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일본의 2040세대(25~44세)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청년세대의 가족·일·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에 대해 한국은 52.6%, 일본은 55.4%가 응답하였음. 또한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해 한국은 19.9% 일본은 7.4%가 응답하였으며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한국 41.1% 일본 45.3% 등으로 나타남
-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은 한국 응답자가 일본에 비해 규범화된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음. 양국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음. 즉 결혼은 부담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며 자녀로 인해 부모의 취업과 경력기회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식이 컸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본여성에게 비해 한국여성이 높았음
-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즉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의 부정적 태도가 더 높고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녀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여성일수록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비율이 64.4%(남성 44.7%)로 매우 높고 대도시(49.0%)와 중소도시(50.0%) 농촌(37.1%) 등 거주지에 따른 의식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는 일가족생활에서의 갈등경험이 비교적 높았으며 가족 내 역할분담은 여전히 남성-소득 여성-돌봄 등으로 이분화 되어 있었으며 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과 성 평등 문화 수준은 낮았음

- 홍승아(홍승아 외, 2018)의 동일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가족돌봄자' 모델에 대한 동의도는 한국 응답자의 비율이 일본에 비해 낮았음.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는 '이인소득자-이인돌봄자'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족 내 역할분담에서는 남성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식사준비와 자녀양육은 여성이 주로하고 있어 가족 내에서의 성 평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가족생활 갈등경험은 일본과 한국 모두 남성과 여성이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이나 경직된 근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저출산 댄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성 평등한 일·생활균형 정책과 성 평등 문화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
-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는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양육, 노후생활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다는 공통점이 발견됨.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인식

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어 출산이나 가족형성에 대한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족형성과 출산여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인구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결혼의향은 낮아지고 유보적 태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의 미혼화는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청년 삶의 변화라는 맥락에서의 이해가 필요함

-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인구(20~44세)의 응답결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응답률은 남성은 50.5%이지만 여성은 28.8% 수준에 불과하였음
- 한편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에 해당하는 유보적 응답률은 남성 39.2%, 여성 54.9%로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한 태도는 유보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젠더에 의한 차이로 보기 보다는 청년층 전반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 또는 유보적 태도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해석 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함(이소영 외, 2019)
-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유보적 태도는 남녀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여성의 경우는 취업을 하더라도 일·가정양립 등이 취약한 근로환경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유보하는 것으로 조사됨(조경옥, 2020). 즉 결혼으로 인한 퇴사나 불이익, 결혼 이후의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에 대한 불안도 결혼을 유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나타났음
- 이상림(2019)은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피부양자가 아닌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보는 등 성역할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코호트적 차이를 보이는 시대적 흐름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고 봄
- 이와 같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혼화의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결혼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기함(이상림, 2019)

3

장

전라북도 출산환경 및 정책분석

Jeonbuk Institute

-
1. 인구 및 인구이동
 2. 결혼 및 출산
 3. 양육 및 일·가정양립
 4.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정책분석
 5. 요약 및 시사점

제 3 장 전라북도 출산환경 및 정책분석

1. 인구 및 인구이동

가. 인구 현황

-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 인구수는 1,818,917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3.5%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체 인구 중 남성 904,110명, 여성 914,807명으로 성비가 101.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전체 성비인 100.5보다 높아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 인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표 3-1〉 17개 시도 인구 현황(2019)

(단위 : 명, %)

시도	인구수	남	여	성비
전국	51,849,861	25,864,816	25,985,045	100.5
서울특별시	9,729,107	4,744,059	4,985,048	105.1
부산광역시	3,413,841	1,675,417	1,738,424	103.8
대구광역시	2,438,031	1,205,286	1,232,745	102.3
인천광역시	2,957,026	1,482,249	1,474,777	99.5
광주광역시	1,456,468	720,740	735,728	102.1
대전광역시	1,474,870	736,607	738,263	100.2
울산광역시	1,148,019	589,712	558,307	94.7
세종특별자치시	340,575	169,845	170,730	100.5
경기도	13,239,666	6,659,995	6,579,671	98.8
강원도	1,541,502	775,386	766,116	98.8
충청북도	1,600,007	810,384	789,623	97.4
충청남도	2,123,709	1,081,938	1,041,771	96.3
전라북도	1,818,917	904,110	914,807	101.2
전라남도	1,868,745	937,674	931,071	99.3
경상북도	2,665,836	1,342,037	1,323,799	98.6
경상남도	3,362,553	1,692,032	1,670,521	98.7
제주특별자치도	670,989	337,345	333,644	98.9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전국의 경우 2000년 기준 총 인구는 47,732,558명이며 지속적으로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51,849,861명으로 2000년 대비 약 8.6%의 인구가 증가함. 성별로는 남성이 2000년 대비 7.9%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0년 대비 9.3% 증가하여 여성 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전라북도 인구는 전국 전체 인구의 증가 추세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0년 1,999,255명이었던 전라북도 인구는 2019년 1,818,917명으로 약 9.0%가 감소하였으며 성별 감소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9.0%로 동일함

〈표 3-2〉 전국 및 전북 성별 인구 증감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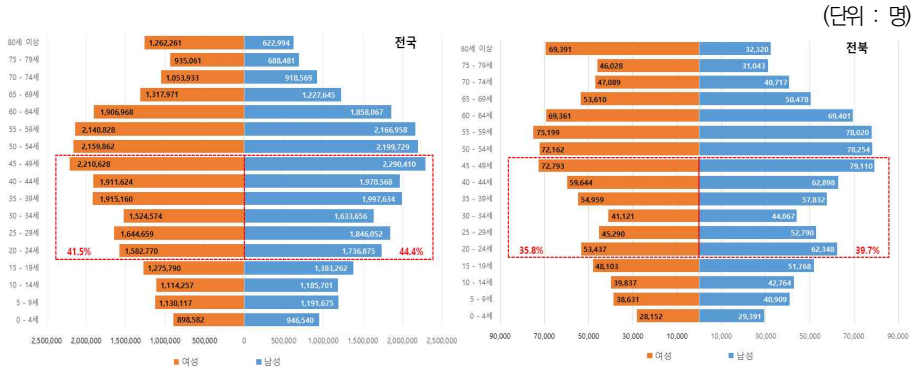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증감률
전국	총인구	47,732,558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778,544	51,826,059	51,849,861	8.6
	남성	23,962,088	24,456,234	25,310,385	25,758,186	25,855,919	25,866,129	25,864,816	7.9
	여성	23,770,470	24,326,040	25,205,281	25,771,152	25,922,625	25,959,930	25,985,045	9.3
전북	총인구	1,999,255	1,885,335	1,868,963	1,869,711	1,854,607	1,836,832	1,818,917	-9.0
	남성	993,967	938,746	931,481	930,255	922,307	913,297	904,110	-9.0
	여성	1,005,288	946,589	937,482	939,456	932,300	923,535	914,807	-9.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 전라북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는 전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25~44세 비중이 전국에 비해 적으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전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여성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연령대는 0~4세(28,152명)이며 5~9세(38,631명), 10~14세(39,837명), 30~34세(41,121명), 25~29세(45,290명) 순으로 인구가 적게 나타남
- 남성 역시 여성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0~4세가 29,39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5~9세(40,909명), 10~14세(42,764명), 30~34세(44,067명), 15~19세(51,768명) 순으로 인구가 적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14세 미만의 유소년을 제외하면 여성의 경우 주출산연령인 25~34세의 여성의 인구수가 매우 적은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저출산 문제의 심화가 우려됨

- 반면 성별로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50대의 장년층과 8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40~50대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고령 인구가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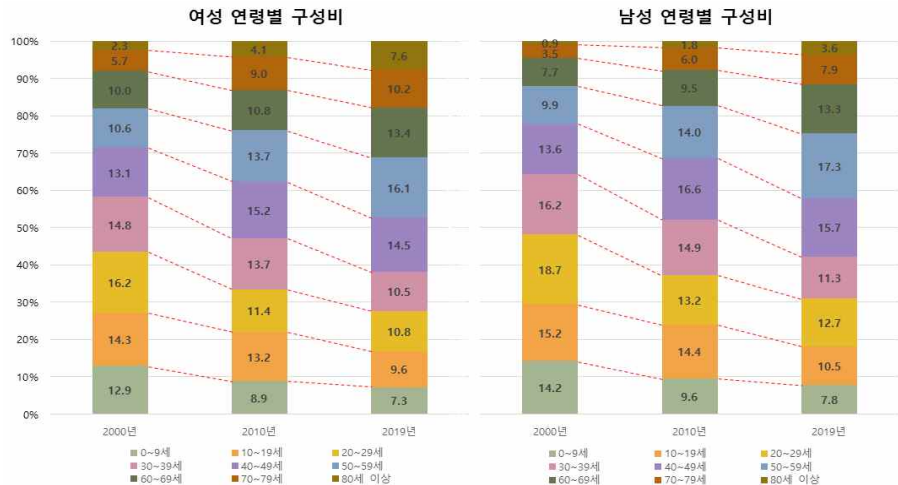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그림 3-1〉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인구

- 전라북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이하 인구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80세 이상 고령층, 남성은 50~60세 장년층 인구 구성비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그림 3-2〉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구성비 증감 추이

○ 전라북도의 가임기 및 주출산연령의 여성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15~49세 가임기 여성은 375,347명으로 2000년 기준 525,505명보다 28.6% 감소하였고, 25~34세 주출산 연령 여성은 86,411명으로 2000년 인구수(153,942명) 대비 43.9% 감소함
- 전국의 경우 2000년 대비 2019년 가임기 여성의 감소율이 12.2%이고, 주출산연령 여성의 감소율이 27.5%인 것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의 가임기 및 주출산연령 여성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출산율의 감소로 연결 될 수밖에 없음

〈표 3-3〉 전라북도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연령 여성

(단위 : 명,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증감률
전국	가임기 여성	13,747,805	13,628,886	13,401,552	12,831,407	12,516,864	12,294,729	12,065,205	-12.2
	주출산 연령	4,368,376	4,058,971	3,746,356	3,319,269	3,186,671	3,156,138	3,169,233	-27.5
전북	가임기 여성	525,505	469,322	441,552	417,021	401,024	387,994	375,347	-28.6
	주출산 연령	153,942	131,110	113,758	96,553	90,599	87,797	86,411	-43.9

주 : 가임기 여성은 15~49세, 주출산연령 여성은 25~34세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나. 인구 이동 현황

- 2000년 이후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40세대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었고, 그 규모도 큼
- 전라북도의 인구유출 규모는 2000년대 초중반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 들어 그 규모가 감소했으나 2016년 이후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 2040세대 역시 전라북도 전체 인구유출 정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거나 2009년을 기점으로 2040세대의 순유출이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순유출보다 높아짐

〈표 3-4〉 전라북도 2040세대 인구 이동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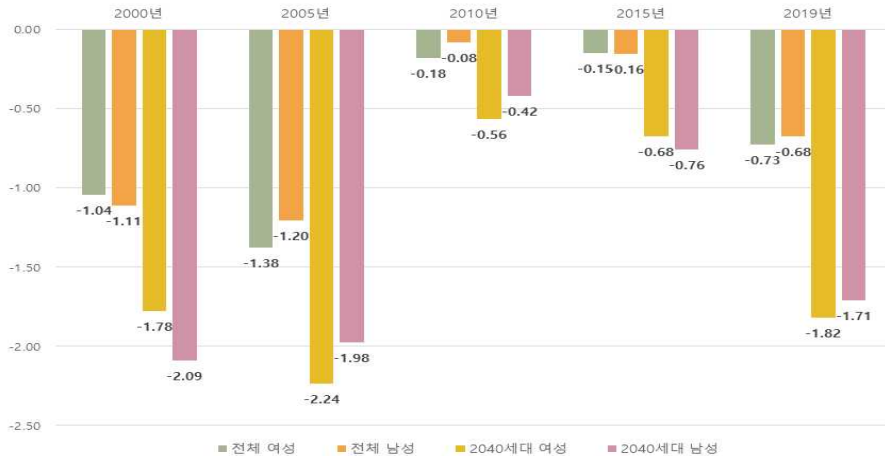
	전체			2040세대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0	350,628	372,218	-21,590	193,783	211,801	-18,018
2001	370,943	372,854	-1,911	199,661	209,557	-9,896
2002	338,554	395,289	-56,735	186,717	219,556	-32,839
2003	397,299	400,338	-3,039	212,685	225,406	-12,721
2004	329,911	380,880	-50,969	183,565	212,509	-28,944
2005	311,537	336,014	-24,477	173,888	192,151	-18,263
2006	327,237	346,399	-19,162	182,130	197,191	-15,061
2007	332,957	343,831	-10,874	180,319	190,391	-10,072
2008	322,495	333,045	-10,550	176,513	184,615	-8,102
2009	314,137	318,943	-4,806	170,611	175,734	-5,123
2010	305,789	308,237	-2,448	167,466	171,363	-3,897
2011	308,011	306,290	1,721	166,530	168,257	-1,727
2012	271,835	275,126	-3,291	146,345	151,995	-5,650
2013	258,198	260,395	-2,197	137,448	142,753	-5,305
2014	274,337	276,900	-2,563	146,178	151,650	-5,472
2015	261,832	264,662	-2,830	139,671	145,069	-5,398
2016	248,188	252,607	-4,419	131,759	138,304	-6,545
2017	232,047	239,253	-7,206	122,920	131,238	-8,318
2018	243,324	257,097	-13,773	128,138	140,698	-12,560
2019	228,775	241,523	-12,748	121,213	133,405	-12,192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 전라북도의 인구이동률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인구의 이동률보다는 2040세대의 이동률이 높아 2040세대의 인구유출이 다른 연령대 인구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여성 인구이동률은 -0.73%, 남성 인구이동률은 -0.68%로 각 성별 100명 중 여성은 0.73명, 남성은 0.68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2040세대의 경우 여성의 인구이동률은 -1.82%, 남성의 인구이동률은 -1.71%로 2040세대 여성은 100명 중 1.82명, 남성은 100명 중 1.71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세대의 유출률이 전체 유출률보다 2배 이상 높음
 - 2040세대의 이동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여성은 2005년(-2.24%), 남성은 2000년(-2.09%)이었으며 2010년에 들어서 이동률이 낮아져 이동률이 가장 낮았던 2010

년에는 2040세대의 여성 인구이동률 -0.56%, 남성 인구이동률 -0.42%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주 : 인구이동률 = 순이동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그림 3-3〉 전라북도 성별 인구이동률

○ 2040세대의 연령별 인구 순이동을 확인한 결과, 2019년 기준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의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2040세대는 2000년대 초중반 1만 8천명이 넘게 유출되어 유출 정도가 매우 높았고 2010년대는 4천여명이 유출되는 수준으로까지 유출 정도가 낮아졌으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2040세대 유출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
- 2019년 기준 2040세대는 총 12,192명이 유출되었으며 그 중 9,689명이 20대로 2040세대의 인구 유출 중 20대의 비중이 79.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2040세대 중 20대는 남성(4,578명)보다 여성(5,111명)의 유출이 많으나 30대(남성 1,332명, 여성 798명 유출)와 40대(남성 284명, 여성 89명 유출)는 여성보다 남성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짐

〈표 3-5〉 전라북도 2040세대 순이동 추이

(단위 : 명)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남성	계	-10,111	-8,969	-1,757	-2,990	-4,279	-6,466	-6,194
	20~24세	-3,101	-2,957	-1,348	-1,430	-1,287	-2,027	-2,091
	25~29세	-5,610	-4,230	-1,966	-1,801	-2,169	-2,520	-2,487
	30~34세	-1,080	-996	-4	-488	-810	-1,112	-880
	35~39세	-159	-417	686	78	-269	-505	-452
	40~44세	-196	-344	417	328	45	-209	-175
	45~49세	35	-25	458	323	211	-93	-109
여성	계	-7,907	-9,294	-2,140	-2,408	-4,039	-6,094	-5,998
	20~24세	-4,085	-4,254	-1,796	-1,712	-2,126	-2,997	-3,281
	25~29세	-3,128	-2,812	-1,188	-1,231	-1,474	-1,926	-1,830
	30~34세	-279	-967	115	-73	-441	-702	-585
	35~39세	-288	-653	281	238	-79	-218	-213
	40~44세	-106	-324	274	196	14	-117	-120
	45~49세	-21	-284	174	174	67	-134	31

주 : 가임기 여성은 15~49세, 주출산연령 여성은 25~34세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2. 결혼 및 출산

가. 결혼 및 주거

- 대체로 남편의 혼인율이 아내의 혼인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에는 남편과 아내의 혼인율 차이가 적고, 그 외의 지역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혼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남편의 혼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 아내의 혼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임. 전라북도의 혼인율은 다른 지역 혼인율에 비해 남편의 경우 최대 7.0%, 아내의 경우 최대 5.7%까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혼인율은 남편 10.8%, 아내 10.6%로 비슷한 수준이며 혼인율이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남편의 혼인율이 15.9%, 아내의 혼인율이 13.9%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전라북도는 남편의 혼인율은 8.9%, 아내의 혼인율은 8.2%로 전국에서 혼인율이 가장 낮으며 아내의 혼인율은 전라남도과 경상북도 역시 8.2%로 전라북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3-4〉 시도별 조혼인율(2019년)

- 전국과 전라북도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남편의 혼인율은 전북보다 전국의 감소율이 높고, 여성의 혼인율은 전북 여성 혼인율의 감소가 매우 두드러짐
 - 2000년에는 남편(14.4%)보다 아내(15.2%)의 혼인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혼인율이 빠르게 감소하여 2019년 기준 전라북도 남편의 혼인율은 8.9%, 아내의 혼인율은 8.2%로 여성의 혼인율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2000년 대비 2019년 혼인율 증감률은 남성(-38.2%)보다 여성(-46.1%)의 감소율이 높음
 - 전북의 혼인율은 전국 평균(남편 10.8%, 아내 10.6%)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아내의 혼인율 감소율은 전국 평균(남편 -39.3%, 아내 -39.4%)보다 약 7%p 높아 전라북도 여성의 혼인율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전국 및 전북 조혼인율

(단위 :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증감률
전국	남편	17.8	16.1	15.7	13.9	12.0	11.6	10.8	-39.3%
	아내	17.5	15.8	15.5	13.7	11.8	11.5	10.6	-39.4%
전북	남편	14.4	13.4	13.7	11.4	9.8	9.1	8.9	-38.2%
	아내	15.2	12.7	12.6	10.7	9.1	8.5	8.2	-46.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여성의 초혼연령은 30.34세, 남성은 33.67세로 여성의 경우 초혼연령이 전국 평균(30.59세)보다 낮고, 남성의 경우 전국 평균(33.37세)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꾸준히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 여성의 초혼연령이 낮게 나타났음. 반면 남성은 과거에는 초혼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점점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후, 2018년을 기점으로 초혼연령이 전국 평균을 넘어섬
-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의 상승세가 큼
 - 2000년에 남성과 여성 각각 28.81세, 25.72세던 전라북도의 초혼연령은 2019년 33.67세, 30.34세로 약 4.86세, 4.62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4.09세, 4.1세가 증가하여 전라북도보다 증가세가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초혼연령의 증가는 자녀 출산에 대한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높여 출산에 대한 제약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3-5〉 성별 초혼연령

- 전국과 전라북도 2000년 이후 혼인건수의 증감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2005년에 비해 2010년의 혼인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2000년 22,724명이던 전라북도의 혼인부부는 2019년 14,010명으로 약 38.3%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국 혼인부부는 2000년 664,180명에서 2019년 478,318명으로 28.0% 감소하여 전라북도의 혼인부부가 전국 혼인부부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혼인부부를 살펴본 결과,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동일하게 전체 혼인부부 중 20대 이하의 혼인부부 구성비는 줄고, 30대 이상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기준 20대는 전라북도 65.9%, 전국 65.8%로 혼인부부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였으나 2019년에는 전라북도 32.9%, 전국 32.2%로 각각 33.0%p, 33.6%p가 감소하였으며 19세 미만의 혼인건수 구성비도 전라북도 2.3%p, 전국 1.0%p 감소하였음
- 30대는 2000년 기준 연령별 혼인부부 구성비가 전라북도 23.6%, 전국 25.5%에 불과하였으나 결혼시기를 늦추는 만혼화 현상으로 각각 18.7%p, 22.9%p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전라북도 42.3%, 전국 48.4%로 구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가 됨. 40대 역시 동기간 전라북도 8.8%p, 전국 5.8%p가 증가하였으며 50대는 각각 5.7%p, 4.1%p, 60대 이상은 각각 2.2%p, 1.7%p가 증가함

〈표 3-7〉 연령별 혼인

(단위 : 건,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전국	계	664,180 (100.0)	628,608 (100.0)	652,208 (100.0)	605,656 (100.0)	528,910 (100.0)	515,244 (100.0)	478,318 (100.0)
	19세 미만	10,300 (1.6)	6,803 (1.1)	6,486 (1.0)	4,400 (0.7)	3,352 (0.6)	3,133 (0.6)	3,056 (0.6)
	20대	437,144 (65.8)	317,872 (50.6)	284,685 (43.6)	211,488 (34.9)	179,013 (33.8)	171,057 (33.2)	154,050 (32.2)
	30대	169,363 (25.5)	218,866 (34.8)	271,891 (41.7)	296,730 (49.0)	256,728 (48.5)	250,372 (48.6)	231,371 (48.4)
	40대	34,292 (5.2)	60,475 (9.6)	59,399 (9.1)	58,095 (9.6)	54,421 (10.3)	54,550 (10.6)	52,605 (11.0)
	50대	10,024 (1.5)	19,560 (3.1)	23,078 (3.5)	26,331 (4.3)	26,130 (4.9)	26,402 (5.1)	26,564 (5.6)
	60세 이상	3,049 (0.5)	5,032 (0.8)	6,669 (1.0)	8,612 (1.4)	9,266 (1.8)	9,730 (1.9)	10,671 (2.2)
전북	계	22,724 (100.0)	20,392 (100.0)	21,050 (100.0)	18,120 (100.0)	15,634 (100.0)	14,438 (100.0)	14,010 (100.0)
	19세 미만	775 (3.4)	439 (2.2)	381 (1.8)	237 (1.3)	195 (1.2)	163 (1.1)	157 (1.1)
	20대	14,985 (65.9)	10,572 (51.8)	9,512 (45.2)	6,552 (36.2)	5,520 (35.3)	4,733 (32.8)	4,606 (32.9)
	30대	5,367 (23.6)	6,555 (32.1)	8,018 (38.1)	8,120 (44.8)	6,770 (43.3)	6,262 (43.4)	5,926 (42.3)
	40대	1,116 (4.9)	2,017 (9.9)	2,129 (10.1)	1,988 (11.0)	1,831 (11.7)	1,977 (13.7)	1,916 (13.7)
	50대	328 (1.4)	623 (3.1)	792 (3.8)	944 (5.2)	997 (6.4)	964 (6.7)	994 (7.1)
	60세 이상	153 (0.7)	186 (0.9)	218 (1.0)	279 (1.5)	321 (2.1)	339 (2.3)	411 (2.9)

주 : 남편과 아내의 연령을 합한 수치로 혼인건수는 위 표의 1/2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전국과 전라북도의 신혼부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초혼부부의 평균 출산자녀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반면 맞벌이 부부 수는 신혼부부의 감소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맞벌이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라북도의 2018년 신혼부부는 38,328명으로 2015년(44,982명)보다 14.8% 감소하였으며 초혼부부 평균 출산자녀 수 역시 2015년 0.94명에서 2018년 0.86명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전체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전체 신혼부부 중 37.2%를 차지하던 맞벌이 부부가 2018년에는 42.2%로 약 5.0%p 증가함
-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전라북도 초혼부부의 평균 출산자녀 수는 전국 평균보다 많고,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표 3-8〉 전국 및 전라북도 신혼부부 총괄

(단위 : 명)

		신혼부부 수	초혼부부 평균 출산자녀 수	맞벌이 부부 수
전국	2015	1,471,647	0.82	595,850
	2016	1,436,948	0.80	603,281
	2017	1,379,766	0.78	585,957
	2018	1,322,406	0.74	594,409
전북	2015	44,982	0.94	16,720
	2016	43,026	0.92	16,762
	2017	40,699	0.90	16,025
	2018	38,328	0.86	16,191

자료 :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년도

- 인구총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전라북도의 가구별 주택 점유형태는 자기집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00년은 전세 비중이 높은 반면 2015년은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15년 기준 전라북도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기집인 경우가 68.6%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부 월세 16.8%, 전세 7.5%, 무상 3.9%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00년의 주택 점유형태와 비교할 때 자기집인 경우는 3.0%p 증가하였으며 전세

는 10% 가까이 감소한 반면 월세는 약 5% 가까이 증가하여 주택 점유형태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임

〈표 3-9〉 전라북도 가구별 주택 점유형태 추이

(단위 : 가구, %)

	계	자기집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2000	601,965 (100.0)	395,151 (65.6)	103,157 (17.1)	85,448 (14.2)	-	-	18,201 (3.0)
2015	717,466 (100.0)	491,843 (68.6)	54,008 (7.5)	120,346 (16.8)	15,227 (2.1)	8,141 (1.1)	27,901 (3.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전라북도 2040세대의 연령대별 주택 점유형태를 확인한 결과 20대는 보증부 월세 형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는 자기집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30대보다 40대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전북의 20대는 보증부 월세의 형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53.7%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세 13.0%, 자기집 12.7%, 무보증월세와 사글세가 각각 7.9% 순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대비 무보증 월세와 사글세의 비중이 높고, 전세의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주거환경의 거주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 30대의 경우 자기집이 48.6%로 가장 많았고, 보증부 월세 25.5%, 전세 1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다른 형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라북도의 자기집 형태 비중이 10% 가까이 높고 전세의 비중이 10% 가까이 낮게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주거 환경이 더 안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남
- 40대 역시 전국 평균보다 자기집의 비중이 높았는데 전라북도 40대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기집 62.0%, 보증부 월세 20.3%, 전세 10.12%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자기집 비중이 8.2%p 높고 전세 비중이 7.5%p 낮았음

〈표 3-10〉 전국 및 전라북도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가구, %)

		계	자기집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전국	계	8,696,646 (100.0)	3,705,552 (42.6)	1,859,765 (21.4)	2,348,379 (27.0)	254,178 (2.9)	82,501 (0.9)	446,271 (5.1)
	20대	1,199,457 (100.0)	124,997 (10.4)	237,729 (19.8)	640,460 (53.4)	80,275 (3.2)	38,586 (3.2)	77,410 (6.5)
	30대	3,084,104 (100.0)	1,207,664 (39.2)	839,652 (27.2)	774,899 (25.1)	73,348 (0.5)	16,223 (0.5)	172,318 (5.6)
	40대	4,413,085 (100.0)	2,372,891 (53.8)	782,384 (17.7)	933,020 (21.1)	100,555 (0.6)	27,692 (0.6)	196,543 (4.5)
전북	계	275,083 (100.0)	139,248 (50.6)	35,766 (13.0)	73,564 (26.7)	7,755 (1.7)	4,725 (1.7)	14,025 (5.1)
	20대	39,201 (100.0)	4,973 (12.7)	5,111 (13.0)	21,054 (53.7)	2,807 (7.9)	3,104 (7.9)	2,152 (5.5)
	30대	90,060 (100.0)	43,797 (48.6)	15,773 (17.5)	22,939 (25.5)	1,992 (0.7)	599 (0.7)	4,960 (5.5)
	40대	145,822 (100.0)	90,478 (62.0)	14,882 (10.2)	29,571 (20.3)	2,956 (0.7)	1,022 (0.7)	6,913 (4.7)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는 기준년도인 2017년 11월의 가격(100.0으로 설정)보다 2020년 7월 기준 소폭 감소하여 98.4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의 전세가격지수 역시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기준년도인 2017년 11월에 비해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하여 전세가격지수가 97.9로 나타남
 - 기준년도인 2017년 11월보다 2020년 7월의 전세가격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이며 그 중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세가격지수가 114.3으로 나타남. 반면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세가격지수가 9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2018년 11월의 전세가격지수는 99.6, 2019년 11월의 전세가격지수는 98.0, 2020년 7월의 전세가격지수는 97.9로 감소폭이 크지는 않으나 기준년도인 2017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1〉 시도별 전세가격지수

(단위 : 2017.11 = 100.0)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0.07
전국	99.3	100.0	98.4	96.7	98.4
서울특별시	98.1	100.0	100.6	99.6	101.2
부산광역시	98.9	100.0	97.3	95.6	98.4
대구광역시	98.4	100.0	98.9	98.1	100.9
인천광역시	99.0	100.0	98.1	96.0	96.2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1	101.1	102.3
대전광역시	98.8	100.0	101.0	100.7	100.9
울산광역시	98.4	100.0	100.0	101.8	107.1
세종특별자치시	100.9	100.0	91.7	86.6	90.1
경기도	108.3	100.0	100.9	100.1	114.3
강원도	98.1	100.0	97.7	93.8	94.0
충청북도	98.9	100.0	97.7	94.1	95.1
충청남도	101.1	100.0	97.4	96.3	97.1
전라북도	98.5	100.0	99.6	98.0	97.9
전라남도	98.4	100.0	101.1	101.5	102.1
경상북도	101.2	100.0	97.3	94.9	94.7
경상남도	102.4	100.0	95.5	91.1	91.7
제주특별자치도	99.8	100.0	98.3	95.7	94.1

자료 : 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나. 출산 현황

- 2019년 기준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합계출산율이 1.47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이 0.71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전라북도는 0.971명으로 전국 평균(0.918명)보다 합계출산율이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이며 대체적으로 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도 단위 지자체보다 낮은 양상을 보임
 -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도 단위 지자체 중 경기도(0.943명)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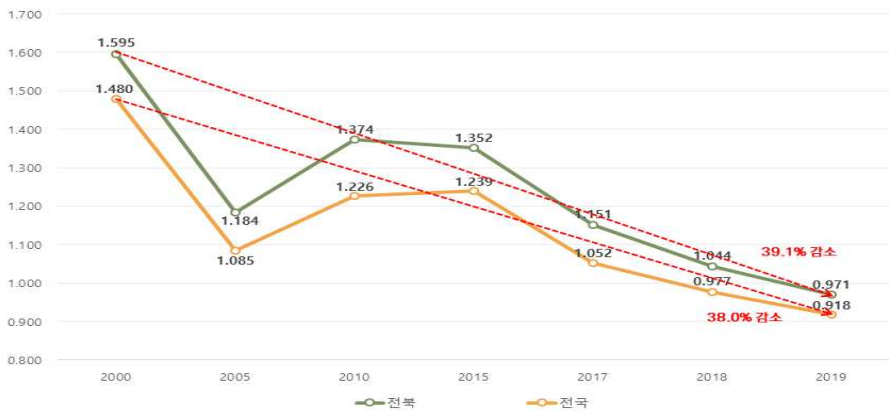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

〈그림 3-6〉 시도별 합계출산율

- 전라북도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이후 비슷한 증감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 전북 평균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1명 아래를 기록함
- 2000년 1.595명이었던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71명으로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00년 대비 39.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은 2019년 0.918명으로 2000년(1.480명) 대비 38.0%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과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3-7〉 전국 및 전북 합계출산율

○ 전라북도의 시군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본 결과, 출생아수는 군지역보다 시지역이 많은 반면 합계출산율은 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고,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진안군(1.685명), 순창군(1.619명)이며 무주군을 제외한 7개 군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모두 1을 넘어 전라북도 평균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전주시(0.883명), 익산시(0.908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시와 정읍시를 제외한 모든 시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

〈그림 3-8〉 전라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 2019년 전라북도의 출생아수는 8,971명으로 전국 출생아수(302,676명)의 2.96% 수준이며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5.9%) 보다 약 1%p 낮은 4.9%임

- 전라북도의 출생아 수는 2000년 25,173명에서 2005년 15,745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10년까지 16,10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 출생아수는 2000년 대비 약 64.4% 감소하여 전국 감소율(약 52.7%)보다 출생아수가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전국의 조출생률은 2000년 13.5%에서 2019년 5.9%로 약 7.6%p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전라북도의 조출생률도 12.6%에서 4.9%로 7.7%p 감소함. 출생아수의 감소율은 전라북도가 훨씬 높은 반면 조출생률 감소율은 비슷한 까닭은 전라북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12〉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전국	출생아수	640,089	438,707	470,171	438,420	357,771	326,822	302,676
	조출생률	13.5	9.0	9.4	8.6	7.0	6.4	5.9
전북	출생아수	25,173	15,745	16,100	14,087	11,348	10,001	8,971
	조출생률	12.6	8.3	8.7	7.6	6.1	5.5	4.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전라북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본 결과, 25~29세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30~34세, 35~39세의 출산율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2000년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25~29세는 해당 연령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가 160.2명에 육박할 정도로 해당 연령층의 출산율이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2019년에는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가 45.0명에 불과하여 2000년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34세와 35~39세의 출산율은 초혼연령 증가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2000년 82.4‰였던 30~34세 출산율은 2015년 119.0‰까지 증가하였고, 2000년 18.8‰이었던 35~39세 출산율은 46.0‰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함.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해당 연령층의 출산율이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9년 출산율은 30~34세 87.3‰, 35~39세 40.8‰로 나타남
 - 전국 역시 전라북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30세 이상의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으나 29세 이하 출산율의 감소 정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으로 전체 출산율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표 3-13〉 모의 연령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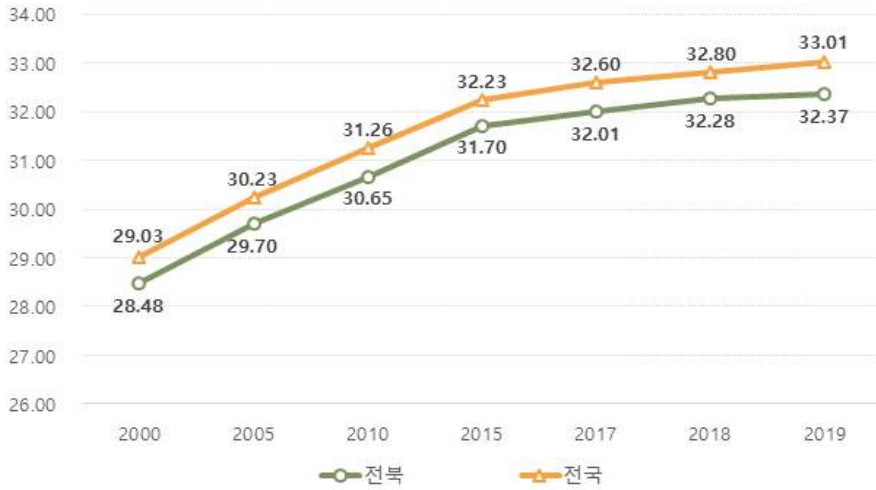
(단위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전국	15~19세	2.6	2.2	1.8	1.4	1.0	0.9	0.8
	20~24세	39.2	18.0	16.5	12.5	9.6	8.2	7.1
	25~29세	150.3	92.1	79.7	63.1	47.9	41.0	35.7
	30~34세	84.1	82.1	112.4	116.7	97.7	91.4	86.2
	35~39세	17.6	19.0	32.6	48.3	47.2	46.1	45.0
	40~44세	2.7	2.5	4.1	5.6	6.0	6.4	7.0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전북	15~19세	4.5	3.3	2.8	1.9	1.3	1.1	1.1
	20~24세	47.9	24.6	25.3	17.6	13.4	12.1	10.5
	25~29세	160.2	105.1	98.8	78.0	61.4	49.7	45.0
	30~34세	82.4	79.5	112.1	119.0	100.7	92.5	87.3
	35~39세	18.8	18.8	31.4	46.0	44.7	43.9	40.8
	40~44세	2.8	3.2	4.1	5.6	5.7	6.4	6.4
	45~49세	0.3	0.3	0.2	0.2	0.2	0.2	0.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전라북도와 전국의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초혼 연령 상승세와 비슷함
 - 전라북도의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출산연령은 32.37세로 2000년 출산연령인 28.48세보다 3.89세 증가함. 전국의 출산연령은 2000년 29.03세에서 2019년 33.01세로 출산연령이 3.98세 증가함
 - 전국과 전라북도의 출산연령을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의 출산 연령이 전국 평균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세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출산연령의 증가 정도는 여성의 초혼연령 증가세와 비슷하여 여성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

(단위 : 세)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3-9〉 전국 및 전북 출산연령

-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은 첫째 아이의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2019년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전국 평균 4.47세, 전라북도 4.46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상 순으로 증가 정도가 높게 나타남. 전라북도의 경우 첫째 아이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 26.89세에서 2019년 31.35세로 늘어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가(4.46세)하였으며 둘째 아이는 2000년 28.94세에서 2019년 33.04세로 4.1세가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셋째 아이의 평균 출산연령은 3.19세, 넷째 아이 이상 출산연령은 1.15세 증가함
 - 전국 평균은 모든 출산순위에서 전라북도보다 출산연령이 높았으며 2000년 대비 2019년 증가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나 셋째아부터는 전라북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첫째 아이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0년 27.69세에서 2019년 32.16세로 4.47세가 증가하였으며 둘째는 4.1세, 셋째는 2.95세, 넷째 아이 이상 평균 출산연령은 1.79세가 증가하였음

〈표 3-14〉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단위 : 세)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전국	첫째아	27.69	29.09	30.10	31.20	31.62	31.89	32.16
	둘째아	29.67	31.04	32.01	33.01	33.36	33.56	33.77
	셋째아	32.26	33.33	34.04	34.56	34.79	35.09	35.21
	넷째아 이상	34.56	35.43	35.76	35.95	36.08	36.72	36.35
전북	첫째아	26.89	28.30	29.18	30.40	30.78	31.15	31.35
	둘째아	28.94	30.24	31.22	32.29	32.63	32.93	33.04
	셋째아	31.37	32.53	33.31	34.05	34.23	34.31	34.56
	넷째아 이상	34.40	34.85	35.13	35.77	36.13	37.08	35.5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2018년 전라북도의 초혼 신혼부부의 출산 자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혼부부는 28,489쌍이며 그 중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4.0%(9,681쌍), 자녀가 1명인 신혼부부는 46.8%(13,329쌍),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19.2%(5,480쌍) 이며 평균 출생아 수는 0.86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특성에서 전라북도보다 전국의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별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가 38.4%, 자녀가 있는 부부가 61.6%이고 외벌이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부부 30.0%, 자녀가 있는 부부 70.0%로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부부가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상적으로 외벌이 부부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나 자녀가 더 적은 이유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주택 소유여부에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가 37.2%, 자녀가 1명인 부부가 45.8%,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가 17.1%로 나타난 반면 주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가 30.6%, 자녀가 1명인 부부가 47.9%,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가 21.5%로 나타남.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무주택인 신혼부부에 비해서 자녀가 없는 비율이 더 낮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율이 높았음

〈표 3-15〉 전라북도 신혼부부(초혼) 특성별 출산자녀(2018)

(단위 : 명, %)

		합계	자녀없음	자녀있음			평균 출생아 수	
				소계	1명	2명 이상		
전국	계 (구성비)	1,052,352 (100.0)	422,567 (40.2)	629,785 (59.8)	483,121 (45.9)	146,664 (13.9)	0.74	
	경제 활동	맞벌이	500,316 (100.0)	228,474 (45.7)	271,842 (54.3)	214,582 (42.9)	57,260 (11.4)	0.66
		외벌이	480,868 (100.0)	164,935 (34.3)	315,933 (65.7)	236,908 (49.3)	79,025 (16.4)	0.83
		기타	71,168 (100.0)	29,158 (41.0)	42,010 (59.0)	31,631 (44.4)	10,379 (14.6)	0.74
	주택 소유여부	무소유	591,010 (100.0)	260,240 (44.0)	330,770 (56.0)	258,637 (43.8)	72,133 (12.2)	0.69
		유소유	461,342 (100.0)	162,327 (35.2)	299,015 (64.8)	224,484 (48.7)	74,531 (16.2)	0.81
전북	계 (구성비)	28,489 (100.0)	9,681 (34.0)	18,809 (66.0)	13,329 (46.8)	5,480 (19.2)	0.86	
	경제 활동	맞벌이	12,900 (100.0)	4,953 (38.4)	7,947 (61.6)	5,764 (44.7)	2,184 (16.9)	0.79
		외벌이	13,270 (100.0)	3,981 (30.0)	9,289 (70.0)	6,479 (48.8)	2,810 (21.2)	0.92
		기타	2,320 (100.0)	747 (32.3)	1,573 (67.8)	1,086 (46.8)	487 (21.0)	0.90
	주택 소유여부	무소유	14,614 (100.0)	5,434 (37.2)	9,180 (62.8)	6,686 (45.8)	2,494 (17.1)	0.81
		유소유	13,876 (100.0)	4,247 (30.6)	9,629 (69.4)	6,643 (47.9)	2,986 (21.5)	0.92

자료 :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2018

다. 모자보건 인프라

- 전북에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는 32개소,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418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는 전국(700개소) 대비 4.6%가 위치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 10만명 대비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수는 8.64개로 전국 평균(5.84개)보다 많으며 강원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0~19세 인구 10만명 대비 소아청소년과의원 수는 전국 평균(154.56개)보다 적은 133.57개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전국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원 현황

(단위 : 개소, %)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원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수	%	가임기 여성 10만명 대비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수	소아청소년과의원 수	%	0~19세 인구 10만명 대비 소아청소년과의원 수
전국	700	100.0	5.84	13,897	100.0	154.56
서울특별시	138	19.7	5.53	2,967	21.3	203.42
부산광역시	43	6.1	5.76	851	6.1	163.99
대구광역시	28	4.0	5.07	630	4.5	150.89
인천광역시	41	5.9	5.82	784	5.6	151.75
광주광역시	18	2.6	5.03	429	3.1	149.97
대전광역시	30	4.3	8.44	472	3.4	174.75
울산광역시	10	1.4	3.85	232	1.7	106.78
세종특별자치시	5	0.7	5.53	104	0.7	117.81
경기도	151	21.6	4.65	3,564	25.6	141.68
강원도	27	3.9	8.85	345	2.5	138.70
충청북도	29	4.1	8.62	419	3.0	150.08
충청남도	35	5.0	7.95	519	3.7	135.20
전라북도	32	4.6	8.64	418	3.0	133.57
전라남도	23	3.3	6.64	552	4.0	179.35
경상북도	42	6.0	8.25	572	4.1	133.80
경상남도	38	5.4	5.34	864	6.2	141.78
제주특별자치도	10	1.4	6.60	175	1.3	131.6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2020.06 검색 기준

-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전라북도의 전문의 2,895명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는 각각 192명(6.6%)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각각 6.8%)과 비슷한 수준이나 약간 미치지 못함
 - 산부인과 전문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산부인과 전문의 비중이 7.6%로 나타남.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6.3%가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5번째로 산부인과 전문의 비중이 낮음
 - 소아과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문의가 전체 전문의가 17.4%를 차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의 소아과 전문의 비중이 5.6%에 불과하여 가장 낮게 나타남. 전라북도는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소아과 전문의 비중이 낮음

〈표 3-17〉 전국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2018)

(단위 : 명, %)

	계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		%		%
전국	83,147	100.0	5,692	6.8	5,670	6.8
서울특별시	22,352	100.0	1,526	6.8	1,241	5.6
부산광역시	6,465	100.0	442	6.8	416	6.4
대구광역시	4,620	100.0	308	6.7	336	7.3
인천광역시	4,085	100.0	271	6.6	297	7.3
광주광역시	2,937	100.0	213	7.3	226	7.7
대전광역시	2,917	100.0	198	6.8	211	7.2
울산광역시	1,484	100.0	113	7.6	112	7.5
세종특별자치시	247	100.0	17	6.9	43	17.4
경기도	17,223	100.0	1,224	7.1	1,414	8.2
강원도	2,051	100.0	138	6.7	126	6.1
충청북도	2,088	100.0	141	6.8	137	6.6
충청남도	2,501	100.0	185	7.4	167	6.7
전라북도	2,895	100.0	192	6.6	192	6.6
전라남도	2,533	100.0	159	6.3	147	5.8
경상북도	3,204	100.0	209	6.5	204	6.4
경상남도	4,561	100.0	292	6.4	337	7.4
제주특별자치도	984	100.0	64	6.5	64	6.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2018

○ 전라북도의 출산 관련 인프라인 산부인과와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산부인과는 50개소, 조산원은 없으며 산후조리원은 15개소로 나타남

- 산부인과는 서울특별시가 391개소, 경기도가 264개소 가장 많으며 두 지역을 제외 하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산부인과의 91개소로 가장 많음. 산부인과의 적은 지역 은 세종특별자치시(7개소), 전라남도(19개소), 제주특별자치도(23개소) 순이며 전라 북도는 전국에서 8번째로 산부인과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은 경기도(154개소), 서울특별시(132개소)가 가장 많으며 전라북도의 경 우 15개의 산후조리원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산후조리원의 2.9% 가량 비중을 차지함

〈표 3-18〉 전국 산부인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현황(2019)

(단위 : 개소)

	산부인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전국	1,311	19	518
서울특별시	391	3	132
부산광역시	67	2	28
대구광역시	91	1	24
인천광역시	59	0	30
광주광역시	35	0	8
대전광역시	46	1	12
울산광역시	33	0	7
세종특별자치시	7	0	5
경기도	264	7	154
강원도	32	0	16
충청북도	40	1	11
충청남도	42	0	16
전라북도	50	0	15
전라남도	19	1	11
경상북도	54	1	13
경상남도	58	1	27
제주특별자치도	23	1	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2019 4/4분기
보건복지부, 2019년 하반기 산후조리원 현황, 2019.12.31. 기준

- 전국의 분만취약지는 33개소이며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3개 군이 분만취약지로 지정됨
 - 분만취약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9개 군이 지정된 경상북도이고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6개 군으로 뒤를 이음. 경상남도가 4개, 전라북도가 3개, 충청북도가 2개 군이 지정되었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남도는 각 1개 군이 지정되었음
 - 전북의 경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표 3-19〉 분만 취약지 현황(2019)

	분만 취약지
인천광역시(1)	옹진군
경기도(1)	양평군
강원도(6)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청북도(2)	보은군, 괴산군
충청남도(1)	청양군
전라북도(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9)	영천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상남도(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 보건복지부, 2019.10. 기준

3. 양육 및 일·가정양립

가. 보육 및 교육 인프라

-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영유아는 72,052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4.0%가 5세 이하의 영유아임
- 전북의 전체 인구 대비 영유아 구성비는 4.0%로 전국 평균인 4.4%보다 낮음. 전국 17개 시도 중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체 인구의 7.9%가 영유아 인구이며 영유아 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3.8%로 나타난 서울 특별시와 강원도임
- 전북은 서울특별시와 강원도(3.8%), 부산광역시(3.9%)에 이어 세 번째로 영유아 구성비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 3-20〉 전국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

	총인구수	영유아 수			영유아 비율
		계	영아 (0~2세)	유아 (3~5세)	
전국	51,849,861	2,285,605	989,002	1,296,603	4.4
서울특별시	9,729,107	369,938	165,052	204,886	3.8
부산광역시	3,413,841	134,093	57,052	77,041	3.9
대구광역시	2,438,031	102,851	43,868	58,983	4.2
인천광역시	2,957,026	133,224	57,836	75,388	4.5
광주광역시	1,456,468	67,419	28,289	39,130	4.6
대전광역시	1,474,870	66,304	28,241	38,063	4.5
울산광역시	1,148,019	57,822	24,611	33,211	5.0
세종특별자치시	340,575	26,837	12,083	14,754	7.9
경기도	13,239,666	651,271	279,924	371,347	4.9
강원도	1,541,502	59,096	26,115	32,981	3.8
충청북도	1,600,007	70,938	31,208	39,730	4.4
충청남도	2,123,709	99,617	43,448	56,169	4.7
전라북도	1,818,917	72,052	30,306	41,746	4.0
전라남도	1,868,745	75,543	33,632	41,911	4.0
경상북도	2,665,836	110,542	47,718	62,824	4.1
경상남도	3,362,553	154,348	64,939	89,409	4.6
제주특별자치도	670,989	33,710	14,680	19,030	5.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 전라북도 지역별로는 전주시에 영유아가 가장 많으며 총 인구수 대비 영유아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영유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군이며 총인구수 대비 영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무주군으로 나타남

- 전주시의 영유아는 29,659명으로 전라북도 영유아의 41.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영유아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인구수 대비 영유아 비율 역시 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 내 영유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군과 무주군으로 각각 607명, 641명의 영유아가 분포되어 있음. 총인구수 대비 영유아 비율 역시 장수군 2.7%, 무주군 2.6%에 불과하여 전체 인구 중 영유아 인구 구성비도 낮게 나타남
- 대부분 시지역에 영유아 분포도가 높고, 군지역에 영유아 분포도가 낮은 경향이나 시지역에서는 김제시의 영유아가 2,400명, 구성비가 2.9%에 불과하여 낮은 편이며 군지역에서는 완주군의 영유아가 4,000명, 구성비가 4.3%로 높은 편임

〈표 3-21〉 전라북도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

	총인구수	영유아 수			영유아 비율
		계	영아 (0~2세)	유아 (3~5세)	
전라북도	1,818,917	72,052	30,306	41,746	4.0
전주시	654,394	29,659	12,318	17,341	4.5
군산시	270,131	11,754	4,737	7,017	4.4
익산시	287,771	10,944	4,642	6,302	3.8
정읍시	110,541	3,566	1,505	2,061	3.2
남원시	81,441	2,810	1,291	1,519	3.5
김제시	83,895	2,400	993	1,407	2.9
완주군	92,220	4,000	1,608	2,392	4.3
진안군	25,697	801	412	389	3.1
무주군	24,303	641	254	387	2.6
장수군	22,441	607	257	350	2.7
임실군	28,902	883	442	441	3.1
순창군	28,382	999	523	476	3.5
고창군	55,504	1,515	666	849	2.7
부안군	53,295	1,473	658	815	2.8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 전라북도에는 총 1,28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에 3.4% 수준임. 유치원은 519개소이며 전체 유치원의 5.9%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 어린이집이 523개소로 가장 많고, 민간 어린이집 429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37개소 순으로 많이 나타남. 반면 협동어린이집은 1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은 28개소로 적은 편에 속함
- 전북의 어린이집은 전국 전체 어린이집의 3.4% 수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의 4,324개소 중 전북에는 82개소(1.9%)만이 위치하고 있음. 반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전국 대비 전북에 각각 10.2%, 12.4%가 위치하고 있어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표 3-22〉 전국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국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8,837
서울특별시	5,698	1,661	28	101	1,512	2,098	33	265	830
부산광역시	1,848	211	81	35	715	739	12	55	408
대구광역시	1,322	137	113	23	573	435	5	36	355
인천광역시	2,049	213	11	13	733	1,002	6	71	403
광주광역시	1,122	48	107	21	389	519	6	32	312
대전광역시	1,288	53	40	12	357	761	7	58	260
울산광역시	842	72	13	5	412	300	5	35	200
세종특별자치시	359	51	9	4	107	173	0	15	60
경기도	11,305	924	66	116	3,642	6,222	67	268	2,237
강원도	1,036	109	107	40	342	393	4	41	368
충청북도	1,130	81	104	31	435	440	4	35	328
충청남도	1,812	128	114	47	582	887	2	52	499
전라북도	1,288	82	137	88	429	523	1	28	519
전라남도	1,147	147	160	49	364	394	2	31	542
경상북도	1,844	160	82	36	752	758	1	55	707
경상남도	2,777	209	98	47	1,003	1,358	4	58	686
제주특별자치도	504	38	73	39	221	115	0	18	123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통계, 2019.12.31.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2019

- 전북 내 시군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1,288개소의 어린이집 중 42.3%에 해당하는 545개소의 어린이집이 전주시에 위치함. 반면 진안군과 장수군에는 각각 6개와 7개, 무주군에서 9개의 어린이집이 위치하여 보육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짐

〈표 3-23〉 전라북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계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라북도	1,288	82	137	88	429	523	1	28	519
전주시	545	16	38	16	198	266	1	10	120
군산시	206	16	20	12	74	78	0	6	67
익산시	201	11	22	13	60	90	0	5	83
정읍시	68	7	12	5	16	27	0	1	39
남원시	58	1	10	8	22	17	0	0	28
김제시	46	4	9	6	11	15	0	1	40
완주군	73	7	13	6	24	21	0	2	37
진안군	6	2	0	4	0	0	0	0	12
무주군	9	4	1	2	2	0	0	0	9
장수군	7	2	4	0	0	1	0	0	8
임실군	10	0	2	6	1	0	0	1	14
순창군	11	6	1	3	0	1	0	0	15
고창군	25	4	5	5	6	4	0	1	22
부안군	23	2	0	2	15	3	0	1	25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통계, 2019.12.31. 기준
전라북도, 전라북도기본통계, 2019

- 전북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4.8%로 전국 평균(59.7%)보다 높으나 어린이집 정원의 충족률은 74.9%로 전국 평균(80.9%)보다 낮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전북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46,698명으로 전체 72,052명의 영유아 중 64.8%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이용률인 59.7%보다 5.1%p 높게 나타남. 전라북도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반면 전라북도의 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의 정원은 62,327명이나 현원은 46,698명에 불과하여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4.9%이며 이는 전국 평균 정원 충족률인 80.9%보다 6.0%p 낮음. 전라북도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광주광역시(71.9%)와 전라남도(72.4%)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24〉 전국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

	영유아 수	어린이집 보육 정원	어린이집 보육 현원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2,285,605	1,686,873	1,365,085	59.7	80.9
서울특별시	369,938	254,538	217,444	58.8	85.4
부산광역시	134,093	86,553	70,977	52.9	82.0
대구광역시	102,851	69,390	54,641	53.1	78.7
인천광역시	133,224	91,615	76,084	57.1	83.0
광주광역시	67,419	57,756	41,530	61.6	71.9
대전광역시	66,304	47,923	38,526	58.1	80.4
울산광역시	57,822	39,650	33,315	57.6	84.0
세종특별자치시	26,837	19,300	15,525	57.8	80.4
경기도	651,271	464,409	389,004	59.7	83.8
강원도	59,096	49,912	37,902	64.1	75.9
충청북도	70,938	60,113	47,266	66.6	78.6
충청남도	99,617	82,697	65,304	65.6	79.0
전라북도	72,052	62,327	46,698	64.8	74.9
전라남도	75,543	66,001	47,796	63.3	72.4
경상북도	110,542	85,567	64,120	58.0	74.9
경상남도	154,348	119,534	93,756	60.7	78.4
제주특별자치도	33,710	29,588	25,197	74.7	85.2

주 : 어린이집 이용률 = 어린이집 보육 현황/영유아 수*100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어린이집 보육 정원/어린이집 보육 현원*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통계, 2019.12.31. 기준

-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원시 (76.2%)였으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79.7%)로 나타남
- 전라북도 내 영유아 인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남원시(76.2%), 군산시(68.3%), 정읍시(65.9%) 등이었으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진안군(29.7%), 순창군(40.3%), 임실군(46.5%) 등으로 나타남. 특히 진안군의 경우 영유아 수에 비

해 어린이집 보육 정원이 매우 낮은 편으로 진안군의 영유아가 다른 시군에 비해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전주(79.7%), 정읍(76.3%), 군산(74.8%)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실(59.1%), 진안(60.1%), 김제(62.0%)는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낮게 나타남

〈표 3-25〉 전라북도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

	영유아 수	어린이집 보육 정원	어린이집 보육 현원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라북도	72,052	62,327	46,698	64.8	74.9
전주시	29,659	24,670	19,650	66.3	79.7
군산시	11,754	10,737	8,027	68.3	74.8
익산시	10,944	9,314	6,900	63.0	74.1
정읍시	3,566	3,078	2,349	65.9	76.3
남원시	2,810	3,127	2,142	76.2	68.5
김제시	2,400	2,381	1,476	61.5	62.0
완주군	4,000	3,681	2,598	65.0	70.6
진안군	801	396	238	29.7	60.1
무주군	641	593	399	62.2	67.3
장수군	607	519	343	56.5	66.1
임실군	883	695	411	46.5	59.1
순창군	999	555	403	40.3	72.6
고창군	1,515	1,399	981	64.8	70.1
부안군	1,473	1,182	781	53.0	66.1

주 : 어린이집 이용률 = 영유아 수/어린이집 보육 현원*100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어린이집 보육 정원/어린이집 보육 현원*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통계, 2019.12.31. 기준

- 전라북도의 특수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369개소로 가장 많으며 영아 전담 어린이집 31개소, 방과 후 어린이집 29개소, 휴일 어린이집 4개소, 24시간 어린이집 3개소 순으로 나타남

-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방과 후 어린이집은 전국 대비 전라북도 설치율이 다른 특수 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 비율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전국 전체의 7.7%가 전라북도에 있으며 방과 후 어린이집은 12.7%가 전라북도에서 운영되고 있음

〈표 3-26〉 전라북도 특수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

	영아전담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어린이집 수	정원 충족률	어린이집 수	정원 충족률	어린이집 수	정원 충족률	어린이집 수	정원 충족률	어린이집 수	정원 충족률
전국	405	83.6	229	72.5	8,015	83.1	312	82.7	153	81.9
서울특별시	35	85.8	80	82.0	2,092	87.1	76	84.9	28	86.8
부산광역시	50	84.2	5	78.4	327	82.0	3	92.2	12	80.8
대구광역시	22	87.0	1	56.8	248	80.2	0	-	3	67.1
인천광역시	17	89.2	20	81.8	300	84.8	1	61.5	16	87.4
광주광역시	18	82.8	10	67.7	259	69.5	6	55.9	9	71.9
대전광역시	14	81.6	3	54.0	365	81.2	2	55.8	2	92.6
울산광역시	21	91.7	1	77.2	116	87.9	27	89.3	9	82.1
세종특별자치시	0	-	0	-	33	-	1	97.6	0	-
경기도	42	90.0	8	74.3	1,874	86.6	49	88.7	41	80.0
강원도	15	74.3	4	54.8	127	78.6	7	66.5	1	100.0
충청북도	11	80.9	9	65.7	275	80.1	1	100.0	4	72.6
충청남도	22	76.9	8	76.1	269	78.1	8	73.3	3	87.0
전라북도	31	85.1	29	64.3	369	76.1	4	71.6	3	82.1
전라남도	41	79.2	20	61.0	294	74.0	10	75.7	2	52.7
경상북도	14	81.3	2	38.6	269	77.0	3	90.0	4	88.6
경상남도	37	76.4	6	78.2	539	80.9	18	84.0	14	86.1
제주특별자치도	15	86.8	23	84.8	259	84.7	96	82.9	2	90.0

주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어린이집 보육 정원/어린이집 보육 현원*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통계, 2019.12.31. 기준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개소이며 도내 시군 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비율은 42.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전국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2개소로 17개 시도 229개의 시군과 자치구 대비 설치 비율은 66.4%로 나타남. 서울특별시는 25개 시군에 2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설치 비율이 104.0%로 가장 높고, 경기도 103.2%,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로 높게 나타남. 반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에 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설치 비율이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38.9%, 경상북도 39.1%, 울산광역시 40.0% 순으로 설치 비율이 낮음
- 전라북도는 17개 시도 중 6번째로 설치 비율이 낮음

〈표 3-27〉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명, %)

	시군/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비율
전국	229	152	66.4
서울특별시	25	26	104.0
부산광역시	16	9	56.3
대구광역시	8	7	87.5
인천광역시	10	9	90.0
광주광역시	5	5	100.0
대전광역시	5	1	20.0
울산광역시	5	2	40.0
세종특별자치시	1	1	100.0
경기도	31	32	103.2
강원도	18	7	38.9
충청북도	11	10	90.9
충청남도	15	10	66.7
전라북도	14	6	42.9
전라남도	22	9	40.9
경상북도	23	9	39.1
경상남도	18	12	66.7
제주특별자치도	2	2	100.0

주 : 시군/자치구 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가 설치 비율임

자료 : 여성가족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2020.1.1. 기준

○ 전라북도의 공동육아나눔터는 10개소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 273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의 3.7% 수준임

- 전라북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익산시(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표 3-28〉 전라북도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단위 : 개소)

	전국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개수	273	10	1	1	2	0	1	1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개수	1	0	1	1	0	0	1	0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공동육아나눔터 기관 현황, 2019.11.8. 기준

- 전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76.4%, 중학교 66.4%, 고등학교 56.1%, 일반고등학교 62.1%로 전국 평균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편임
 -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3.5%, 중학교 71.4%, 고등학교 61.0%, 일반고등학교 67.9%로 전라북도 사교육 참여율보다 5~7%p가 더 높음
 - 17개 시도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모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은 모든 학교급별 평균으로는 전국에서 3번째로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지역이며 초등학교는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가장 사교육 참여율이 낮고, 중학교는 4번째, 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는 8번째로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9〉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국	74.8	83.5	71.4	61.0	67.9
서울특별시	80.0	87.6	77.2	68.9	77.3
부산광역시	75.9	84.4	72.4	62.9	72.4
대구광역시	75.5	84.3	73.5	61.5	70.4
인천광역시	75.1	83.4	71.9	61.1	70.1
광주광역시	73.7	82.1	73.2	59.1	64.5
대전광역시	74.5	83.8	68.7	62.5	70.0
울산광역시	73.0	79.9	71.1	60.6	68.3
세종특별자치시	81.3	88.0	79.6	63.4	65.1
경기도	78.3	86.7	73.5	65.1	70.2
강원도	65.7	77.8	60.2	49.0	53.7
충청북도	69.0	81.0	63.3	50.5	59.3
충청남도	69.4	78.5	68.4	52.0	58.6
전라북도	68.3	76.4	66.4	56.1	62.1
전라남도	60.9	69.0	58.3	48.5	56.6
경상북도	69.7	80.2	66.4	53.3	61.6
경상남도	72.0	80.9	69.8	55.7	60.1
제주특별자치도	72.1	82.1	67.4	55.8	62.7

자료 :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19

○ 전라북도는 평균 23.9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학교 급에서 전국 평균보다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1만원까지도 낮게 나타남

- 전라북도 초등학교 평균 사교육비는 20.4만원, 중학교는 27.6만원, 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는 각각 26.7만원, 31.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전라남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5번째와 7번째로 낮은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지역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라남도, 중학교는 강원도로 나타남

〈표 3-30〉 학교급별 사교육비

(단위 : 만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국	32.1	29.0	33.8	36.5	42.5
서울특별시	45.1	38.5	46.3	55.6	65.2
부산광역시	31.6	28.8	32.5	36.0	44.2
대구광역시	32.9	29.5	34.2	37.5	45.4
인천광역시	31.3	27.8	33.4	36.3	44.3
광주광역시	27.6	24.3	31.9	29.7	33.9
대전광역시	31.1	27.9	31.7	36.4	42.5
울산광역시	27.4	24.8	30.3	30.2	35.4
세종특별자치시	34.1	30.6	40.2	37.3	38.6
경기도	35.8	33.2	35.7	41.4	46.0
강원도	22.0	22.5	20.9	21.9	25.3
충청북도	24.3	23.9	25.9	23.6	28.9
충청남도	23.7	21.6	28.1	23.8	28.1
전라북도	23.9	20.4	27.6	26.7	31.3
전라남도	18.1	15.1	22.6	19.7	24.7
경상북도	22.5	21.4	25.7	21.6	26.2
경상남도	24.8	23.2	28.9	24.4	27.1
제주특별자치도	25.8	22.8	29.8	28.1	33.0

자료 :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19

○ 전라북도의 교육비의 대한 인식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1.1%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8.1%, 부담스럽지 않다 8.8%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과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임

- 가장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률이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71.2%가 응답함. 전라북도의 경우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에 이어 4번째로 부담스럽다는 응답률이 적게 나타난 지역임

〈표 3-31〉 교육비에 대한 인식

	계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별로 부담 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 스럽지 않다	
전국	100.0	64.4	24.2	40.2	26.7	8.8	7.3	1.5
서울특별시	100.0	63.8	24.8	39.0	29.5	6.7	5.2	1.5
부산광역시	100.0	71.2	31.9	39.3	20.5	8.3	7.3	1.0
대구광역시	100.0	61.7	18.8	42.9	27.2	11.1	9.4	1.7
인천광역시	100.0	66.6	28.7	37.9	27.4	6.0	4.6	1.4
광주광역시	100.0	64.4	13.3	51.1	28.5	7.0	6.7	0.3
대전광역시	100.0	68.6	31.1	37.5	23.0	8.5	7.2	1.3
울산광역시	100.0	64.7	25.3	39.4	29.0	6.3	5.8	0.5
세종특별자치시	100.0	62.7	23.7	39.0	29.2	8.1	6.9	1.2
경기도	100.0	67.9	25.8	42.1	23.4	8.8	7.2	1.6
강원도	100.0	53.4	16.4	37.0	36.7	9.8	8.6	1.2
충청북도	100.0	63.6	25.6	38.0	26.2	10.3	9.7	0.6
충청남도	100.0	56.2	21.6	34.6	33.7	10.2	9.0	1.2
전라북도	100.0	61.1	20.5	40.6	28.1	10.8	8.8	2.0
전라남도	100.0	63.6	23.1	40.5	26.2	10.2	7.9	2.3
경상북도	100.0	63.7	21.5	42.2	24.6	11.7	7.9	3.8
경상남도	100.0	57.6	20.4	37.2	29.7	12.7	10.7	2.0
제주특별자치도	100.0	62.8	18.7	44.1	28.0	9.2	8.5	0.7

주 : 학생이 있는 가구의 30세 이상 가구주가 응답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나. 일·가정양립 관련 현황

-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전체 유배우 가구 443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38천 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53.8%에 달함
 - 전국의 유배우 가구는 12,305천 가구이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662천 가구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6.0%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전라북도의 맞벌이 가구(53.8%)보다 전체 유배우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2011년과 비교할 때 전라북도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51.6%에서 53.8%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역시 2011년 대비 2019년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증가하여 맞벌이 가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표 3-32〉 맞벌이 가구

(단위 : 천 가구, %)

	2011			2019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맞벌이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맞벌이 비율
전국	11,761	5,241	44.6	12,305	5,662	46.0
전라북도	449	232	51.6	443	238	53.8

주 :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이며 동거 여부는 관계없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 전라북도 내 성별 고용률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는 30~39세로 나타났다으며 전라북도 15~29세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임
 - 15~29세의 고용률은 전국의 경우 남성 43.2%, 여성 45.3%로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반면 전라북도는 남성 36.0%, 여성 28.9%로 여성의 대학졸업시기가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률이 더 낮음. 특히 전북 15~29세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북의 청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0~39세는 성별 고용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연령대로 전북은 남성의 고용률(87.4%)이 여성(62.9%)보다 24.5%p 높았고, 전국은 여성(62.7%)보다 남성의 고용률(88.7%)이 26.0%p 높게 나타남
 - 40대와 50대 역시 고용률의 성별격차가 20%p 이상이었으며 40대의 경우 전라북도 여성의 고용률은 68.7%로 전국 평균(65.3%)보다 높아 양육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9)

(단위 : %, %p)

	전국				전북			
	계	남성	여성	차이	계	남성	여성	차이
계	61.7	71.1	52.5	18.6	59.8	69.1	50.9	18.1
15~29세	44.3	43.2	45.3	-2.1	32.7	36.0	28.9	7.1
30~39세	76.2	88.7	62.7	26.0	75.5	87.4	62.9	24.5
40~49세	78.5	91.4	65.3	26.1	78.4	88.7	68.7	20.1
50~59세	76.0	86.5	65.6	20.9	75.3	85.7	63.8	21.9
60세 이상	43.4	53.6	35.1	18.5	50.8	61.0	43.1	18.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경력단절여성은 약 39천명으로 전국 경력단절여성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보다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15~54세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7%로 전국 평균(19.2%)보다 낮으며 15~54세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 역시 40.9%로 전국 평균(50.5%)보다 낮은 수준임

〈표 3-34〉 경력단절여성 규모(2019)

(단위 : 천명, %)

	15~54세 기혼여성	비취업 여성	경력단절여성	15~54세 기혼여성 대비 비취업여성 비중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15~54세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전국	8,844	3,366	1,699	38.1	19.2	50.5
전라북도	286	96	39	33.4	13.7	40.9

자료 : 통계청,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도자료, 2019.11.26.

- 육아휴직은 과거에 비해 매우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임
-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4,359명이며 그 중 남성은 576명(13.2%) 여성은 3,783명(86.8%)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같은 기간 전국의 육아휴직자 비중과 비교해보았을 때 전국은 220,858명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6,396명(16.5%), 여성은 184,462명(83.5%)으로 남성의 비중이 전북보다 약 3.3%p 높음
- 육아휴직자의 성별 비중은 아직도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점은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남성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임. 2011년 기준 전국의 육아휴직자는 91,083명이었으며 그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6%에 불과하였음. 전북 역시 1,651명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고작 26명으로 나타남. 그러나 8년 새에 전체 육아휴직자는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20배 이상 증가하였음.

- 전라북도의 2019년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은 49.2%, 여성은 8.6%가 증가하여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편임

〈표 3-35〉 성별 육아휴직자

(단위 : 명, %)

	전국			전북		
	2011	2019	전년대비 증가율	2011	2019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91,083 (100.0)	220,858 (100.0)	7.9	1,651 (100.0)	4,359 (100.0)	12.6
남성	2,372 (2.6)	36,396 (16.5)	33.1	26 (1.6)	576 (13.2)	49.2
여성	88,711 (97.4)	184,462 (83.5)	4.0	1,625 (98.4)	3,783 (86.8)	8.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각 년도

-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육아휴직보다는 활용도가 낮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전라북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70명이며 그 중 남성은 20명(11.8%) 여성은 150명(88.2%)임. 전국의 경우 전체 7,884명 중 남성은 1,028명(13.0%), 여성은 6,856명(87.0%)으로 전라북도와 성별 비중이 비슷함
- 전라북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78.9%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45.9%)보다 더 많이 늘었으며 남성은 42.9%, 여성은 85.2%가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음

〈표 3-3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단위 : 명, %)

	전국			전북		
	2011	2019	전년대비 증가율	2011	2019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40 (100.0)	7,884 (100.0)	45.9	0 (-)	170 (100.0)	78.9
남성	2 (5.0)	1,028 (13.0)	40.1	0 (-)	20 (11.8)	42.9
여성	38 (95.0)	6,856 (87.0)	46.9	0 (-)	150 (88.2)	85.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각 년도

- 전라북도의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117개이며 그 중 중소기업은 87개, 공공기관은 30개임. 전라북도의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전체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약 3.1% 수준임

〈표 3-37〉 가족친화 인증기업(관) 현황(2019)

(단위 : 가구, %)

	전국	전라북도	%
전체	3,833	117	3.1
대기업	408	0	0.0
중소기업	2,445	87	3.6
공공기관	980	30	3.1

자료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가족친화기업(관) 리스트, 2019년 12월 기준

-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전국과 전북, 아내와 남편 모두 부인이 주로 가사를 담당한다는 응답률이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가사분담이 부인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전국 아내의 응답률이 77.7%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과 전북,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분담이 부인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음
 -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률은 20% 내외로 나타났으며 남편 위주로 가사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응답률은 전북 남편의 응답률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과 전북의 아내가 2.8%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3-38〉 가사분담 실태

(단위 : %)

		계	부인 위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위주		
			부인이 전적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이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전국	남편	100.0	76.2	21.9	54.3	20.2	3.7	2.9	0.8
	아내	100.0	77.7	26.9	50.8	19.5	2.8	2.4	0.4
전북	남편	100.0	75.9	22.5	53.4	20.1	4.0	3.0	1.0
	아내	100.0	76.9	26.2	50.7	20.4	2.8	2.2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전북의 성별 가사노동 시간은 2019년 기준 남성 59분, 여성 3시간 6분으로 하루 평균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약 2시간 07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할 때 남성은 소폭 증가하였고 여성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대비 2019년 성별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는 전국은 24분, 전북은 28분 감소하였음

〈표 3-39〉 성별 가사노동 시간

(단위 : 시간, 분)

	2009			2019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전국	0:38	3:09	2:31	0:51	2:58	2:07
전북	0:43	3:18	2:35	0:59	3:06	2:07

주 : 가사노동 시간은 행동분류 중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임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가정생활을 우선시하고, 여성보다 남성이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39.7%, 여성의 27.2%가 응답하여 여성보다 남성의 응답률이 약 12.5%p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12.3%, 여성의 15.8%가 응답하여 여성의 응답률이 약 3.5%p 높게 나타남. 둘 다 비슷하게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남성 48.0%, 여성 57.0%가 응답함
- 전국과 비교한 결과 전북은 전국에 비해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전국은 전북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40〉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단위 : %)

		계	일을 우선시			둘다 비슷	가정생활을 우선시		
				주로 일을 우선시	대체로 일을 우선시		대체로 가정생활 우선시	주로 가정생활 우선시	
전국	남성	100.0	48.1	20.4	27.7	40.3	11.6	9.3	2.3
	여성	100.0	33.9	15.0	18.9	49.5	16.6	13.8	2.8
전북	남성	100.0	39.7	15.4	24.3	48.0	12.3	10.7	1.6
	여성	100.0	27.2	9.3	17.9	57.0	15.8	14.8	1.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4.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정책분석

가.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개요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은 2018년 1,747건에서 2019년 1,784건으로 증가함
- 생애단계별 저출산지원 정책은 2019년 기준 결혼 74건, 임신 428건, 출산 666건, 육아 504건, 가족 112건으로 출산지원 정책이 가장 많음. 최근의 만혼이나 비혼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여 결혼 지원정책은 2018년에 비해 절반 이상이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 정책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019년 기준 303건이며 다음으로는 경북 195건, 경남 148건, 충남 140건 순임
- 전북은 2019년 기준 117건이며 2018년도에 비해 사업 수가 24건이 증가한 가운데 생애단계별로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지원 정책이 가장 많음. 결혼지원 정책은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보다 증가하였으나 가족 관련 지원정책은 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표 3-41〉 전국 출산지원정책 사업개요 : 2018년~2019년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19년																		
결혼	2	6	1	1	0	1	2	0	13	3	7	6	9	9	11	2	1	74
임신	16	22	29	17	9	7	4	4	75	21	11	33	20	57	61	41	1	428
출산	48	51	13	17	15	13	16	2	95	40	43	49	49	88	65	60	2	666
육아	34	36	22	17	17	14	6	1	100	26	30	41	33	30	55	38	4	504
가족	5	12	14	9	1	6	5	1	20	2	8	11	6	2	3	7	0	112
전체	105	127	79	61	42	41	33	8	303	92	99	140	117	186	195	148	8	1,784
2018년																		
결혼	1	7	1	1	0	1	1	0	3	5	2	6	4	4	7	4	2	49
임신	19	26	30	13	9	9	4	4	69	29	16	37	20	62	74	62	1	484
출산	52	49	16	18	10	11	12	2	91	28	35	52	38	79	61	59	2	625
육아	63	33	18	11	15	16	9	1	81	25	30	39	28	23	53	36	4	485
가족	9	9	12	6	1	4	5	1	17	2	7	11	3	1	6	9	1	104
전체	154	124	77	49	35	41	31	8	261	89	90	145	93	169	201	170	10	1,747

자료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 생애단계를 결혼(전)과 결혼, 임신(전)과 임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 합쳐 합산한 수치임

○ 저출산정책을 생애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2019년 기준 출산 단계가 전체 지원정책의 3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육아 28.3%, 임신 24.0%, 가족 6.3%, 결혼 4.2% 순임

- 전북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출산단계의 지원정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8년 대비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은 소폭 감소한 반면 결혼지원 정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가족지원 정책도 소폭 증가함
- 전국 평균 대비 전북은 결혼단계 및 출산단계의 정책 비율은 높지만 임신과 가족단계의 지원정책 비율은 소폭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42〉 생애단계별 전국 출산지원정책 사업비율: 2018~2019년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19년																		
결혼	2.9	4.7	1.3	1.6	0.0	2.4	6.0	0.0	4.3	3.3	7.0	4.2	7.7	4.9	5.7	1.4	12.5	4.2
임신	15.2	17.3	36.7	27.9	21.4	17.0	12.2	50.0	24.7	22.8	11.2	23.6	17.1	30.6	31.3	27.7	12.5	24.0
출산	45.7	40.2	16.5	27.9	35.7	31.7	48.5	25.0	31.4	43.5	43.4	35.0	41.9	47.3	33.3	40.5	25.0	37.3
육아	32.4	28.3	27.8	27.9	40.5	34.1	18.2	12.5	33.0	28.3	30.3	29.3	28.2	16.1	28.2	25.7	50.0	28.3
가족	4.8	9.4	17.7	14.8	2.4	14.6	15.2	12.5	6.6	2.2	8.1	7.9	5.1	1.1	1.5	4.7	0.0	6.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8년																		
결혼	0.6	5.6	1.3	2.0	0.0	2.4	3.2	0.0	1.2	5.6	2.2	4.2	4.3	2.4	3.5	2.4	20.0	2.8
임신	12.3	20.9	39.0	26.5	25.7	22.0	13.0	50.0	26.4	32.6	17.8	25.4	21.5	36.7	36.9	36.5	10.0	27.7
출산	40.3	39.5	20.8	36.7	28.6	26.8	38.7	25.0	34.9	31.5	38.9	35.9	40.9	46.7	30.3	34.7	20.0	35.8
육아	40.9	26.6	23.4	22.4	42.9	39.0	29.0	12.5	31.0	28.1	33.3	26.9	30.1	13.6	26.4	21.2	40.0	27.8
가족	5.8	7.3	15.6	12.2	2.9	9.8	16.1	12.5	6.5	2.2	7.8	7.6	3.2	0.6	3.0	5.3	10.0	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 생애단계를 결혼(전)과 결혼, 임신(전)과 임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 합쳐 합산한 수치임

나. 전라북도 및 시·군별 저출산 사업내용 분석

1) 저출산 시책 현황

- 2020년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의하면 전라북도 저출산 관련 시행 사업건수는 198개 사업, 총 210,624백만 원임
 - 전라북도 주관은 총 36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18.1%에 해당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01,251백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8.1%에 해당함
 - 시군별로 보면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으로는 군산·김제·남원·정읍 등의 순임. 저출산 시행계획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수립한 시군은 김제시이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수립한 지역은 임실·순창·장수 등임

〈표 3-43〉 2020년 전라북도 및 시군별 저출산 추진사업 현황

(단위:개, 백만원)

지역	전체	전북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	완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고창	부안
사업 수	198	36	10	18	11	16	16	14	8	4	8	13	12	12	10	10
사업 비	210,624	101,251	1,372	4,356	4,366	35,719	2,280	2,479	1,645	490	521	1,154	2,141	714	1,277	3,532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 전라북도 시행계획(2020), 전라북도

-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지원 사업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보면, 결혼지원 사업은 단 6개의 시군에서만 추진 중에 있음. 임신·출산 지원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가운데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은 만혼화와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출산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현재의 6개 기초지자체 이외에 2020년 7월 1일자로 완주군도 인구증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임
 - 전체사업 가운데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절반에 가까움.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남원시임
 -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수혜자의 대부분이 공무원에 한정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표 3-44〉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 (일·가정양립)	기타 (인식개선)	전체
전라북도	-	10	19	3	4	36
전주	-	8	1	1	-	10
군산	-	8	2	4	4	18
익산	-	5	5	1	-	11
김제	1	8	-	1	6	16
남원	-	10	4	1	1	16
정읍	-	5	4	2	3	14
완주	-	6	1	-	1	8
임실	-	4	-	-	-	4
순창	1	3	3	1	-	8
무주	1	7	1	2	2	13
진안	1	4	4	-	3	12
장수	1	3	6	-	2	12
고창	1	4	5	-	-	10
부안	-	7	1	1	1	10
전체	6	92	56	17	27	198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 전라북도 시행계획(2020), 전라북도

2)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 유형별 분석

○ 본 절에서는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유형화 한 강영주·금창호 (2017)가 제시하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전북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고자 함

- 강영주·금창호(2017)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유형화하여 출산율 결정 요인과의 정책 부합성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유형화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책설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정책을 4단계의 생애주기별로 구분함. 즉 결혼 단계 → 임신·출산 단계 → 육아 단계 → 다자녀 출산 및 육아사업으로 구분함. 본 연구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다자녀출산 및 육아’의 단계를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함

- 둘째, 각각의 저출산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통사업’인지,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사업’인지의 기준을 정함. 이러한 기준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주도이면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통사업’으로 정하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자체사업’으로 구분함
 - 셋째, 정책설계의 3요소 즉 정책대상(누구에게), 정책목표(무엇을), 정책수단(어떻게)을 기준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구분함.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전북의 저출산 정책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사례 수(빈도)를 분석함
- 이상 저출산 정책 유형화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전북의 저출산 정책이 생애단계 별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추진 방향성 및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결혼지원시책

- 우선 결혼지원 시책은 결혼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으로 2020년 현재 시군 별 자체사업만 총 6개가 추진되고 있음
- 결혼지원 사업은 소득기준 제한과는 관계없이 모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기회 지원을 목표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결혼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인구감소가 현저한 군 단위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김제시를 제외한 고창, 무주, 진안, 장수, 순창 등의 5개 군에서 추진 중임

〈표 3-45〉 결혼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생애단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기준			해당 저출산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결혼지원 (6)	자체사업 (6)	전체대상	현금지원	결혼기회 지원	신랑신부 결혼비용지원(1)
					결혼장려금 지원(5)

■ 임신출산지원시책

- 임신·출산 지원 시책은 임신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으로 총 92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자체사업의 비중이 75개(81.5%)로 많음
- 92개의 임신출산 지원 시책 중 공통사업으로는 1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표 3-46〉 임신출산지원 시책 유형화

생애단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기준			해당 지출산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임신출산 지원 (92)	공통사업 (17)	전체대상 (9)	비용지원	생활비지원	일반임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2)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자연치유캠프 지원(1)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1)
			서비스공급	임신출산 비용절감	출산여성능가도우미 지원(1)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센터(1) 출산취약지역 임신부이송(1) 육아용품(영유아차량보조시트)(1)
					다자녀가정아이조아카드발급(1)
			기타	출산캠페인	
		일정소득 기준이하(8)	비용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8)
	자체사업 (75)	전체대상 (70)	비용지원	의료비지원	출생아의료비지원(1) 한방난임치료(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0)
				임신출산비용 절감	산후조리비용지원(2)
			서비스공급	의료비지원	산모기형아검사(2)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3)
				임신출산 비용절감	임신부영양제 지원(1) 임신부119 안심 콜 서비스(1) 임산부건강관리지원(6) 모자보건사업(1)
					출산축하 선물
					출산축하용품(7) 넷째아이상출산용품비지원(1)
				임산부배려	산모산후우울증검사(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양성(1)
					출산육아 정보제공
					임산부출산육아교실(4) 모유수유클리닉(2)
			현금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임신축하금지원(1) 출산장려금지원(14) 귀농귀촌인출산장려금(1) 다자녀가정양육비지원(1)
			기타	출산캠페인	출산축하카드발송(1) 출산중량제(쓰레기봉투)지원(1) 아기주민증발급(4) 다자녀가정행복축제(1)
		일정소득 기준이하(2)	비용지원	임신출산비용 절감	산후조리비용지원(1) 장애인출산가정 출산지원금(1)
		공무원 (3)	현금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다자녀직원복지포인트확대(2)
			기타	출산캠페인	다자녀공무원실적가점부여(2)

- 이 가운데 '난임부부 자연치유캠프지원' 사업과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2020년 전라북도 신규사업임
-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센터' 사업이나 '출산취약지역 임신부이송' 사업 등은 분만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군 단위는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관련 인프라가 축소되거나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 임신출산지원 사업은 대부분 시군 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 사업이 대상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음
- 소득기준을 제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임실군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과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정도가 해당함. 이외에 공무원의 다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인사고과 반영을 위한 실적가점 부여 등이 있음

■ 육아지원시책

- 육아지원 시책은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며 공통사업18개와 자체사업 38개를 포함하여 총 56개 시책이 추진 중에 있음
- 소득기준 제한을 두고 있는 사업은 공통사업 12개, 시군별 자체사업 11개, 공무원 대상의 사업 3개 정도로 총 26개 사업(46.4%)이 해당하고 있어 육아지원 사업은 일반인 대상보다 소득기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많은 편임
- 자체사업 38개 중 소득기준 제한을 두고 있는 사업은 총 11개로 지역아동센터나 한부모 및 조손가정, 결혼이민자 등 주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확대나 운영지원 사업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반인 대상의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창군의 24시간 시간제보육 이외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곳의 자치단체 등이 있으나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표 3-47〉 육아지원 시책 유형화

생애단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기준			해당 저출산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육아지원 (56)	공통사업 (18)	전체대상 (6)	서비스공급	보육기관 운영지원	취약지역 어린이집운영(1) 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1)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3~5세 누리과정보육료(1)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1)
			현금지원	보육기관 운영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지원(1) 보육교직원처우개선편비(1)
		일정소득 기준이하 (12)	서비스공급	자녀교육지원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1)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지원(1)
					지역아동센터종사자행사지원(1) 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별수당(1)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아동급식지원(1) 보호대상아동생활안전지원(1)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1)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1)
				생활비지원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1)
				자녀교육지원	글로벌마을학당(1)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1)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어린이장남감도서관운영(5) 아동놀이터설치및운영(1) 어린이집안전공제회(4) 영유아급간식비지원(3) 24시간보육서비스(1) 돌봄서비스(3) 육아종합센터지원(2)
				보육기관 운영지원	어린이집운영지원(1) 어린이집공기청정기렌탈지원(1)
			자녀교육지원	현금지원	복스타트사업(1) 초등학생가방구입(1)
					보육교직원처우개선편비(1)
	자체사업 (38)	전체대상 (24)	서비스공급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5)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1)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1) 조손가정교육지원 (1) 결혼이민자언전면허취득지원(1) 다문화가족문화체험및한마당(2)
			보육기관 운영지원	자녀교육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2)
			현금지원	보육서비스이용지원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생활비지원	
			행정편의	공무원 (3)	
			서비스공급	보육서비스이용지원	
			현금지원	보육서비스이용지원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생각비지원	
			행정편의	공무원 (3)	
			서비스공급	보육서비스이용지원	
			현금지원	보육서비스이용지원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생각비지원	
			행정편의	공무원 (3)	
			서비스공급	보육서비스이용지원	
			현금지원	보육서비스이용지원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생각비지원	
			행정편의	공무원 (3)	

■ 가족(일·가정양립지원)시책

- 가족지원 시책은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공통사업으로는 남성육아휴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활용 시 우대지원 해주는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
- 자체사업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불과 4개에 그치고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2개로 일·가정양립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자체사업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사업은 주로 아빠와 함께 하는 행사위주의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음

〈표 3-48〉 가족(일·가정양립지원)시책 유형화 결과

생애단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기준			해당 저출산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일가정 양립 (17)	공통사업 (1)	중소기업 (1)	기타	일·가정양립 지원	남성육아휴직활성화(1)
	자체사업 (16)	전체대상 (4)	기타	일·가정양립 지원	익산시아빠랑행복캠프(1)
					공감소통1박2일가족캠프(1)
					아빠와자녀가 함께하는 힐링데이(1)
					출산친화분위기조성(1)
		공무원 (12)	기타	일·가정양립 지원	유연근무제활성화(3)
					육아돌봄근로시간 단축(3)
					파트타임제 운영(1)
					남성육아휴직출산휴가활성화(1)
					가족친화기업문화확산(1)
					일·가정양립가족의 날 운영(3)

■ 2040세대 삶의 기반 시책

-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으로는 총 27개 사업이 해당함. 전라북도와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3개와 시군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4개에 해당함
- 전라북도와 시군이 공통사업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농촌과 저소득층 학령기 대상의 사업이 있으며 이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지역청년을 위해 1년동안 고용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청년취업지원' 사업 등이 있음
- 시군별 2040세대 지원 사업으로는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주택수당' 사업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등이 김제, 남원, 정읍시에서 추진 중에 있음

〈표 3-49〉 2040세대 삶의 기반 시책 유형화 결과

생애단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기준			해당 저출산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2040세대기 반 (27)	공통사업 (3)	전체 (2)	서비스공급	자녀교육지원	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사업(1)
			현금지원	소득보전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1)
		일정소득기 준이하 (1)	서비스공급	자녀교육지원	저소득층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1)
	자체사업 (24)	전체대상 (21)	현금지원	소득보전	청년취업지원사업(3)
				자녀교육지원	둘째이상 고등학교학비지원 및 장학기금조성(3)
				주거지원	청년주택수당(1)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
			서비스공급	자녀교육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5)
					사교육부담경감(고등학교학자금지원) (2)
				생활비지원	사회복지문화프로그램(1)
		공무원시험준비반운영(1)			
		일정소득기 준이하(3)	기타	행정편의	무주국제화교육센터운영(1)
				청년정책포럼운영(1)	
				현금지원	생활비지원
		일정소득기 준이하(3)	현금지원	결혼기회지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1)
				서비스공급	생활비지원

3) 저출산 시책 유형별 빈도분석

- 본 절에서는 정책설계의 3요소 즉 정책대상(누구에게), 정책목표(무엇을), 정책수단(어떻게)을 기준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사례 수(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대상

-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시책 총 198개 중 일반인 대상의 전체사업은 71.7%(159개)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는 18.7%(37개)로 적은 편이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9.6%(19개)에 해당함
 -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43.6%(17개)이고 일정소득기준 이하 사업은 53.8%(21개)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약간 많은 편임
 - 시군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소득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10.1%(16개)에 불과하고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78.6%(1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지원정책이 보편적 정책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임을 반영함

〈표 3-50〉 정책대상 기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수혜대상	전체대상	일정소득기준이하대상	공무원대상
전체사업	198	142 (71.7%)	37 (18.7%)	19 (9.6%)
사업주체 (국가/지자체)	공통 (39)	17 (43.6%)	21 (53.8%)	1 (2.6%)
	자체 (159)	125 (78.6%)	16 (10.1%)	18 (11.3%)
생애주기별	결혼 (6)	6 (100%)	-	-
	임신출산 (92)	79 (85.8%)	10 (10.9%)	3 (3.3%)
	육아 (56)	30 (53.6%)	23 (41.1%)	3(5.3%)
	가족(일·가정양립) (17)	5 (29.4%)	-	12(70.6%)
	기타(2040세대) (27)	23 (85.2%)	4 (14.8%)	-

- 생애주기 단계별로는 임신·출산 사업이 총 92개로 전체 사업의 거의 절반(46.4%)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인 대상의 포괄적 사업임.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전후와 출산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출산이후의 모성건강 보호와 지원은 미흡한 편임. 출산이후 모성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과 전라북도가 202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이 있음
- 일·가정양립 등 출산친화적인 가족문화형성과 관련된 사업은 전체 17개 사업 중 대다수의 사업이 공무원 대상의 유연근무나 육아휴직 등에 관련된 사업임

정책수단

- 정책수단별로 분석한 저출산 정책의 유형빈도를 살펴보면, 서비스공급 사업이 103개(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현금지원 46개(23.2%), 비용지원 20개(10.1%)임
- 사업주체별로 살펴보면, 39개 공통사업은 절반 이상(53.8%)이 서비스공급이고 시군별 자체사업은 총 159개 사업 중 82개(51.6%)가 서비스공급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현금지원이 43개(27.0%)로 많음

〈표 3-51〉 정책수단 기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정책수단	서비스공급	비용지원	현금지원	기타
전체사업	198	103	20	46	29
사업주체 (국가/지자체)	공통 (39개)	21 (53.8%)	12 (30.8%)	3 (7.7%)	3 (7.7%)
	자체 (159)	82 (51.6%)	8 (5.0%)	43 (27.0%)	26 (16.4%)
생애주기별	결혼 (6)	-	-	6 (100.0%)	-
	임신출산 (92)	37 (40.2%)	20 (21.7%)	25 (27.2%)	10 (10.9%)
	육아 (56)	52 (92.8%)	-	3 (5.4%)	1 (1.8%)
	가족(일·가정양립) (17)	-	-	-	17 (100.0%)
	기타(2040세대) (27)	14 (51.8%)	-	12 (44.4%)	-

-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결혼정책은 결혼장려금이나 축하금 등으로 6개 사업 모두 현금지원임. 임신출산사업은 서비스공급이 37개(40.2%)로 가장 많으며 다양한 사업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고루 추진되고 있음
- 반면 육아지원정책은 대부분의 사업이 서비스공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일·가정양립)은 18개 모두 유연근무나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사용에 해당함. 기타 사업으로 분류된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조성 사업은 서비스공급(51.8%)과 현금지원(44.4%)사업이 거의 절반씩 해당함

■ 정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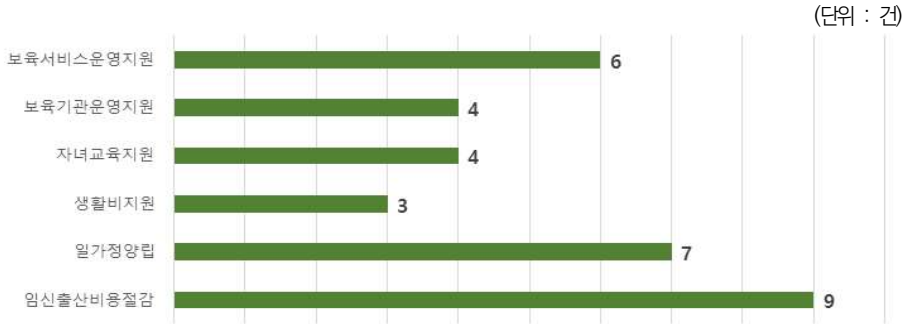
- 정책목표별로 분석한 저출산 정책의 유형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정책목표는 ‘임신·출산 비용절감’사업이고 예산도 가장 많음
-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사업으로는 ‘보육서비스 이용지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교육지원’사업임
- 결혼지원 사업은 결혼기획지원(7개)과 주거지원(4개)을 합하여 11개 사업에 불과함

〈표 3-52〉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_전체사업대상

(단위: 건,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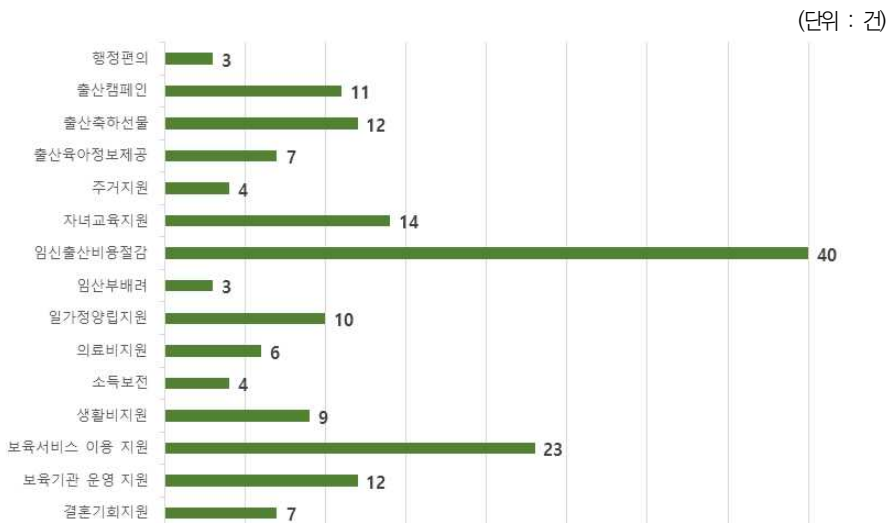
정책목표		건수	예산
결혼(11)	결혼기획 지원	7	1091
	주거지원	4	570
임신출산(104)	생활비지원	12	9,078
	소득보전	4	2,186
	의료비지원	6	129
	임산부배려	3	10.4
	임신출산비용절감	49	20,426.6
	출산육아정보제공	7	68
	출산축하선물	12	767
	출산캠페인	11	79.6
육아(63)	보육기관 운영 지원	16	13,876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29	110,906
	자녀교육지원	18	50,148
가족(일·가정양립) (20)	일·가정양립지원	17	889
	행정편의	3	56
계		198	210,271.6

- 전북도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통사업에서도 임신출산 비용절감 사업이 9개로 가장 많으며 일·가정양립(7개), 보육서비스 이용지원(6개), 자녀교육지원 및 보육기관 운영지원(4개), 생활비 지원(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0〉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 - 공통사업

- 시군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임신출산 비용절감에 방점을 둔 시책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서비스 이용지원(23개), 자녀교육지원(14개), 출산축하선물 및 보육기관 운영지원 사업(각 12개)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정책목표 기준 유형별 현황 - 자체사업

5. 요약 및 시사점

가. 전라북도 출산환경 분석

- **(인구 및 인구이동)** 전북은 가임기 및 주출산연령 여성의 인구감소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5배~2배 정도 높고 인구이동도 2040세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향후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 됨
 - 2000년부터 전국 전체의 인구증가 추세와는 다르게 전북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별·연령별 인구 특성으로는 주출산 연령인 25~34세의 여성인구 비중이 매우 적어 향후 저출산 문제의 심화가 우려됨
 - 가임기 및 주출산연령 여성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가임기(15~49세) 여성의 감소율은 2000년 대비 2019년에 전북(28.6%)은 전국 평균(12.2%)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감소함. 주출산연령(25~34세)의 감소율도 같은 기간 전국 평균(27.5%)보다 전북(43.9%)이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2040세대의 순유출이 전북의 전체 인구 순유출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운데 여성 인구이동율(-1.82%)이 남성(-1.71%)보다 높음.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여성유출이 남성보다 높고 30,40대에서는 남성유출이 더 두드러짐
- **(결혼 및 출산)** 전북은 여성혼인율 감소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초혼연령의 상승세는 전국보다 큰 편으로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향후 저출산 심화는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국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혼인율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2000년 대비 2018년의 여성초혼인율 감소(-46.1%)는 전국(-39.4%)보다 6.7%p 높음
 - 2019년 기준 전북 초혼연령은 남성 33.67세, 여성 30.34세(전국 남33.37세, 여 30.59세)로 남자는 전국보다 높고 여자는 전국보다 낮음.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전북의 상승폭이 전국보다 큼
 - 연령별 혼인건수를 보면 전북과 전국이 동일하게 20대 이하의 혼인건수는 줄고 3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고령산모에 의한 고위험산모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전북의 신혼부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가족중심 생애가 해체되고 남녀 모두 노동중심의 생애로 이동하는 전국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전북의 20대는 전국 평균 대비 무보증월세와 사글세의 비중이 높고, 전세 비중이 낮은 반면 30~40대는 자기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전북의 출생아 수 감소폭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연령 상승으로 이어져 고연령산모 증가에 따른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
 - 2019년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971명으로 전국평균(0.918명)보다 높지만, 광역자치체 중 경기도(0.943명) 다음으로 낮음. 출생아 수의 감소도 2000년 대비 2019년 약 64.4%가 감소하여 전국 감소율(약 52.7%)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
 -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있어 30~34세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5~29세의 출산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출산연령이 2000년 28.48세에서 2019년 32.37세로 증가, 고연령 산모 증가추세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정책적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 전북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 보다는 외벌이 부부의 자녀출산율이 더 높았고, 주택소유자가 무주택 신혼부부보다 무자녀 비율이 낮았으며 2명 이상의 자녀 비율이 높아 주택점유 여부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
- 전북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의료 전문인력 비중이 낮고 분만기관 수의 감소율은 높아 모자보건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임.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는 모자보건인프라 붕괴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지역간, 계층간 모자보건서비스 격차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지원과 대응이 필요함
 - 전북의 모자보건인프라 현황에 있어 가임기 여성 10만 명 대비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수, 소아과 전문의 수 등 의료 인력비중은 낮은 편임
 -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는 6개 군(무주, 부안, 진안, 임실, 순창, 완주)으로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과 질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분만 기관수 감소율은 2013년 대비 2018년 24.3%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나 모자보건인프라 취약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함
- **(양육 및 일·가정양립)** 보육인프라의 도·농 지역 간 편중이 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매우 적으며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맞춤형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임. 맞벌이 증가에 따른 육아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은 출산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66개소(전국 대비 1.8%), 직장어린이집은 25개소(전국 대비 2.3%)에 불과하고, 공동육아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협동어린이집은 1개에 지나지 않았음
-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42.7%가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 단위에 해당하는 진안(0.5%), 장수(0.5%), 무주(0.6%)는 매우 적어 보육인프라의 지역편중이 크고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함
-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7.8%, 방과 후 어린이집의 12.6%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북에서 운영되고 있어 영유아 및 아동 수에 비해 시설의 비중은 큰 편임. 그러나 시간연장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등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적은 편에 해당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비율은 42.9%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설치율(66.4%)보다 낮고 전국에서는 6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사교육 참여율(전북 68.3%, 전국 74.8%) 및 월평균사교육비 지출(전북 23.9만원, 전국 32.1만원)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전북 61.1%, 전국 64.4%)은 높아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이 출산계획이나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북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9세 이하의 청년여성 취업을 제고와 고용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30대~40대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육아휴직 확대, 가사노동에 있어서 양성 평등한 참여와 인식개선이 필요

- 전국적으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전북의 맞벌이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성별 고용률에 있어 15~29세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아(전북 남 36.0%, 여 28.9% / 전국 남 43.2%, 여 45.3%) 전북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여성의 취업을 제고와 고용안정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함
- 육아휴직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음. 전북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11년 고작 26명에서 2019년 576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전국 16.5%, 전북

13.2%). 육아휴직률 상승은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등에 의한 것으로 육아휴직 취약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여성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 가사분담은 여전히 아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가정생활을 우선시 하는 등 가정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이나 행위는 해체되지 않고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

나.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추진된 저출산 사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최근의 만혼이나 비혼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지원 사업이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함. 전북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결혼지원 사업이 2018년 4건에서 2019년 9건으로 증가함
- 2019년 현재 전북의 저출산 시책은 총 117건으로 2018년 총 93건 대비 24건이 증가하였으며 출산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출산지원 사업(37.3%)이 가장 많고 육아(28.3%), 임신(24.0%)가축(6.3%), 결혼(4.2%)순임. 전북은 저출산의 현상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혼인 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해당 시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추진되고 있음
- ‘2020년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토대로 저출산 사업의 유형별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총 198개 사업 가운데 임신·출산 지원 시책은 92개(46.4%)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92개 사업 중 75개(91.5%) 사업 대부분은 시군별 자체사업에 해당함.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가장 많고 ‘출산축하용품’과 ‘임산부건강관리지원’, ‘임신출산육아교실’ 등의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음.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전후와 출산에 집중되어 있어 출산 이후의 모성건강 보호와 지원은 미흡한 편임

- 임신출산지원 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는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센터’와 ‘출산취약지역 임신부이송’ 사업 등이 있음. 이는 농촌의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임신출산양육 인프라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붕괴로 인해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함
- 육아지원 사업은 총 56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 대상보다는 소득기준 제한을 두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많은 편임. 기초 지자체 공통으로 추진되는 유사 사업이 적은 가운데 지자체마다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사업을 공통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많고 그 외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많음
- 가족(일·가정양립지원)시책으로는 총 17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4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공무원 대상의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활성화 사업임.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대상의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사업이 있음. 본 사업은 전북에 중소기업이 많지만 영세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는 데 있어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나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유인책의 파급 효과가 적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
- 2040세대 삶의 기반 조성 시책으로는 총 27개가 추진 중에 있으나 전북도가 주체인 사업은 3개에 불과함. 전북도 사업 중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기피가 미취업과 고용불안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시의 적절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청년주택수당’이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김제, 남원, 정읍)에서만 추진되고 있어 광역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주거점유 형태나 규모 등은 출산 및 추가출산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 할 때 해당 사업이 전북 광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목표별로 저출산 시책의 유형빈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임신출산 비용 절감'사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예산도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보육서비스 이용지원'과 '자녀교육지원'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책은 2차 저출산시행계획의 맞벌이 부부의 보육 및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제3차 저출산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고용·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일·가정양립 실천문화중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4

장

전라북도 출산환경 인식과 요구 분석

Jeonbuk Institute

-
1. 2040세대의 저출산 인식 및 정책욕구
 2. 요약 및 시사점

제 4 장 전라북도 출산환경 인식과 요구 분석

1. 2040세대의 저출산 인식 및 정책욕구 : 심층면접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방법

- 심층면접조사에서는 2040세대의 결혼 및 저출산 관련 실태에 관한 구조화된 양적분석 및 통계로 나타나는 이면에 내재해 있는 이들의 가치관, 생각, 태도, 정책욕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심층인터뷰는 만 20세~40세 남녀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10일에서 1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진행함.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크게 3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즉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당면과제나 정책욕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 전(미혼), 결혼 후~첫째 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현재 임신 중인 부부 포함), 자녀출산 후 육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총 24명임
- 심층인터뷰 내용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결혼과 임신·출산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욕구, 자녀출산 계획과 장애요인, 일·가정양립에 대한 실태와 어려움,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 평가, 삶의 질과 성 평등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 함
- 심층면접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 인터뷰가 불가능하여 사전 전화통화로 연구취지 및 인터뷰 내용 등의 안내를 실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한 후 작성하도록 함. 작성 된 면접질문지를 회수하여 연구자가 일독한 후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음

2)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심층면접에 참여한 총 24명 가운데 결혼 전(미혼)은 6명(A-1부터 A-6에 해당).
결혼 후~첫째 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현재 임신 중인 부부 포함)은 8명(B-1부터 B-8에 해당), 자녀출산 후 육아기는 10명(C-1부터 C-10)임
-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나이	성별	취업상태/고용형태	학력	주택소유형태	자녀
A-1	39	여	비취업	고졸	부모님과 동거	
A-2	33	남	취업/정규직	대학원졸	부모님과 동거	
A-3	32	남	취업/비정규직	대졸	부모님과 동거	
A-4	27	남	비취업	대졸	전세	
A-5	27	여	취업/비정규직	대졸	부모님과 동거	
A-6	26	여	취업/정규직	대졸	부모님과 동거	
B-1	30	여	취업/정규직	대졸	자가	
B-2	32	남	취업/정규직	고졸	전세	
B-3	31	남	취업/무기계약직	대졸	자가	
B-4	32	여	취업/무기계약직	대학원졸	임대주택	임신중
B-5	30	여	취업/무기계약직	대졸	전세	
B-6	32	여	취업/정규직	대학원졸	전세	임신중
B-7	34	여	취업/정규직	대졸	전월세	
B-8	29	남	취업/정규직	대졸	전세	
C-1	30	여	비취업	대학원졸	자가	2명(2살, 1살)
C-2	28	여	취업/정규직/ 육아휴직 중	대졸	자가	2명(4살, 1살)
C-3	35	남	취업/정규직	대졸	자가	2명(9살, 4살)
C-4	37	남	취업/정규직	대졸	전세	2명(8살, 6살)
C-5	26	여	취업/정규직	대졸	자가	1명(8개월)
C-6	38	남	취업/비정규직	대졸	자가	2명(7살, 6살)
C-7	33	여	자영업	대졸	자가	1명(2살)
C-8	36	남	취업/정규직	대학원졸	자가	1명(3살)
C-9	34	여	비취업/ 무급가족종사자	고졸	전월세	1명(13세)
C-10	32	여	취업/정규직/육아휴직중	대졸	자가	1명(6개월)

나. 조사 결과

1) 결혼 전 단계 청년 그룹의 저출산 인식과 실태

① 결혼에 대한 의식과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이 컸으며 현재 계획이 없거나 유보적인 입장이 대다수였음. 현재 결혼 계획이 없거나 의향이 없는 경우는 남녀 모두 비슷하였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리하며 여성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남자친구가 있고 훗날 결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의 경제적 상황과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면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날 결혼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나 인식이 좋아지고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 굳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A-5)
- 저는 현재는 결혼계획이 없어요. 결혼에 대하여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러워요. 구직활동 기간이 길다보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 만나는 게 좀 두려운 상황이에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자립하고 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A-1)
- 저는 원래는 비혼주의였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결혼은 불리하다고 그동안 생각했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생활의 제약 때문인데요.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너무 흔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육아/집안일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늘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혼할 상대편과의 실생활에서도 그 생각이 적용되는지는 결혼 전에는 알 수 없으며, 아직도 모성애에 대한 신화가 존재합니다. 여성에게 결혼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직까지는 불리한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해요(A-6)
-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역공동체 등이 강조됨에 따라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도적인 장치로써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A-3)

○ 청년여성들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결혼으로 인해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가부장적 사고나 의식 하에서 여성=모성이 여전히 강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 있었음. 한편 남자의 경우(A-2, A-4)는 부모님과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이 안정감을 주는 정서적 기능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 등 남성들은 결혼을 당연한 생애과업 내지는 당연한 이행과정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음

- 저는 만 36살 전에는 결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안하고 혼자사는게 더욱 현실적인 생각이지만 부모님들과 개인의 노후 생활의 질을 위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있어요(A-2)
-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은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하게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들고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과 같이 무엇인가를 하게 될 동기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A-4)

○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주택마련이나 결혼비용 부담, 미취업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상의 불안정과 같은 경제적 부담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거론하였음.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주택마련 비용 부담뿐만이 아니라 결혼 이후의 생활과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비용부담을 포함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

-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서 본다면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자체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큰데, 사실상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집을 구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북지역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전세매물도 거의 없을 뿐더러 주택 대출 또한 어려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쉽게 결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또한 크기 때문에, 현재처럼 경제가 얼어붙어있거나 취업/고용안정이 불투명한 현실에서는 혼자 즐기며 살자는 생각이 주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A-6)

-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예전보다 심해져서 선뜻 결혼할 엄두가 안 생겨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전세 얻기도 빠듯하고, 그동안 취업준비다 뭐다 해서 남보다 돈버는 것도 늦어져 모아 둔 돈도 없고...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평생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다보면 양육비나 교육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고, 돌이 벌어도 빠듯하지 않을까요? (A-2)

○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외에도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억압하고 상호에 대한 '감정소모'를 겪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스트레스를 겪어야 할 불편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며,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생활비를 절감하거나 (양가 부모님의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계산, 20년 이상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살아온 타인과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는 '감정소모'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A-3)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감정소모에 대한 스트레스 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과의 감정소모가 너무 힘들어져서 직장에서도 부딪힘에 대한 감정소모가 힘든데 집에 돌아와서까지 가족과 감정 소모하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맞춰가며 살아가잖아요. 그 중간에 부딪힘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A-1)

② 여성의 일과 미래전망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일 등에 대해 각각의 생애주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신의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요구함. 각각의 생애주기 이행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를 물어 봄

○ 인터뷰 결과, 2명의 참여자는 '결혼은 하나 아이는 갖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2명은 '결혼은 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에 응답하였고 나머지 2명은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일도 계속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

-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일도 계속한다’라는 의견은 2명 모두 남성이지만 배우자(여성)의 삶을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대신 아이를 갖고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가족중심 생애에서 노동중심의 생애과정을 수용하는 태도는 여성참여 인터뷰자의 견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특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견해는 모두 여성에게서만 나타나고 있었음. 여성참여자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육아에 대한 성역할 분담이 여전히 여성에게만 주어져 있는 직장문화와 사회분위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 지금 가장 저의 우선순위는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이어서 그리고 현재의 나이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두려워요. 제가 우선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그 이후 상황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지금으로서는 결혼하지 않고 일단 계속하고 싶어요(A-1)
 - 한 생명을 평생 동안 책임질 만큼 내 자신이 성숙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짐으로써 나의 인생에서 희생해야 하는 것(건강, 시간, 돈 등의 기회비용, 감정 등)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가는 여행이나 나의 취미생활을 아이를 키우는 비용 혹은 시간이 나 상황 때문에 포기해야하는 건 싫습니다.(A-6)
 - 아직까지는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원활한 직장생활 및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아이는 갖지 않고 경제생활을 영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을 남자가 쓰게 되면 승진은 거의 포기 한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어느 회사에나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아빠가 육아제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일 대신 육아나 가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육아를 시작하면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차라리 승진에서 배제만 시키면 다행일 듯합니다. 일자리를 잃는 여성들도 많을테니까요.(A-5)

③ 결혼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성 등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결혼장려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결혼준비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일부 있었음. 그러나 정책의 효과측면에서는 결혼장려금이 바로 결혼이나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본적인 정책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많았음

-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결혼 후 경제적 지출이 심할텐데.. 우선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많이 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만큼은 비용이 줄어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A-1)

- 현실에서는 ‘현금지원’이 가장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의 한계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금을 지원받아도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산을 토대로 가정을 꾸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A-3)

- 현재 도내 각 지역에서 지급하는 결혼 장려금의 수준은 대부분 터무니없이 낮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결혼 장려금과 혼인율,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이러한 장려금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A-4)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결혼지원 정책으로는 주택마련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음.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주택마련은 여전히 남자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청년의 취업이 늦어지고 낮은 임금으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집 장만을 포기하는 체념적 태도 등도 보이고 있음

- 주택마련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 않아서 둘의 근무지의 중간 지점을 잘 잡아서 주택을 마련해야 했는데 주택 값이 정말 일주일/한 달 단위로 무섭게 올랐습니다. 작년 말엔 매매로 집을 알아봤었는데,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보니 매매는 불가했고, 월세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A-6)

- 남자로서 주택마련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는 남자 쪽에서 주택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많이, 심지어는 전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주택지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A-4)
 -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합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안정화가 되면 가장 큰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A-2)
- 신혼부부 주택지원은 정책수혜 대상이 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이 결혼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으며 청년들을 위한 주택지원 범위와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해서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은 주택마련이겠죠?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지 않아야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취미생활도 하고 삶의 여유를 가지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정책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이나, 내집마련 주택 청약의 정책이 확장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A-1)
 - LH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등의 제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수에 대비해 부족함이 있음은 분명하고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도 분명 필요하지만, 앞으로 언젠가 결혼을 할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생활안정까지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원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A-3)
 -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아 현 부동산 정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또한,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 현재 돈이 있는 신혼부부가 노릴 수 있는 정책인데, 돈이 없는 청년층이라면 신혼이더라도 특별공급은 노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A-6)
- 결혼지원정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음
-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부동산 안정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만 주택 구입에 있어 혜택을 주는 정책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의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6)

④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인식

○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음. 구체적으로는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 결혼과 출산 등의 비용부담 등 주로 경제적 빈곤에 대한 불안 등이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함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의 미래를 그리는 것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의 해소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인 만족도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A-6)

-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의 투자가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소득은 곧 자녀의 성공이라는 걸 생각하면 평생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A-1)

○ 청년층이 생각하는 또 다른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서는 여성들의 인식변화를 들고 있음. 이전 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삶과 행복에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자신의 경력단절, 커리어의 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출산은 여성에게 개인을 희생할 것과 인생의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출산은 여성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음

- 개인이 개인의 삶을 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던 과거에 비해 본인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 부모세대처럼 자식에게 희생하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같은 비용으로 혼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아이와 부족하게 사느니, 풍족하진 않더라도 만족스러운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출산이 필연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아이를 갖는 것이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주체적 여성들의 수가 늘어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A-6)

- 여성들이 출산 이후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더 이상 여성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싶다는 생각도 많아졌고 또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남자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거죠. 서로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출산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A-2)

- 젊은 청년세대가 출산을 고민하는 이유는 출산 후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쉽게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건 다시 말해 한 쪽의 수입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육비용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부담은 출산을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A-5)

- 참여자들이 저출산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의 상이함에 따라 정책대안도 다르게 제시하고 있었음. 지자체 차원의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주택마련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듯이 한가지의 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결혼 후의 정책이 아닌 결혼 전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확대를 통해 결혼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⑤ 삶의 질과 성 평등에 대한 의견

- 최근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목표를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과 성 평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음
- 청년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청년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남성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가사분담 문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등을 들었음. 또한 과중한 노동시간으로부터의 탈피와 정시퇴근을 통한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았음
- 청년들은 삶의 질과 성 평등 관점을 분리하지 않고 연계하여 생각하였으며 남녀 2인 노동과 남녀 2인 돌봄에 대한 평등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음

- 예전 세대에는 맞벌이보다는 남자가 돈을 벌어서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 없이는 양육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기에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설령 아이를 낳더라도 키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외벌이가 가능할 정도로 임금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남자와 여자 모두 정시퇴근하여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 등이 가능한 삶이 되는 것..... 이게 삶의 질 아닐까요.(A-4)
- 청년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또한 출산을 장려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해주고 인력이 빠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어느 정도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A-5)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일과 육아가 병행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이가 생활 할 곳이 필요합니다.....현 상황에서는 퇴근시간이 보장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학교의 종료시간과는 차이가 있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같이 덜 일하고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A-6)

2) 결혼 후~첫째 자녀 출산 전 그룹의 저출산 인식과 실태

①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신혼부부들이 결혼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단연 경제적 문제를 거론하였고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남녀 모두 '주택마련'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음
- 일부 참여자들은 대학생 때부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 등의 생활고를 겪고, 졸업 후에는 장기간의 구직활동으로 인한 부채증가, 일자리를 얻고 난 후에는 부채상환 등이 순환되기 때문에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말함
- 또한 이들 신혼부부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집을 장만하기가 어렵지만 그나마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이들은 대부분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자가 아닌 이상 모든 청년들의 결혼준비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으로 생활고를 겪었고 결혼 결심에 있어서도 아직 남아있는 학자금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요즘은 더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제 막 자리잡은 20~30대에게 주택마련이란 부모님의 도움 또는 은행 대출 없이는 힘든 게 있는 현실입니다. (B-5)
-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 집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사귀었을 당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살 집”을 구하는 게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한 두푼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자금을 모아둔 게 많이 있지 않아서 사귀면서부터 바로 매달 월급의 반절씩 모아서 결혼자금을 마련했습니다.(B-2)
-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매예단은 저축해 놓은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었지만 집값은 한 번에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 초기에만 다세대주택에 살자고 이야기 하고 집을 구하려 다녔지만 다세대 주택 또한 전세비가 너무 비쌌고 전세로 나온 집도 많이 없었으며, 많은 집들이 월세를 원했기에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B-4)

② 주거지원 정책 문제점

-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마련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으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실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업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 등의 부채상황이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마련은 어려운 것이 청년들의 현실임
- 요즘은 더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제 막 자리잡은 20~30대에게 주택마련이란 부모님의 도움 또는 은행 대출 없이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자금의 30%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B-5)

○ 주택지원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격조건이 저소득 부부에게 맞추어져 제한적이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너무 높아 정작 주택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음.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자격조건을 확대하여 다수의 계층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 처음 아파트를 알아볼 당시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당시 부부합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나 저의 아내 합산소득은 그것보다 더 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그 기준 자체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모두 현재 모아둔 돈 또는 앞으로 결혼 전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이 많거나 집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결혼을 지원” 해준다고 한다면 합산소득의 기준이 더 높아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B-2)
- 주거지원과 관련해 현행 정책의 문제점은 단연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적용’입니다. 위에 열거한 주거지원 정책들은 모두 소득기준에 좌지우지 됩니다. 맞벌이 부부치고는 너무 금액이 낮게(부부합산 5천만원~8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 거의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예요. 정책은 존재하지만 하상과 같은...(B-6)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에 비해 연소득으로 잡히는 급여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높은 금리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겠지만 특정 계층을 밀어주는 방식의 행정보다는 자격조건을 확대하여 다수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B-2)
- 많은 정책들이 있다고는 하는데....결혼지원 혜택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결혼이나 출산 지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데 전세금도 부담이 되어서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임대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이 계속 오르고 월세가 아까워서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 낼 돈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1)
- 현재 임대주택 마련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의 임대주택을 구하기 힘들고 신축되는 임대주택도 많지 않으며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보증금 또한 매우 비쌉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거 면적이 적은 보급형 임대

주택을 많이 신축하고 신혼부부나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 상품을 적극 제공하여야 합니다.(B-4)

○ 주거대출이자, 전세자금 대출상환 등 주거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첫 자녀 보다는 둘째자녀 등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음

- 현재는 자녀가 없어 영향을 미친 것은 아직 없지만 둘째를 낳을지 말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1명인 것보다는 2명을 키울 때 더 많은 돈이 들텐데 대출금상환을 하면서 키우는 게 부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저는 2명을 낳아서 키우자 주위라 키우면 키울 수 있을 거 같긴 하지만 가끔은 1명을 낳아서 여유롭게 자식이 원하는 것 해주면서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둘째를 낳을지에 대한 고민에 듭니다.(B-2)
- 대출부담이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결혼 자체를 안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결혼을 한다면 첫째아는 출산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첫 출산에 관해서는 주택대출 부담 때문에 인위적인 피임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변 또래 친구들 역시 같은 생각이구요. 문제는 '추가 출산의향'에는 영향을 미칠거예요. 아이가 2명이 되면 당연히 현재 집보다는 집을 넓혀가야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B-6)

○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는 몇몇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함. 지역에서는 배당 호수가 많지 않아 경쟁률이 높은 점, 특정지역에 설립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임대주택 기준평형수가 너무 작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는 주변의 부정적 시선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음

- 임대주택 대상 기준이 된다면 이용하고 싶어요. 문제점이라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기준평형이 너무 작다는 거?? 부부 두 명, 혹은 아이 한 명 정도 빠듯이 살 정도의 평수라고 생각해요. 곧 애기가 생길거고, 애기용품에 두 부부 옷, 생활용품 하면 지금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평형기준은 너무 작다는 느낌이 있어요.(B-6)
- 연소득 자체가 높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이미 순위가 밀려 신청조차 할 수 없었고 또 임대주택은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요즘은 부모의 집 수준이자녀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아파트 거지”라고 놀린다

고 합니다. 이런 현 상황 속에서 임대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능력 없는 부모로 느껴질테니 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B-2)

- 지방은 임대주택 호수가 적어 경쟁률이 높고 특정평수에만 또 몰려 경쟁률이 높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나 관리비 부담도 여느 월세집과 다르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B-1)

③ 자녀출산 계획과 장애요인

○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인지에 대해 서, 1명도 낳지 않겠다는 전혀 없었으며, 응답자들은 많게는 2명에서 3명까지도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 이들은 또 첫 자녀를 출산 할 경우, 출산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등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소득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더 걱정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이를 낳고 난 후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을 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소득문제와 더불어 육아문제까지 겹치게 됩니다. 친정이 없고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B-4)
- 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 자녀를 키울테니까요. 자녀를 몇 명 나올지 고민하는 부분도 저의 아내가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거든요. 배우자와 함께 돈을 버는 게 서로에게도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B-2)

○ 자녀출산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일·가정양립이나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직장의 여건, 자녀의 양육부담 정도라고 보고 있음. 자녀의 양육부담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는 자녀출산 이후 복직에 따른 타지발령 등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등의 근무여건도 출산을 미루거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고 있었음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과 ‘배우자의 양육부담’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소득이나 집 규모, 사회적 지지체계 등에 대해서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겠어요?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처한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상대적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B-6)
- 아무래도 여성들은 출산을 한 후에 복직여부가 제일 큰 고민이더라고요. 아내의 회사는 복직이 법적으로 잘 지켜지는 회사이기는 하나, 현재 거주하는 전주에서 복직을 하지 못하고 타지로 발령이 날 경우가 있어 아기를 놓고 타지로 가서는 일을 할 수가 없기에 아내의 복직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첫 출산에 대해 조금 더 천천히 여유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B-2)

○ 또한 맞벌이일 경우, 직장의 일·가정양립 문화나 제도의 이용수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 여성이 혼자서 육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점도 문제로 보고 있었음

- 저는 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이 허용적인 편이지만 남편은 출산휴가 날짜도 회사 사정에 따라 겨우 잡고, 남편육아휴직 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째까지 낳으면 제 경력에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둘째는 가지지 않을 생각입니다.(B-1)

④ 일·가정양립 실태와 어려움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신혼부부로 첫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직업에 따라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일·생활균형의 밸런스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자는 향후 자녀가 태어난다면 배우자(여성)의 독박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저는 생산직 근무로 주, 야간으로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현재는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지만 향후에는 3교대로 변경될 예정이지요. 가정생활과의 병행에 어려움이라면 교대근무를 하는 제 직업이겠지요. 지금은 신혼이라 가정생활에 별 문제가 없지만 향후, 아내가 출산을 하는 경우 아내 혼자 아기를 돌볼 시간이 많을 것 같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B-2)

○ 현재 임신 중인 참여자는 직장 내에서의 일·가족양립이 출산이나 육아 등에 집
중화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임신부를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아쉬
움도 토로하고 있었음

- 임신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몸의 변화
에 따른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임산부라서”라는 부정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
아 눈치를 보고 더 신경 써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많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특별휴가가 있지만 그것들을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사유를 말해야하고
눈치를 봐야하는 직장 내 문화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
다.(B-4)

⑤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인식

○ 인터뷰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거론하고 있었
음. 첫째는 주택마련이나 양육비용과 같은 경제적 비용 부담이고 두 번째로는
출산과 양육 등에 있어서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는 전통적인 성 역할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독박육아 등 여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의 적은
지원과 맞벌이지 않고서는 아이를 키울수 없는 환경,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비
용과 사교육비 등이 출산의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B-5)
- 치솟는 집값에 아직까지 남자가 집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
은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즘 제 주변을 봐도 남자들도 결혼을 하
지 않고 혼자 살겠다, 혼자가 편하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그리고 저는 남자
라 잘 체감하지 못 하지만 아내의 말을 빌리면 여자들은 아기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기에 여성들은 결혼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치솟는 집값과 여성들의 경력단절인 것 같습니다.(B-2)
-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준비비용(주택자금)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 진입이 정체되거나 무
한정 미루게 되면서 출산 가능 분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취업→주
택자금 마련→결혼→첫자녀 출산→ 추가출산” 으로 이어지는 큰 프로세스에서 취업과
주택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진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B-6)

- 출산 전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지원이나 대출이자 보전과 같은 정책이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출산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고 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환경 조성과 제도사용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적극 보장되는 근로여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었음
 - 맞벌이가 아니고서야 육아를 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아이돌보미, 방과후 돌봄지원이 맞벌이부부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 같고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후 복직에도 직장 내에서 눈치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으며 자녀양육에 드는 아동수당 등 경제적 비용까지 지원한다면 출산장려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B-5)
 -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는다 한다 해도 현 시점에서 아파트들의 가격은 너무나도 비쌉니다. 집을 구하면서부터 좌절감이 들어요. 우선 살 거주지가 마련이 된다면 대출의 부담이 덜 할 것이고 자연스레 출산의 부담도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B-2)
 - 일과 양육병행 지원을 하되 아이를 키우는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육아시간 활용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성에게만 편중된 일과 양육병행 지원은 여성이 직장 생활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원인이 됩니다.(B-1)

⑥ 삶의 질과 성 평등에 대한 의견

-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그룹에서 생각하는 삶의 질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정시퇴근, 근무 이외의 시간이 확대되는 것,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출퇴근 시간의 유연제나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등을 공통적으로 거론하였음

○ 성 평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음. 이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의 사용과 확대를 통하여 현재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보여짐

- 양육과 교육의 평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잘 정비된 프로그램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폐쇄적이지 않고, 맞벌이 하는 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양육·보육기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육아를 위하여 휴직이나 연가 등을 남녀모두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B-4)
- 남성에게는 가부장적인 질서 속 생계부양과 역할 부담, 여성에게는 독박육아로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개선해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를 줄이고 남성들에게도 돌봄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녀가 노동과 돌봄의 책임이 동등하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B-5)
- 출산을 하고 양육을 위한 “시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퇴근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 유연제, 유연근무제(8시 출근 5시 퇴근, 10시 출근 7시 퇴근 등), 주어진 연차휴가의 적절한 사용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삶의 질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어려운거 같습니다.....남자들에게 육아휴직이 있는 회사는 많지 않고 있어도 쓸 수 없으며, 육아휴가만이 있는 경우가 많죠. 육아휴직이 있다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요. 기업은 절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죠. 이런 나라에서 법적으로 모두가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2)

3) 자녀출산 후 육아기 그룹의 저출산 인식과 실태

①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의 어려움

○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임신부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산후조리 비용부담을 공통적으로 거론하였으며 그 외 출산과정에서의 비급여 의료비부담(제왕절개), 고위험임산부의 입원비용, 출산용품 구입 비용부담 등이었음

- 산후조리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있으나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였고 이용율도 높았음.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동안 사용할 경우 비용이 대략적으로 300만 원 정도로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체감정도가 높았음
- 산모건강관리사가 퇴근을 하고 난 뒤에는 경험이 없는 산모가 혼자서 신생아를 돌보는 데 오는 어려움이나 산모가 2주 동안 출산 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후조리원 선호도나 이용률이 높은 점 등을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지원을 요구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음
 - 산후조리에 들어간 비용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조리원 비용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주 정도면 200만원 가량 필요했습니다. 정부지원이 되는 산후도우미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아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일수는 최대 20일인데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 비용부담이 가장 큰 산후조리를 위해 정부산 후도우미 지원정책에 있어서 산모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고 지원 일수를 더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C-1)
 - 산후조리 비용이 가장 컸던 항목은 산후조리 비용과 병원비였습니다. 첫째 때는 산후도우미를 불렀었고, 둘째 때는 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산후 도우미는 정부지원을 받았었던 터라 부담이 덜 했지만 산후조리원은 비용을 미리 준비를 하고 조리기간도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왕절개를 하여 출산을 하였는데 제왕절개 수술 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C-2)
 - 임신에서 산후조리까지 보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산후 조리원에 최소 2주에서 4주까지 머물게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300만 원 이상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또한 임신 단계별 산후조리 후 엄마와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3)
- 만혼화로 인하여 고연령임산부가 증가하면서 고위험산모가 늘고 있지만 정부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점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음.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에 따른 병원비 부담이 있지만 비급여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점도 어려운 점으로 느끼고 있었음

- 고위험임산부 입원비용의 경우, 정부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급여부분의 90%,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 경우 입원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아 한도액이 낮은 수준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통원 및 입원 등 진료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고위험임산부 지원의 제약은 줄이고 지원은 더 늘리는 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C-10)

② 추가출산에 대한 인식

- 면접참여자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두 자녀에 해당하고 나머지 4명 중 1명은 1년 후 출산계획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추가출산을 원하지 않았음. 1년 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에도 현재 첫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첫 자녀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갈 때쯤 두 번째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음. 그러나 둘째 출산 시 가장 염려되는 부분으로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직장분위기와 출산으로 반복되는 경력단절이었음

- 임신기간과 둘째가 첫돌이 되기 전까지의 첫째 자녀의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첫째와 둘째의 나이차이가 세 살 터울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 육아휴직 1년 만에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회사에 통보해야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요.. 왠지 눈치가 보이고 여자는 저래서 안되라는 시선을 보낼 것 같고... 또 연이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반복되는 경력단절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C-10)

- 추가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안심하고 맡길 만한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점, 배우자나 자신의 경력단절이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함. 직장에서 남자 육아휴직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이 독박육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점도 추가출산을 꺼리는 이유였음

- 첫째 임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것은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 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복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직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첫 번째로 했습니다.(C-10)

- 경제력과 주변에 돌보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같습니다. 부부 모두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자영업이든 직장이든 맞벌이를 해야 된다면 가장 문제 되는 게 돌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정엄마가 가까이 사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만약 둘째까지 부탁한다면 그만큼 더 힘들실 것 같아서 둘째를 낳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C-7)
- 일단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집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제가 자가이긴 해도 은행 대출이 80%예요 양육비보다는 대출금 갚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라 둘째 생각이 어려워요. 그 외에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학원비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크고요.... 또 저의 개인시간 보장을 생각해서 낳고 싶지 않아요. 공부도 하고 휴식시간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또 출산을 하면 10년 동안 자녀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다시 또 생각해 봐도 어려워서 낳고 싶지 않아요.(C-9)
- 아내의 독박육아가 심해 질 것 같습니다. 현재 아내는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된 상태이고... 아내는 종종 아이가 없는 집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경력이 뒤처지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맡기자니.... 최근 어린이집 사건사고 등으로 아이의 안전에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보지 않는 이상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C-8)

○ 첫 자녀를 낳고 둘째 자녀를 낳은 시점이 남녀 모두 직장에서의 위치나 과업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승진 등의 커리어를 쌓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둘째 출산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음. 둘째 출산도 경제적인 여유가 보장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가 결국 여성에게 육아를 전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추가출산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음

- 배우자와 종종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결론은 배우자는 육아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저와 나누려 하고 저는 육아를 돕는 것에 대한 시간적 한계를 호소합니다. 둘째를 낳을 경우 제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늘리거나 배우자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육아를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C-8)
-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더 생기면 아무래도 부담이 더 될 것 같구요 남편의 직장에서도 책임자 급으로 진입하는 시기인데 양육에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만 있는 육아휴직... 남편이 육아 휴직을 한다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육아는 저 혼자서 뚫인 셈이죠. (C-8)

③ 돌봄 실태 및 정책육구

○ 자녀 돌봄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는 국공립시설의 부족과 특정지역 편중으로 입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점, 돌봄 프로그램의 질 문제, 영유아 돌봄의 경우 정부지원의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그나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인력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점 등을 거론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5월달 쯤 등원대기를 신청해놓았는데, 맞벌이라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대기번호가 1*번대 입니다. 8개월도 이전에 등원대기 신청을 해놓았는데, 내년 신학기 입학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답답하더라고요.... 같은 전주시라도 국공립지역은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파악이 되실텐데요.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C-10)
- 아이가 저학년 때 돌봄교실에 방문을 하게 되면 1명의 선생님이 10명의 학생들을 혼자서 케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맡겨지는 시간동안 아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교육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C-9)
- 돌봄 시설에서의 프로그램들이 매우 적어서 어린이집의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익산에서도 매우 구도심 지역으로 어린이 보육이나 문화시설, 프로그램들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C-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신청·출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산 직후에는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기간 말고 출산 후 일 년 이내 등으로 기간을 연장해 출산 이후 육아 과정에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C-10)

○ 자녀 양육 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 어린이집 등 시설에 자녀를 맡기지 않는 전업주부도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주말이나 밤늦게까지 자녀 돌봄이 필요한 자영업, 퇴근시각이 늦은 맞벌이 등등 긴급 돌봄의 수요는 넘치지만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미흡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었음. 또한 민간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돌보미 인력에 대한 불신으로 서로 아는 사이에서 육아파트이를 통해 돌봄 수요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음

- 긴급한 상황에 시설을 이용한 적은 없고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짧은 시간을 이용하거나 긴 시간을 도움 받을 때는 2명이 번갈아 가면서 가능한 시간에 봐주기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동의 특성과 보호시간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C-9)
- 직장을 다니다보면 '긴급'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타지에서 와서 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대전에 살고 있는 친구가 군산까지 와서 아이를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긴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퇴근 후인 7시~10시정도 사이 한 두 시간, 두 세 시간정도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인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할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집으로 와서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C-2)

④ 일·가정양립 실태와 어려움

- 일·가정양립 어려움으로는 직장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는 대부분 남성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이 주로 독박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었음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으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사고과나 업무배치에서의 불이익, 사업주와 직장동료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직장분위기 등을 거론하였음. 이러한 분위기 속에 육아휴직 사용은 곧 '민폐'로 인식하게 되며 일과 직장을 오가며 결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책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음
-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육아 휴직 후 복직 시에 원래 일하던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전출우려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휴직신청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회사생활에 있어서 경력단절 및 돌아갈 자리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짧게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 크며, 부서 내에서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C-2)
- 아이가 아프거나 하는 돌발 상황 시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를 쓰기 때문에 같은 팀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주말이나 저녁 등 초과근무 시에도 아이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열외되곤 하므로 눈치가 보여요. 퇴근 후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해야 해서 정신적·체력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큼니다.... 결론적으로 일과 육아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만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C-2)

○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짧은 출산휴가 사용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는 육아휴직 사용은 대체인력을 찾기 쉽지 않고, 대체인력보다는 계속 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귀가 쉽지 않은 실정임

- 단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당장 실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민간시장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근로자를 채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C-6)

○ 따라서 사업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인센티브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일·가정양립이 활성화되면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기업에 대한 사업세제 혜택 등이 적극적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봄

- 출산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매해 나오고 있으나 정작 근로자들은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사업주에게 통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이런 제도들을 다 시행해주는 것은 어렵겠지요. 정부는 제도를 잘 시행해주는 사업주들에게 보다 좋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사업자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C-10)
- 일과 생활의 분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짧은 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표자의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C-8)
- 유연근무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의 접촉이 위험한 시점에서 시대에 걸맞게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C-1)

⑤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인식

○ 저출산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 개인 삶에 더 집중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육아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기간 중 초음파 비용의 경우에도 시기와 횟수가 맞을 경우에만 정부에서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출산 후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녀 사교육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물가의 상승과 맞물려 매우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10)
- 소득의 불안정성입니다. 대기업조차도 정년을 보장하기 힘든 사회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업을 하는 저희들은 소득을 보장 받기가 너무 어렵거나 소득 자체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득의 불안정은 사회를 불안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불안한 사회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 불안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유보하기 때문입니다(C-8)
-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단란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지표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출산이 가능한 세대들이 개인적인 삶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오는 YOLO족, DINK족, 워라벨 등의 문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C-6)
-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일과 양육의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한 가지에서 찾기보다는 다양한 우리사회의 시스템 작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원인 중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의 부재나 서비스 질이 낮기 때문에 일과 양육의 균형이 어려워져 결국은 돌봄=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C-1)

○ 이에 따른 정책지원에 대한 요구로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요구,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대와 질 제고, 주택지원, 정시퇴근과 유연근무제 등의 확대 등을 제기하였음

- 친정엄마도 한 명은 돌봐줄 수 있지만 둘째까지 돌을 돌봐주는 건 무리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지원이 돌봄 지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둘째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C-7)

- 아무래도 둘째자녀가 태어나면 첫째를 반일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키거나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구축 정책이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아이돌보미 지원 정책 등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C-10)
- 부모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이나 돌봄시설에 맡겨지는 정책보다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유연 근무제나 정시 출퇴근 등의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려면 보육료 지원이나 세금감면, 아동수당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도 일과 양육 병행 지원과 함께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C-2)
- 주거가 안정되어야야 둘째 자녀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주거 중에서도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주택구입을 좀 더 쉽게 할수 있는 자금 지원이 필수입니다. 어린자녀를 양육하면서 임대주택에 산다는 건 아이들의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일입니다.(C-3)

⑥ 삶의 질과 성 평등에 대한 의견

-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이라는 정량적 수치를 지양하고 2040세대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에 대해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모두 긍정적 태도를 보임. 생애단계에 있어 자녀 양육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 제고란 육아에 있어 남녀 모두 동등한 육아참여와 돌봄이었음
- 남녀 모두의 동등한 육아참여와 돌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전제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였음.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기업의 인식전환과 여건조성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었음
- 제 남편은 본인은 바깥일을 하니 집에 오면 편히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 한참을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사고방식을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사실 가끔 부딪힙니다. 남성들이 공동육아에 대한 생각을 당면시 여기고 함께 해준다면 여성이 출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C-7)
- 최근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들은 육아를 서로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남성육아

휴직 의무화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의 보장과 더불어 육아휴직의 직장 내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내고 직장을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방안을 많이 선택하고 승진의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C-8)

- 남성이 다니는 회사가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여성은 독박육아입니다. 기업들 간에 규정도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일시 해야하고 이로 인한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C-2)
- 어느 때보다도 양성 평등한 육아참여를 위해서는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남자 혼자 홀벌이로도 가정 생계가 유지되었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남성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노동시간의 단축도 필요합니다...양육 때문에 눈치 보지 않도록 유연근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사회분위기가 절실합니다(C-4)

2. 요약 및 시사점

- 본 절의 요약 및 시사점 중 다음의 <가. 미혼남녀의 결혼·출산·가족 의식과 태도>와 <나.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및 일·가정양립 실태>는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밝힌바와 같이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결과임
- 해당 원자료는 표본의 지역 대표성 확보여부에 이견이 있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 미공개 요청에 의해, 분석결과 중 정책적 함의나 전북지역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중심으로 요약함

가. 미혼남녀의 결혼·출산·가족 의식과 태도

- 20~44세의 미혼남녀 중 현재 이성교제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취업자의 이성교제 비율이 미취업자의 2배로 나타나 결혼 뿐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도 취업 여부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남성은 ‘적당한 상대를 못 만나서’와 ‘금전적 부담’때문으로 응답해 자유로움의 추구는 여성이, 금전적 부담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음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남자는 긍정적인 태도의 응답률이 42.6%, 여자는 22.6%에 불과함. 이러한 응답결과는 전국 평균(남 50.5%, 여 23.8%)보다 낮아 전북의 미혼남녀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낮음. 한편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유보적 응답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고 ‘하지 않는 게 낫다’도 여자의 비율이 더 높음. 청년층 전반에 걸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가 강해 결혼에 대해 전통적 가치규범의 수용도가 낮으며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더 강한 경향을 보임.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미혼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는 ‘소득이 적어서’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의 경제적 이유가 크고, 여성은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와 ‘결혼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이성교제나 결혼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향과 가족구성보다는 일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임. 연령별로는 25~29세가,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임.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은 ‘신혼집 마련’이 41.7%(전국 33.7%)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가 36.0%(전국 29.4%)로 가장 높음. 남녀 모두 신혼집 마련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나타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이는 사회 초년생 및 자산축적 시간이 짧은 미혼남녀에게 높은 집값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인식한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음(이소영 외, 2018). 특히 전북 남성은 전국 남성보다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혼을 위한 유인정책으로 가장 우선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혼 및 출산, 양육지원 정책 인지도에 있어서는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53~50% 정도이고 모른다는 비율도 40% 정도로 나타남. 결혼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신혼집 마련’으로 응답한 조사결과와 달리 정책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홍보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자녀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사회조건으로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과 ‘자녀양육비용 부담해소’, ‘경기활성화(고용안정)’ 등으로 나타남. 응답률에 남녀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성평등 구현’에 대해서는 여성(11.4%)의 응답비율이 남성(5.9%)보다 높아 성별 차이를 보임

나.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및 일·가정양립 실태

- 기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응답은 37.5%에 그친 반면, 결혼에 대한 유보 또는 부정적 의견이 62.5%로 과반수를 차지함.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함
- 기혼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혼인연령은 30~32세가 69.9%, 여성의 혼인연령은 30~31세가 51.5%로 응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만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음
- 주거비용을 포함한 혼인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60.1%(전국 54.5%), 부담을 느꼈다는 39.9%(전국 45.5%)로 혼인비용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지만 전북은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 결혼비용 부담은 주택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데 전북의 부담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이유는 주택비용 상승(특히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됨
- 결혼 당시 주택마련 유형으로는 전세가 37.3%(전국 48.9%), 자가 22.4%(전국 23.4%), 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 20.8%(전국 13.6%)로 전세 비율은 낮지만 전반적으로 주거안정성이 전국에 비해 떨어짐.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이 혼인으로의 생애과정 이행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이소영 외, 2018)을 고려할 때, 전북은 결혼·출산을 위한 유인정책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경험은 20.4%(전국 29.6%)로 주로 안정적인 주거 유형인 자가에서 많았으며 대출금액도 5천만 원 이상이 50.0%로 절반 이상임. 신혼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경험은 1988년 이전에는 8.0%(전국 20% 미만)에 불과하였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청년의 근로소득으로는 주택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음

- 최근 혼인을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사회구조적 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결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4.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결혼정책 유형에 대해서는 ‘신혼집 마련’이 39.9%로 가장 높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21.8%), ‘청년고용안정화’(20.4%)의 순이었음
- 가사분담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0.4%가 육아 공정성에서는 36.5%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육아보다는 가사분담의 성 역할이 평등하지 않았음.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가사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반면,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함.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성 평등에 대한 계층별 인식차이가 반영되어 우리 사회 내 양성평등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결과로 보임
- 가사분담 및 양육은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9세 이하와 45~49세 연령에서의 세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 확산이 30대 이상에서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 취학 전(만 0세~6세) 자녀의 돌봄을 희망하는 시설로는 국공립(44.2%)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돌봄 유형은 민간시설(64.8%)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희망 돌봄 유형 대비 실제 돌봄 유형의 일치도에 있어 국공립시설은 28.6%에 불과하여 국공립시설 등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을 희망하는 시설로는 공공보다는 사설교육기관 선호도가 높음. 그러나 실제 돌봄 유형으로는 초등돌봄·방과후가 52.6%로 높고 사설교육기관은 43.1%에 불과하여 공공시설 이용이 높은 편임. 한편 희망돌봄 유형 대비 실제 돌봄유형의 일치도에 있어 초등돌봄·방과 후는 78.3%이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아(74.0%)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결혼과 첫째아 임신의 경우 80% 이상의 응답자가 결혼과 첫째아 출산 전, 둘째아 임신의 경우는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둘째아 출산 전에 일을 그만 두는 등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은 비교적 높은 편임. 결혼 후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은 29세 이하, 30~34세 이하의 젊은 연령대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는 결혼사유로 경력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함. 그러나 첫째아 임신한 이후 출산 전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률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으로 모두 육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건들이라는 점에서 미혼 응답자의 응답과 차이를 보임
- 현행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결혼·임신·출산·교육·결혼·자녀 양육·일·가정양립)을 대상으로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대비 전북의 비율이 낮은 항목으로는 결혼지원정책임. 결혼지원정책 중 신혼부부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도움정도와 중요도는 높은 반면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낮아 이에 대한 정책홍보와 수혜자 확대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함.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여성의 경력단절과 출산, 추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전북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과 도움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다. 2040세대의 저출산 의식 및 정책욕구 : 심층면접조사결과

- 본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당면과제나 정책욕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3개의 그룹 즉, 결혼 전(미혼), 결혼 후~첫째 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현재 임신 중인 부부 포함), 자녀출산 후 육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총 2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심층인터뷰 내용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결혼과 임신·출산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욕구, 자녀출산계획과 장애요인, 일·가정양립에 대한 실태와 어려움,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 평가, 삶의 질과 성 평등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주요결과 및 특성을 다음의 표로 요약하였음
- 3그룹의 공통점으로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규범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았으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3그룹 모두 동일하게 과거의 '남성 노동중심 생애과정'과 '여성의 가족중심 생애과정'의 이분화 된 도식을 해체하고 '일'중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음. 따라서 일과 돌봄을 함께하는 노동자와 돌봄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은 결혼과 출산, 추가출산을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경제적 비용부담 감소에 대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마련에 대한 정책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거론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삶의 질 추구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돌봄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4-2〉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특성 요약

생애단계	의식과 실태
결혼 전 청년	○ 결혼유보 및 부정적 태도(여성)남성 - 취업 및 고용불안/주택마련, 결혼비용부담 - 여성에게 경력단절, 포기과 희생 요구 ○ 여성의 태도와 인식변화 - 가족중심→노동중심의 생애과정 - 가족보다는 자신의 삶과 행복에 더 집중 ○ 청년세대의 미래불안: 일자리부족과 빈곤 ○ 신혼부부주택 지원 사업 자격제한 많아 활용도 떨어짐 - 소득수준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 필요 ○ 삶의 질과 성 평등 - 정시퇴근, 취미생활, 가족과의 여유시간 - 남성의 가사분담과 육아휴직 활성화
결혼 후 자녀출산 전	○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 부담 ○ 전세자금대출 상황, 부채상환 등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 및 출산시기 지연 ○ 신혼부부임대주택은 지역배당호수 소규모, 접근성부족, 스티그마 등의 문제 - 임대주택 정책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지원 선호 ○ 자녀출산 장애요인과 지원정책 - 소득불충분, 아이를 맡길 곳 없음,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경력단절이나 독박육아, 가사분담과 육아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지원, 대출이자 보전 ○ 삶의 질과 성 평등 -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의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자녀출산 후 육아기	○ 출산 및 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은 둘째 출산계획 유보나 불확신으로 이어져 ○ 비급여 출산의료비용 부담 - 산후조리원 비용, 제왕절개, 고위험임산부 입원 비용 ○ 제도개선 필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후 60일까지 소진해야하나, 출산초기는 부모 도움을 받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출산도우미 수요 큼 ○ 추가출산의 장애요인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아동학대 등) 믿고 맡길만한 시설과 서비스 부족, 직장에서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 낮은 급여대체수준 - 둘째 출산시기가 직장에서의 위치나 과업의 증가, 승진 등의 커리어 쌓는 시기와 맞물려 추가출산 결정 어려움. 승진으로 경제적 여유 확보되어야 둘째 출산 가능 ○ 국공립시설 부족, 대기 길어지는 문제, 긴급 돌봄 수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서비스 부재 ○ 대체인력 없는 육아휴직은 직장동료에게 '민폐'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사용 꺼려 - 자영업자, 특수직 고용, 비정규직 등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저출산의 원인 - 소득과 고용불안정, 개인의 삶에 더 집중하는 가치관의 변화, 육아비용 부담,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의 부족 ○ 삶의 질과 성 평등 - 남녀 동등한 육아참여와 돌봄 -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출산 의지 높아지므로 자녀와 함께 할 여유시간 확대

5

장

전라북도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Jeonbuk Institute

-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2. 세부 추진과제

제 5 장 전라북도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 5장에서는 본 연구의 3장 전라북도의 저출생 일반현황 및 양육환경 분석과 저출산 대응정책 특성과 문제점, 4장 전라북도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의 저출산 인식과 태도, 정책욕구 및 심층면접조사의 결과 내용 중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함의를 정리함
- 주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가.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북의 저출산 심화 가속화

- 2019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전북 여성 30.34세 남성 33.67세(전국 여30.59세, 남33.37세)로 전북의 여성초혼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남성은 높음. 전북의 조혼인율은 2018년 기준 남편은 8.9%, 아내는 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2019년 기준 15~49세에 해당하는 전북 가임기 여성은 2000년 대비 28.6% 감소(전국 12.2%)하였고 25~34세 주출산 연령 여성은 43.9%(전국 2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감소율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7명으로 전국 평균(0.92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2019년 출생아 수는 8,971명으로 2000년(출생아 수 25,173명) 대비 약 64.4% 감소하여 전국 감소율(52.7%)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북 인구구조의 특성과 출산 관련 인구수의 빠른 변화로 인하여 일부 연구에서 전북은 ‘출산감소 고위험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 구성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인구정책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2040세대 등 젊은 인구유입과 더불어 이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일자리 및 주택지원과 같은 체감도 높은 결혼·출산지원 정책 추진이 요구됨 **【세부추진과제: 1-1, 1-2, 1-3 제안】**

나. 고연령산모 증가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신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전북은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첫째아이의 평균 출산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고연령산모의 증가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임
 - 2019년 기준 전북의 출산연령은 32.37세로 2000년 출산연령인 28.48세보다 3.89세 증가함(동 기간 전국은 3.98세 증가)
 - 출산율이 가장 높은 25~29세의 천명 당 출생아 수는 2000년 160.2명에서 2019년 45.0명에 불과하여 1/3수준임. 반면 30~34세와 35세~39세의 출산율은 초혼연령 증가 영향으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 수준임
 -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은 첫째 아이의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2019년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전국 평균 4.47세, 전라북도 4.46세로 전북의 증가세가 전국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음
- 초혼연령 상승과 만혼, 이로 인한 고연령산모의 증가는 점점 일반화 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차원의 의료적 대응 이외에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결합되어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선제적으로 고위험임산부를 위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타 지역보다 초혼연령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고연령 산모도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북 현실을 반영하여 고위험 임신 부의 모성보호와 임신·출산 부담경감을 위한 시책추진이 필요함 **【세부추진과제: 2-3 제안】**

2-3 제안]

다. 모자보건인프라 축소 및 붕괴로 지역간·계층간 서비스 격차 발생

-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의 민간 시설은 전반적으로 수요량(출생아 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저출산 현상과 함께 전반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조경옥, 2019)
- 전라북도에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은 6개군(무주군, 부안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원주군)으로 이는 농어촌 산모의 건강문제 및 사회경제적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라북도는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산부인과 전문의 비중이 낮고 7번째로 소아과 전문의 비중이 낮음.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은 현재 15개소로 전국의 2.9%에 해당하고 있어 비교적 시설도 부족하지만 지역편중으로 인해 군 단위 산모들의 이용은 매우 제한적임
- 지역의 저출산 현상은 모자보건인프라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시설과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간 상당한 격차발생과 소득격차에 따른 이용형태에서도 위계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전북은 의료·보건인프라가 특히 취약한 군 단위 지역과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분배와 확충,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정책 사각지대 발생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등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세부추진과제: 2-1,2-2 제안】**

라. 2040세대의 생애이행단계별 특성과 정책욕구

■ 청년여성의 결혼유보와 ‘일’중심의 생애설계 경향

- 전북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의 비율이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전북 남녀의 긍정적 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남자 42.6%, 전북여자 22.6% vs 전국남자 50.5%, 전국여자 23.8%
-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수요도가 낮은 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2040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경제적 상황, 자녀양육, 노후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
- 전국 실태조사 결과, 청년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남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는 소득이 적어서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여자는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와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많았음
-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결혼은 곧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여성들은 결혼은 곧 여성에게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희생은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에 있어서 남성과의 동등한 역할분담이 아니라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청년여성은 결혼해서 가족을 위한 가사일, 육아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 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불안한 경제적 현실을 딛고 결혼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생애전망을 갖고 있었음
-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및 심층면접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취업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현재 상황은 남성에게도 결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지방은 특히 더욱 그러함) 특히 여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나 제3자가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점임

- 따라서 결혼과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성 평등한 관점에서의 청년세대를 위한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 성 평등한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세부추진과제: 1-1,4-2, 5-1 제언】**

■ 결혼·출산 선택의 지렛대 :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의 높은 수요

- 주택가격,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등 주거환경은 결혼, 출산, 추가출산 등 생애 이행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음. 본 연구의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결혼 당시 주택마련 유형과 관련해서 전북은 전세비율이 낮은 가운데(전북 37.3%, 전국 48.9%) 자가 비율은 낮고(전북 22.4%, 전국 23.4%) 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전북 20.8%, 전국 13.6%)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이 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경험은 20.4%(전국 29.6%)이고 대출경험은 1988년 이전에는 8.0%에(전국 20% 미만) 불과하였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청년의 근로소득으로는 주택금액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주택 구입 가격 및 전세금 폭등 현상은 결혼지연이나 포기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매우 중요함.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결과에서도 결혼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혼집 마련’(전북남성 41.7%, 전국남성 33.7%)으로 나타남

- 현행 지자체 차원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아 정작 주거지원 정책이 무늬만 정책이라는 비판이 심층면접에서 다수 제기되었음
-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지원 정책은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선도 매우 낮아(부부합산 5천만~8천만) 현실적이지 않으며, 공공임대 주택은 주택규모가 협소하여(45㎡~60㎡) 자녀와 살 집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 그러나 이마저의 청년주거지원 정책도 국가사업을 제외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몇몇 시군으로 제한적임. 현재 남원(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과 정읍(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김제(청년주택수당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등이 해당 지역임
- 현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소득수준 및 주거기간 등의 자격기준 제한으로 신청대상자 수가 예측치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 또한 사업주체도 시군 자체사업보다는 전라북도 광역으로 확대하여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출발선에 해당하는 주거만큼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준다는 의지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세부추진과제: 1-2 제안】**

■ 다양한 돌봄 수요와 성 평등한 육아와 돌봄 문화의 미흡

-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 결과,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으로 모두 육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임.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에 대한 요구도는

6)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서울시는 2019년 10월에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핵심내용은 금융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임.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됨(조성호 외, 2019)

전국 평균(전북 20.3%, 전국 15.3%)보다 높았는데 이는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이나, 아동 수 대비 보육교사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보육에 대한 불안이 컸음

- 한편, 취학 전(만 0세~6세) 자녀의 돌봄을 희망하는 시설로는 국공립(44.2%)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돌봄 유형은 민간시설(64.8%)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희망 돌봄 유형 대비 실제 돌봄 유형의 일치도에 있어 국공립시설은 28.6%에 불과하여 국공립시설 등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보육시설 인프라와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크지만,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부족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이나 야간근무, 부모의 질병, 어린이 집 휴원, 초등 저학년 돌봄공백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틈새수요가 발생하지만 대응 서비스가 없어 결국은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 보육시설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문제와 더불어 여성에게 여전히 부과되어 있는 양육과 독바육아와 같은 성 불평등한 돌봄 문화는 여성에게 출산을 기피하거나 추가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음
- 심층면접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남성은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남성의 육아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과 여성의 자기계발 필요성에 동의 정도가 높기 때문임.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아지는 시기에 따른 업무량의 과다, 추가출산을 위해서는 급여나 승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여자에게 육아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회구조 탓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결혼 후 자녀육아기에 해당하는 계층이 출산이나 추가출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화, 장시간의 근로개선 등 성 평등한 돌봄문화 조성이 정착·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함. 아울러 일·가정양립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틈새 돌봄 정책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세부**

추진과제: 4-1, 4-2 제언】

마. 광역과 기초지자체 사업 통합으로 정책체감도와 효과 제고 필요

- 전라북도 저출산 지원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대응정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사업이 지자체 별로 사업명을 달리하거나 정책수혜 조건이나 사업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편임(예로서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 출산축하용품지원 등)
- 임신·출산지원 사업은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책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임신 전→임신→출산 전→출산 후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정책체감도도 높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각 시군에서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광역화(통합관리)하여 예산과 지원 대상의 규모를 체계화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른 서비스를 표준화함으로써 정책인지도와 만족도,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부추진과제: 3-1, 3-2 제언】

바. 2040세대의 성 평등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제고: 인구교육 내실화

- 본 연구의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일·결혼·출산·가족을 둘러싼 젠더측면의 변화로 보임. 2040세대들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을 함께하는 노동자이자 돌봄자(송다영, 2019)이지만 전반적인 사회인식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문화지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30대는 성 평등한 육아와 돌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직장문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이 낮음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승진 등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너그럽지 않은 시선 등이 그들의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돌봄공백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추가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20대들은 30대들이 느끼는 직장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상황을 목도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희망보다는 희생과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유보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생각하는 성 평등과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묻는 심층면접결과에서도 잘 나타났음. 즉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 취미생활,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의 확대, 남성의 가사분담과 육아휴직 활성화, 남녀의 동등한 육아참여와 돌봄 등이 이들이 생각하는 성 평등과 삶의 질에 해당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서도 남녀 간, 계층 간의 인식차이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직장, 가족, 지역사회의 인식격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성별·계층별·지역별 인식의 격차를 완화하고 성 평등한 결혼과 돌봄 문화를 조성을 위해서는 성인 대상의 사회인구교육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 성인 대상의 사회인구교육은 기존의 출산의무를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구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인구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조화롭고 건강한 부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이해와 형성을 목표(양정선, 2011)로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아울러 사회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됨 **【세부추진**

과제: 5-1 제안]

사. 생애과업 이행 관점 결여와 청년 생애주기의 정책통합 필요

- 오늘날 청년을 일컫는 ‘N포 세대’는 청년취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연애포기, 결혼포기, 주택포기, 아이포기, 꿈 포기 등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임. 청년이 결혼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의 많은 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마련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요인임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는 2040세대를 결혼 전(미혼), 결혼 후~첫째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현재 임신 중인 부부 포함), 자녀출산 후 양육기의 3그룹으로 나누어 생애주기별로 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욕구를 알아봄
- 심층면접결과, 청년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졸업단계에서부터 취업정보와 상담, 취업연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전국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신혼부부가 가족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가 1순위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청년의 생애주기는 취업→결혼(주거마련 부담)→신혼→가족계획(자가주택 소유여부)→출산→추가출산(주택규모 및 돌봄여건)으로 이 과정에서 취업과 주택마련이 동전의 양면 같이 움직이고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규모나 점유형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정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청년 및 신혼부부 정책은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조성호 외 2019). 본 연구에서도 저출산 정책의 분절로 인한 정책 체감도와 효과가 미진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음

○ 또한 미혼 청년이 결혼이행으로 유배우 청년이 되고, 육아기의 부모가 되지만
현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생애과업 이행과 저출산 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
아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과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생
애주기 관점을 도입하고 각 생애에 따른 과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통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
생애주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추후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각 과업단계에서
전북청년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실태를 점검하는 후속연구(가제: 저출산 극
복을 위한 청년생애주기 과업 실태와 대응방안)가 필요함



2. 세부 추진과제

- 주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①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넋지적 정책추진 ②임산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③저출산 사업 통합관리로 정책체 감도 향상 ④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⑤인식개선 등 5개 방항 으로 구분함
- 전라북도 2040세대의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책방항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1〉 전라북도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정책방항 및 세부사업

정책방항	세부사업	기존 확대	신규 사업
① 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넋지적 정책추진	전북형 청년친화강소 기업 운영 및 지원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청춘남녀 자원봉사단 운영		✓
② 임신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사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도개선(중앙)	✓	
	고위험 임신부의 가사돌봄 지원		✓
③ 저출산사업 통합관리로 정책체감도 향상	임신축하 패키지 사업		✓
	신생아환영꾸러미[출산패키지]사업		✓
④ 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긴급 육아돌봄 지원 : 육아지원 119		✓
	육아대리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⑤ 인식개선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의 개정	✓	

1) 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넛지적 정책

- 넛지(Nudge)의 사전적 의미는 ‘팔꿈치로 쿡 찌르다’로, 정책설계에서 넛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정책시행자(정부)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책대상자(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임(권남호, 2018)
-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유보적 태도는 취업과 고용 등 사회경제적 불안과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나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따라서 과거처럼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거나 공포 마케팅을 조성하기보다는 개개인이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청년층의 실업, 빈곤, 비싼 집값 등 최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려는 청년들이 불안이나 걱정 없이 결혼을 선택하고 출산을 결정하도록 행동변화를 유도(넛지적 정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함

1-1

전북형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 및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은 일자리로 인한 20대 청년여성인구 유출이 크고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 폭은 전국에서 가장 빨라 가까운 장래에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전북의 출산 및 인구정책의 핵심과 주요 타깃은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 지방대학 출신 청년여성층의 지역 취업 경향 강화는 최근의 인구이동 패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고영우 외, 2018). 결혼 뿐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도 취업은 중요한 조건이지만, 청년들은 지역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 청년여성이 지역 중소기업 취업에 부정적이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중심의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이 취약한 직장문화 때문으로 청년여성은 취업준비와 입직단계에서부터 일·가정양립을 직업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조경옥, 2020)
- 이러한 청년여성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6년부터 「청년·여성 취업연계강화」의 일환으로 청년층 희망분야(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를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음(조경옥, 2020). 2020년 기준, 전국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280개소로 전북은 17개소에 불과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임
- 17개 전북청년친화강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13개소, 도소매업 2개소, 정보통신업 1개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개소로 대부분 남성 위주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청년강소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부족하거나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의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업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확대·발굴 하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일·생활균형 부분을 추가하여 ‘전북형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함

□ 사업내용

- 현재 17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임금BEST 기업은 12개소, 일·생활균형BEST기업 11개소, 고용안정BEST 기업은 8개소임. 이 가운데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6개소임
- 현행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선정기준은 ①일·삶의 균형(근무의 유연성) ②복지공간 ③자기학습(교육 및 문화생활지원정도)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① 일·삶의 균형 지표 가운데 특별휴가 지원 항목은 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일·가정양립을 반영한 지표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현행 특별휴가 지원 항목에 ①보육휴가(연간 5일) ②5세 이하 육아시간(1일 2시간) ③자녀돌봄휴가(2일, 2자녀 이상 3일) ④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사용’ 지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해당 특별휴가는 ‘배려풀 전북 10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실천과제 참여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 중 남성이 50% 이상 사용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와 ‘경영자금 지원’ 등의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함
- 〈청년고용실적〉 기준은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청년여성 고용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를 상회하고 남성 대비 1/2을 초과 할 경우 경영자금 지원을 추가적으로 주도록 함

1-2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에 대한 비용부담은 출산을 유보하거나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등 출산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혼자 대상의 전국조사 결과에서도 결혼지원 정책으로는 ‘신혼집 마련’(전국 33.7%, 전북 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기혼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결혼당시 주택마련 유형으로는 전세가 가장 많지만(전국 48.9%, 전북 37.3%) 전북은 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 등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아(전국 13.6%, 전북 20.8%)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현재 국가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역배당 호수가 소규모이고, 접근성 부족, 임대주택에 대한 스티그마 등으로 임대주택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도 자격조건에 있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거나 소득기준을 기준을 너무 낮게(부부합산 연소득 5천~7천만원) 책정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대상자가 매우 한정적임

- 따라서 정책이용 대상자의 자격조건 완화를 통해 청년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현행 일부 시군(남원시, 정읍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전라북도로 광역화하여 주택마련에 대한 전북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추진현황 :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

〈표 5-2〉 타 자치단체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원대상	•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만 19 ~ 39세 무주택 미혼청년
대상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본인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직장인 - 본인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1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5,000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8% 범위내)
지원금리	• 연 2.8%	• 연 2.9%
대출기간	• 기본 2년 • 대출연장시 최장 10년	• 기본 2년 • 대출연장시 최장 6년
취급은행	• 부산은행	• 하나은행

	경상남도	충청남도
지원대상	•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요건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직장인 - 본인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직장인 - 본인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9,000만원(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최대 5,000만원(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지원금리	• 연 3.0%	• 연 3.0%
대출기간	• 기본 2년 • 대출연장시 최장 6년	• 기본 2년 • 대출연장가능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 농협은행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라북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대상 : 전라북도 거주(예정)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주택임차보증금대출 추천 및 이자 3.0% 지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최대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타 지자체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7천만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지원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전라북도 사례 : 정읍시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혼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는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13.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남성 19.1%, 여성 9.5%)
- 미혼남녀의 결혼기피와 만혼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청춘남녀에게 만남의 기회제공을 통해 결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조기결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과 교류 행사를 추진 중임
- 2014년부터 ‘땅끝 솔로탈출 여행’을 추진해 온 전남 해남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춘남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전 서구와 경기 구리시 경우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남녀의 만남을 추진하였음
- 결혼은 당연히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관 주도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청춘남녀 만남행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비합리적이고 행사성 위주의 사업으로 부정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경기도 이천시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미혼남녀의 만남을 접목한 형태의 청춘남녀 만남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청춘 with 봉사단”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혼남녀들에게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만혼·비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임
- 장시간의 근로문화로 인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전라북도 청춘남녀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결혼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 제고로 결혼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추진

□ 추진현황 :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

 2019년 이천시 청춘with 봉사단 모집 모집대상 : 만45세 이하 미혼 남녀 발행기간 : 2019. 4월~12월(매월 첫번째 주 토요일) 주요내용 : 자원봉사 기본교육, 복지시설 방문봉사 및 재능기부 모집기간 : 2019. 2. 24(화)~3. 22(금) 문 의 : 이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645-3047)	 경인일보
경기도 이천 청춘with 봉사단모집 공고	2019 이천시 청년with 봉사단 활동

〈그림 5-1〉 타 자치단체 청춘남녀 자원봉사단 운영 관련 유사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전라북도 청춘남녀 자원봉사단 운영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대상 : 전라북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 사업내용 : 재능기부를 통한 청춘남녀 소통과 교류

2) 임신·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권 보호

- 자녀를 출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정적으로 부모기 전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저출산 현상은 모자보건인프라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시설과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져 지역 간 계층 간 위계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보건인프라가 특히 취약한 군 단위 지역과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서비스의 분배와 확충이 필요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첫째 자녀에 대한 성공적인 산후조리 경험은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지점으로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안전한 의료 돌봄을 원하는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은 보편화 되어 있음
- 임신·출산·산후조리 비용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이 가장 높고 목돈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특성 때문에 산모들의 부담이 큰 편임
- 현재 국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파견)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문을 기피하는 산모들이 많아 정책 활용률이 높지 않은 편임
 - 남원시의 경우 2019년 이용률이 60% 정도임
 - 임실군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신청자가 적고 효과성이 낮아 산모들의 요구도가 높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해당 사업은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아 2020년 상반기 집계 결과, 목표율의 61.5%를 집행함
- 따라서 산모들의 이용이 보편화 된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산모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추진현황 : 타 자치단체 사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지만 민관협약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수범사례가 있음. 서울 금천구의 ‘민관이 함께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이용비의 50만원을 산후조리원에서 기부형식으로 직접 감면해 줌

- 전남 여수시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20%를 지원하며 정읍시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의 산모로 출산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20% 지원 (도 25%, 시군 25%, 산후조리원 50%)
*참고: 예산수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대상의 둘째아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운영방법 : 임신부 배려 및 출산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서울 금천구 사례처럼 산후조리원이 기부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중앙)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 이용기간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산모의 경험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실제 출산 직후에는 2주 정도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출산가정으로 복귀 후 일정 기간 친정 부모나 시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기간인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소진이 용이하지 않음. 또한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산모의 건강상태나 주변 가족의 지지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욕구가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산모의 현실 가능한 이용기간과 희망 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60일 이내 사용 기간을 90일 이내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서비스기간 현행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90일 이내로 기간 연장

2-3

고위험 임신부의 가사돌봄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신부가 증가하고 있음. 전북의 초혼연령 상승과 모(母)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변화가 타 지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여성초혼연령 변화) 2000년 25.72세 → 2010년 27.19세 → 2018년 30.04세
 -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2000년 26.89세→2010년 29.18세→2018년 31.15세
-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지원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신부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임
-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고연령 산모 증가에 따른 고위험 산모의 모성보호와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추진현황 : 타 자치단체 사례

○ 서울시는 2019년 최초로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함. 서울시 중구는 고위험 임신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동구는 고위험 임신부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임신부, 직장인 임신부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음. 대상자는 소득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시간은 중구와 성동구가 다소 다름(중구 : 1일 4시간 기준 최대 10일 지원, 성동구: 1일 4시간 4회 제공)

○ 부산은 북구에서 절대안정이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로 진단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최대 5일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명 : 고위험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와 연계
- 사업내용 : 가사도우미 1일 4시간 기준 최대 10일 지원

 안녕히 출산까지 함께하는 건강한 자립과 위드미 서울시 스타트업·포용도시영향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성동구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안내 ▶ 지원 기간 : 2020년 6월 ~ 12월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① 고위험 임신부, ② 다태아 임신부, ③ 장애인 임신부 ④ 다자녀가정(첫째아 이상) 임신부, ⑤ 직장인 임신부 ▶ 지원 내용 : 가정 내 가사관리사 파견(1일 4시간, 4회 제공) ▶ 제공서비스 : 청소, 세탁, 가사서비스 등 ※ 반려동물 돌봄, 아이돌봄 제외 ▶ 이용료 : 무료(소득제한 없음)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료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 문의처 : 동 주민센터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2286-5434) 성동구 여성가족과	 10개월의 양육방...중구에서 지켜드립니다. 서울시 최초! 건강한 임신·출산 맞춤형 중구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 지원 기간 : 2019년 5월부터 ▶ 지원 대상 : 중구 거주 1년 이상 고위험 임신부 (소득무관) * 임신 30주 후(임신 30주, 고위험, 17% 후 임산부)를 위하여 30주 이전까지 신청과 함께 소견서 제출 ▶ 지원 내용 : 가정 내 가사서비스를 제공 * 출산 전후 24시간 이내 출산 예정일 기준 * 주 2회 정도 가사 서비스(가정청소, 세탁 등) 제공 ▶ 제공서비스 : 가사서비스, 식탁청소서비스 * 반려동물, 세탁, 청소, 세탁, 가사서비스 등 * 임신 30주 후(임신 30주, 고위험, 17% 후 임산부)를 위하여 30주 이전까지 신청과 함께 소견서 제출 ▶ 이용료 : 무료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 산모수첩 등 * 신청처 : 동 주민센터, 보건소 * 문의처 : 중구 여성가족과, 보건소 ☎ 2286-5434
서울시 성동구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안내문	서울시 중구 고위험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안내문

〈그림 5-2〉 타 자치단체 임신부 가사돌봄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3) 저출산 사업 통합관리로 정책체감도 향상

- 전라북도의 저출산 정책을 분석한 본 보고서의 3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출산 대응정책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임신·출산 지원 사업임. 그러나 사업 건수 대비 수혜자의 만족도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음
- 이는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시간 및 장소(지역)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집행'(노화준, 2001; 강영주·최지민, 2018)과 저예산의 단발적 사업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체감이 낮기 때문임
-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시군의 임신·출산 지원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간 순으로 배치하여 순차적(임신→출산)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3-1

임신축하 패키지 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전역이 출산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지역사회가 환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임신부를 적극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시책이 필수적임
-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의 복합적인 수요와 니드를 반영하여 현재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발굴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함

□ 사업내용

■ 임신부 우대금리 예·적금지원

- 사업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신부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내용 : 임신부 예·적금 상품가입 시 우대금리(최대 1.5%)지원
- 운영방법 : 임신부 배려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도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타 지자체 사례 :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2019년 신규사업)

구분	정기예금	정기적금	환전 수수료
NH농협은행 당진권내 6개소	(6개월)기본금리+우대 0.6% (1년제) 기본금리+우대 0.8% ※ 5천만원 한도	(6개월)기본금리+ 우대0.65% (1년제) 기본금리+ 0.75% ※ 월 납부액 50만원 한도	80% 할인 주요통화 달러(USD)/엔(JPY)유로 (EUR)
지역농협		(1년) 기본금리+아이들돈독금 1.5%	

경남, 출시 한 달 만에 525건 가입

임산부 우대내용(충남, 당진시)

〈그림 5-3〉 타 자치단체 임산부 우대금리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 임산부 구강검진 무료쿠폰

- 사업대상 : 임신 중반기부터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내용 : 구강검진 무료쿠폰 제공(2회)
- 운영방법 :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치과의사회 연계 업무협약 체결, 지정의원 방문
- 타 지자체 사례 : 대구 수성구, 서울 금천구

■ 태교책 꾸러미 도서대출

- 사업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1세 미만)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내용 : 태교책 꾸러미 도서대출 또는 접근성이 용이한 동네의 '작은도서관'에 영유아·임산부 전용실 운영
- 운영방법 :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군 단위에서는 도서택배서비스 추진
전라북도 및 의회 도서관의 주말 시간 개방 등
- 타 지자체 사례 : 대전 서구(도서관 영유아, 임산부 전용실 운영), 강원도 원주(임산부도서택배서비스), 대구 남구(반딧불 건강도서관)

■ 임신부 우대 할인 음식점 지정 및 운영

- 사업대상 : 전라북도 소재 중대형 음식점 대상
- 사업수혜자 :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는 임신부(산모수첩 소지 임신부)
- 사업내용 : 음식요금의 10% 할인 적용
- 타 지자체 사례 : 대구 동구(임산부 우대음식점), 천안시(임산부 우대 store동참 확산 릴레이), 전남 보성(임산부 할인 음식점 지정, 운영)
- 참고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출산친화기업으로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달아주고 인구의 날(또는 임신부의 날)에 시상 하도록 함

3-2

신생아 환영꾸러미 (출산패키지) 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생후 12개월까지 아기에게 필요한 육아용품 세트를 제공하여 임신출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한 여성들을 지역사회에서 축하해줌으로써 임신부가 자긍심을 갖도록 함
- 본 사업은 이미 많은 타 지자체와 도내 일부 시군에서 일명 ‘마더박스’나 ‘출산축하용품’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용품이 임신부의 요구나 취향, 선호에 부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각 시군에 따라 지원예산, 지급방식(현금, 현물, 지역화폐 사용)에 차이가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함

〈표 5-3〉 도내 시군별 출산패키지 사업

지역	지원내용	지역	지원내용
김제	3종세트(수유+건강+외출세트)/ 현물15만원+지역상품권10만 총25만원)	완주	출산축하용품 2세트 중 택일/ 후원품 (소고기, 미역)
남원	유모차구입비보조 10만원(상품권)	정읍	넷째아 이상 400만원(3년간 4회분할)
고창	신생아출산 캐리어지원(1인 50만원)	장수	출산축하용품 8종 지급(20만원상당)
임실	3종세트 용품지급(15만원)	부안	마더박스 육아용품 8종
무주	출산축하용품 무료대여	익산	출산육아용품 구입지원(첫째, 둘째10만원)

- 이에 본 사업은 각 시군의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선택 기회를 다양화·현실화하여 수요자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신생아 환영꾸러미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구성원의 탄생을 모두가 기뻐하고 출생을 축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출산친화적 지역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현황 : 타 자치단체 사례

- 출산패키지 사업은 핀란드에서 1937년부터 '머터니티 패키지' (Maternity Package)라는 사업명으로 임신한 저소득층 여성에게 필요한 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던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임신여성에게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출산축하용품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지원내용과 지원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용품이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아 체감도가 낮음.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민이 제안하여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일명 마더박스)'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유세트, 건강세트, 외출세트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음

	아기수유세트 아기수유에 필요한 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백, 수유시트, 젖병솔 세트, 젖병 세제 및 유아용 실리콘 젖솔  아기건강세트 아기건강을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 땀물 흡인기, 온도도계, 영문도계, 신생아 손톱가위, 유아연필  아기외출세트 아기외출에 필요한 아기띠, 다림도기차이배트, 발바닥세손수건, 물라워치아발막기 및 애크백 
핀란드의 머터니티패키지 (maternity package)	서울시 마더박스 3종

〈그림 5-4〉 타 자치단체 출산패키지 관련 유사사업 현황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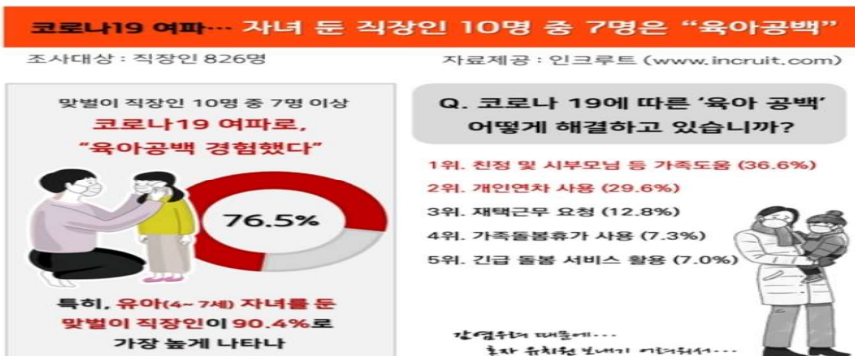
- 사업명 : 신생아 환영꾸러미(출산패키지)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이며 부모의 주민등록지와 대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전북지역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도록 함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내용 : ① 아기마중세트 + ② 산모건강세트 혼합 지원
 - 구성 : ① 아기마중 세트 : 내의, 수면조끼, 방수요, 체온계, 젖병, 모빌, 백일사진촬영권, 이유식의자, 이불 등
 - ② 산모건강 세트 : 산모미역, 소고기, 지역특산 친환경농산물 등
 - 추가선물 : ③ 출산양육관련 가이드북 : 전라북도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소개홍보 팸플릿
 - ④ 아이사랑 통장 개설(출생축하통장 발급지원) : 출생아 명의 통장 개설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연계, 적립하여 자녀의 교육비나 육아비로 활용할 수 있는 씨드머니 통장 개설을 지원 함(1인당 지원액 3~5만원)
- 운영방법 : 도비 10만원 + 지자체 20만원 = 총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적극 활용

4) 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 맞벌이 증가에 따른 주말, 야간, 자녀의 방학,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권의 돌봄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틈새돌봄 수요에 대응
-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치부하여 독박육아 등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스트레스를 지양하고 성 평등한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대디를 지원하도록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맞벌이 특성 상 다양한 돌봄수요(주말, 야간, 출퇴근 시간대, 병아보육 등)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가 부재하고 취약계층 타깃의 소득기준별 지원으로 일반인들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임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지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과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맞벌이들의 긴급한 상황이나 틈새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육아 돌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맞벌이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이 육아공백을 경험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 가운데 하나로 '긴급 육아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임
- 현행 정부차원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시설(어린이집) 폐쇄, 장기 휴원 등 보육체계 불안정으로 대안적 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틈새차원의 긴급 육아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이 요구됨



〈그림 5-5〉 코로나 19로 인한 육아공백

□ 추진현황 : 타 자치단체 사례

〈표 5-4〉 타 자치단체 긴급 육아돌봄지원 관련 유사사업 현황

수호천사 긴급출동 서비스(천안시)
▶목적 : 맞벌이 부부의 틈새 돌봄을 위한 아이돌보미 파견 ▶내용 :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집안의 애사, 어린이집 휴원, 주 양육자의 질병, 3자녀 이상, 직장맘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한 달 최대 10시간까지 전액 시비지원을 통해 무료로 아이돌보미 수호천사 파견
포항시 원더마마 서비스 사업(포항시)
▶목적 : 맞벌이 부부의 틈새 돌봄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맘, 직장대디 또는 일반임산부 대상 아이의 병원픽업 서비스(진료 시간 대기, 진료후 안심귀가 등), 하교길 동행, 혼자 있는 아이 SOS요청 시 보호자 도착하기 전 일시돌봄, 방학 중 점심챙기기, 준비물 챙기기 등을 보호자 대신 아동보호사가 대행 / 1시간 5,000원(기본2시간/1일 최대 4시간 이용,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출처 : 중도일보(2018.2.28), “천안시, 긴급돌봄 필요한 가정에 ‘수호천사 긴급출동’”

경북일보(2017.8.6.), “포항시, ‘원더마마 서비스’, 직장맘 든든한 지원군”

자료 : 김수연(2018), 경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조성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재인용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취학 전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 맘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내용 - 평일 07:00 ~ 19:00, 1일 최대 4시간 이용
(4시간 이후는 전액 수익자 부담)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집안의 애사, 어린이집 휴원, 주 양육자의 질병, 3자녀 이상, 직장맘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출근 전과 퇴근 전 보호자를 대신하여 등원과 하교길 동행, 보호자 도착 전 임시 돌봄, 방학이나 비상시 점심 챙겨주기, 학교 준비물 챙기기 등
- 운영방법 - 사업비 : 도 30%, 시군 40%, 자부담 30%
 - 긴급육아돌봄 아동보호사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차원에서 주민자제 센터-모집, 여성일자리센터-교육 및 양성을 통해 각 마을, 아파트, 동네 단위로 배치하도록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젊은 아빠를 중심으로 육아, 자녀교육 등에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부도 이러한 아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중에 있음
- 여성의 독박육아, 가사부담 해소를 위해 아빠들의 육아참여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일회적이고 단발성 위주의 행사에 불과하여 생활 속에 아빠의 역할과 성 평등한 육아를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2017년부터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빠와 자녀를 위한 ‘부자유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여러 체험을 하면서 대화와 소통, 공감, 존중 등 정서적 교류와 아빠의 가정 내 역할을 강화시키는 등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음
 -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작 함께 하더라도 자녀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함.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자유친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장기적으로 아빠가 참여하고 함께 키우는 육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됨
- 아빠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행사, 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되 신생아→유아→아동→청소년기 등 생애단계별로 아빠의 육아와 교육을 서포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추진현황 : 타 자치단체 사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아빠들에게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놀아 줄 수 있는 아버지,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하고 의견을 존중해주는 아버지로서 가정 내 역할을 강화하고 정서적 교류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자유친프로그램’을 마련함(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7년 보도자료)

- 프로그램에는 건축 및 골목답사부터, 아빠랑 우드락, 공방, 요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최근의 자녀의 관심과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그림 5-6〉 타 자치단체 남성의 육아참여프로그램 관련 유사사업 현황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그의 부모
- 사업시기 : 2021. 1~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내용 : 생애단계별 아빠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운영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운영

5) 인식개선

- 결혼·출산·가족형성에 대해 성별·계층별·지역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 평등한 결혼과 출산, 돌봄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 대상의 사회인구교육 확산 필요
- 인구문제와 고령사회를 인구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인구교육 진흥 조례 필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사회 현안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체감이나 인식은 낮은 편임
 -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전북 미혼 51.3%, 기혼 62.7%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음
- 인구문제는 인구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장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윤인경, 2015)됨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인구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 마련을 위한 인구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규모는 인구정책 총 예산의 0.01%(김태현, 2019)에 불과하며 연구 및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연구,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 부족, 각급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상황임.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인구교육 확대와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임
 - 인구교육과 관련된 법적 조례로는 경기도의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조례」 정도가 있음
- 전라북도는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를 2019.2월에 제정함. 전북의 조례는 “제4장 인구교육”의 15조와 16조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구교육 연구 및 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음(경기도 인구교육 조례 제5조2항 참고)
-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인구교육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성인 대상의 사회인구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별도 조례가 없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의 인구정책 조례에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하여 인구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추진현황 : 타 자치단체 사례

〈표 5-5〉 타 자치단체와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비교

경기도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제5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인구교육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인구정책 육성·지원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u>인구교육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u> 3. <u>인구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4.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u>인구정책 등에 관한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u> 6.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 실시)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 있어 가족에 대한 친화적 가치관 변화를 목적으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중략) ③ 도지사는 인구교육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 2. 출산장려 캠페인 3.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4.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인구정책 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 사업시기 : 2020. 9. 조례 검토 및 일부개정 추진
- 사업내용
 - 인구정책 조례 제4장 인구교육 제15조, 16조 조항 이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일부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 인구교육 연구 및 실태조사
 -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과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인구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민지, 박영주(2019), 대구지역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 김영미(2016),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경제와 사회, 112
- _____(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제59호
- 김명희(2017) 한국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탐색,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0
- 김소영(2015), 2015년 제 95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양성평등 패러다임에서 본 가족 그리고 남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소영·선보영(2017), 2040세대 비혼집단의 일과 가족, 개인생활의 조화 현황과 욕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자료
-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2010),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훈, 이소연, 이윤경, 이지혜, 김세진, 우해봉, 이상림(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훈, 이지혜(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2019), 인구정책으로서의 인구교육: 과제와 대안, 2019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2분과회의 자료
- 배은경(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3(2)
- 송다영(2019),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저출산기본계획 비전, 방향 및 정책 분석틀, 제21차 저출산·고령화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송유미(2017), “저출산 핵심은 엄마의 삶 문제”, 영남일보, 2017. 12.28
- 양정선(2011), 인구오름교육교재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우해봉(2020),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279호, 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장인수(2017), 출산에 대한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의 영향, 한국인구학 33(1)

유홍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남녀의 결혼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윤인경(2015),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연구, 보건복지부

윤자영(2012), 노동시장 통합과 결혼이행, 한국인구학, 33(2)

이삼식(2017), 결혼·출산 및 양육친화적 사회구축방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림(2019), 미혼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통권 268호, 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순미(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과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3), 67-106.

이윤경(2019),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267호, 보건사회연구원

이철희(2018),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261호,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로드맵, 보도자료(2018. 12.7)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한국인구학 제41권 제3호

정재훈(2018),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격과 전망: 성평등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보건복지포럼, 통권 261호, 보건사회연구원

조경욱(2019),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조경욱(2020), 전라북도 청년여성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전북연구원

조성호·변수정·김문길·김지만(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인희·홍승아(2018), 저출산과 2040세대의 가족, 일, 생활에 대한 의식:한일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젠더리뷰(2018. 겨울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필선·민인식(2015), 청년층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홍승아·최인희·김난주·김지미(2018),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정책연구 2020-16

전북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방안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9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00-1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